

202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2025. 7.



kipf

최종보고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2025. 7.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군』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 연구 진 〉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주관기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참여연구자: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조하영 박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김채현 박사과정생(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이세호 학사과정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목 차

I. 서론	1
II. 사업군의 개요	2
1. 사업군의 개요	2
가. 도입 배경	2
나. 근거 법령	3
2. 세부사업별 개요	4
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4
나. 국가우수장학금	10
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17
3. 평가 필요성	20
III. 사업군에 대한 평가 개요	22
1.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22
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23
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3
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24
2. 평가방법 및 식별전략	25
IV. 주요국가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사례	27
1. OECD 회원국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개요	27
가. 고등교육 수준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등록금 현황	27
나. 사립대학 재학생 비중과 기관유형별·교육수준별 등록금 수준	28
다. 지난 10년간 대학생 수 및 등록금 변화	30
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32

마. 종합 정리: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별 분류	34
2. 미국	35
가. 연방정부 고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 4”	35
나.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37
다. 연방 펠 그랜트(Pell Grant)	38
라. 펠 그랜트(Pell Grant)의 주요 변화	42
3. 일본	45
가. 대학 등록금 추이	45
나. 학자금 지원	48
다. 최근 동향	54
4. 호주	56
가.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개요	56
나. 일반대학 전공 계열별 평균 등록금 현황	59
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	61
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주요 내용	65
마.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최근 변화 동향	66
5. 영국	69
가. 고등교육 교수-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변화 개요	69
나.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주요 내용	71
6. 정책적 시사점	75
V. 국가장학금 사업군 효과성 분석	78
1. 분석 자료	78
2. 등록금 부담 경감	79
3. 대출 감소	88
가. 장학재단 DB 분석	88
나. 한국장학패널 분석	98
4. 대학 교육의 기회 형평성 제고	100

5. 노동시장 성과 개선	102
가. 분석 방법	102
나. 기초통계	104
다. 분석 결과	106
6. 사회이동성 개선	108
가. 분석 방법	108
나. 분석 결과	109
7. 소결	112
VI. 국가장학금 사업군 세부사업 검토	114
1. 국가우수장학금	114
가. 대통령과학장학금	114
나.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17
다. 인문100년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우수장학금)	119
라.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23
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126
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30
사.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132
2. 취업연계장학금	141
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141
나. 국가근로장학사업	145
VII. 국가장학금 사업군 지속가능성 검토	151
1. 국가장학금 I 유형 재정 추계	151
가. 대학 입학자 수 추계	151
나. 국가장학금 추계를 위한 가정과 기초자료 계산	156
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법 변화 시 재정추계(소득평가액 기준)	173
3. 하후상박형으로 제도 설계 변화 시 재정추계	180

VIII. 정책제언	186
1. 국가장학금	186
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방식	186
나. 소득인정액 조정	187
2. 근로장학금	189
3. 우수장학금	190
가.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190
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191
다. 국가우수장학금	191
참고문헌	195

표 목차

〈표 II-1〉 국가장학금 도입 당시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3
〈표 II-2〉 국가장학금 관련 법령상 근거 및 조항	3
〈표 II-3〉 국가장학금 사업군 예산	4
〈표 II-4〉 맞춤형 국가장학금 3개년 예산	5
〈표 II-5〉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5
〈표 II-6〉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구분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과 지원금액	6
〈표 II-7〉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개요	6
〈표 II-8〉 2024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8
〈표 II-9〉 2025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안	9
〈표 II-10〉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9
〈표 II-11〉 국가우수장학금 주요 내용 종합 정리	11
〈표 II-12〉 국가우수장학금 유형별 누적 지원 현황	13
〈표 II-13〉 국가우수장학금(종료사업) 유형별 누적 지원 현황(2005~2023년)	14
〈표 II-14〉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의 개요	17
〈표 II-15〉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지원 내용	18
〈표 II-16〉 신규 심사 신청 절차	18
〈표 II-17〉 계속 지원 심사 절차	19
〈표 II-18〉 드림장학금 선발 현황	19
〈표 II-19〉 드림장학금 사업 예산	19
〈표 III-1〉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의 세부사업별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	23
〈표 III-2〉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논리모형	23
〈표 III-3〉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논리모형	24
〈표 III-4〉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논리모형	25

〈표 N-1〉 대학등록금 수준에 의한 국가 분류(국공립대학 내국인 학부생, 2022~2023학년도) ..	29
〈표 N-2〉 2012~2013학년도~2022~2023학년도 학생 수 및 등록금 변동	31
〈표 N-3〉 2022~2023학년도 국가별 학자금 지원 현황	32
〈표 N-4〉 고등교육을 위한 학생(및 그 가족)에 대한 간접 보조금(2022~2023학년도)	34
〈표 N-5〉 대학등록금 수준에 의한 국가 분류(국공립대학 내국인 학부생, 2022~2023학년도) ..	35
〈표 N-6〉 미국 고등교육 관련 “전략목표 4” 세부목표 및 추진 과제	36
〈표 N-7〉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액 및 비중 변화 추이	38
〈표 N-8〉 소득수준별 4년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액 및 순 교육비	40
〈표 N-9〉 펠 그랜트(Pell Grant) 상한액	41
〈표 N-10〉 일본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추이(주간_1990~2024년)	46
〈표 N-11〉 일본 공립대학 지역 외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 추이(1990~2023년)	47
〈표 N-12〉 일본 사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 추이(1990~2023년)	48
〈표 N-13〉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수입 기준	50
〈표 N-14〉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산 기준	50
〈표 N-15〉 국·공·사립대학 급부 장학금 지원 금액(주·야간제)	51
〈표 N-16〉 통신교육 과정 학생에 대한 급부형 장학금	51
〈표 N-17〉 제Ⅰ~Ⅲ구분 입학금·수업료 감면액(주·야간제)	52
〈표 N-18〉 제Ⅳ구분 입학금·수업료 감면액	53
〈표 N-19〉 통신 과정 입학금·수업료 감면 상한액	53
〈표 N-20〉 다자녀 세대 관련, 국가가 정한 일정액	54
〈표 N-21〉 2025년 학업 요건 적정화 주요 내용	55
〈표 N-22〉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기관 및 학생 재정지원 개요(2021~2022년)	57
〈표 N-23〉 호주 전공 클러스터별 학생과 정부 분담금 상한액(2020년)	60
〈표 N-24〉 호주 전공 클러스터별 학생과 정부 분담금 상한액(2023~2025년)	61
〈표 N-25〉 최근 5년 호주 테이블 A 대학 장학금, 교내 보조금, 상금의 추세	62
〈표 N-26〉 호주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64
〈표 N-27〉 호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율(2024~2025 소득 연도 기준)	65

〈표 IV-28〉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표 집단의 2035년 고등교육 총원 및 참여 목표	66
〈표 IV-29〉 2024~2025년 잉글랜드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 상한액 (특별지원을 받지 않는 전일제 학생)	72
〈표 IV-30〉 2024~2025년 잉글랜드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 상한액 (특별지원을 받는 전일제 학생)	72
〈표 IV-31〉 2024~2025년 잉글랜드 대학의 수업료 상한액	73
〈표 IV-32〉 일반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액 결정: 소득 수준별 예시	74
〈표 V-1〉 대출 여부 결정 요인(PROBIT)	94
〈표 V-2〉 대출액에 대한 회귀분석(대출자들 대상)	96
〈표 V-3〉 대출액에 대한 Tobit 분석	97
〈표 V-4〉 국가장학금이 대출에 미친 영향	99
〈표 V-5〉 등록금과 소득 사이의 관계 추정 결과	101
〈표 V-6〉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기초통계	105
〈표 V-7〉 국가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첫 직장 분석)	107
〈표 V-8〉 국가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현재 직장 분석)	108
〈표 V-9〉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첫 직장 분석)	110
〈표 V-10〉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현재 직장 분석)	111
〈표 VI-1〉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120
〈표 VI-2〉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123
〈표 VI-3〉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127
〈표 VI-4〉 드림장학금 학업장려 인센티브 지급 예시	131
〈표 VI-5〉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체계도	133
〈표 VI-6〉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성과목표(장학생 종합성장지수)	134
〈표 VI-7〉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학교급별 수혜 현황	135
〈표 VI-8〉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수혜 기간별 연도별 추이	136

〈표 VI-9〉 2023년 꿈 유형 장학생 지역별 선발 결과(중·고등학생)	138
〈표 VI-10〉 2023년 꿈사다리장학사업 SOS 유형 장학생 선발 결과	139
〈표 VI-11〉 장학생의 성장 동기부여 및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2023년 기준) ..	140
〈표 VI-12〉 희망사다리 I 유형 예산 및 지원 실적	142
〈표 VI-13〉 희망사다리 II 유형 예산 및 지원 실적	143
〈표 VI-14〉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생 추천 기준(예시)	143
〈표 VI-1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144
〈표 VI-16〉 근로유형별 근로 내용	145
〈표 VI-17〉 근로장학생 배정 업무	146
〈표 VI-18〉 국가근로장학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 인원	146
〈표 VI-19〉 국가근로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첫 직장 분석)	148
〈표 VI-20〉 국가근로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현재 직장 분석) ..	149
〈표 VII-1〉 만 18세 장래인구추계	152
〈표 VII-2〉 대학 입학인구 변화 및 추계	155
〈표 VII-3〉 2024년 장학금 유형별 지원 인원 및 지원 총액	157
〈표 VII-4〉 대학 입학인구 추계를 활용한 대학 재학생 수 합산(2024년)	159
〈표 VII-5〉 국가장학금 I 유형 구간별 인원 및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60
〈표 VII-6〉 국가장학금 I 유형 9구간 기 신청 인원	162
〈표 VII-7〉 국가장학금 I 유형 2030년과 2035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 추계	162
〈표 VII-8〉 국가장학금 I 유형 총 지급액 추계(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165
〈표 VII-9〉 국가장학금 I 유형 총 지급액 추계(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166
〈표 VII-10〉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67
〈표 VII-11〉 다자녀장학금 9구간 기 신청인원	168
〈표 VII-12〉 다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 추계	168
〈표 VII-13〉 다자녀장학금 총 지원금액 추계(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170
〈표 VII-14〉 다자녀장학금 총 지원금액 추계(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171

〈표 VII-15〉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장학금 방안별 총 지급액	172
〈표 VIII-16〉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예상 수혜인원	174
〈표 VII-17〉 2030년과 2035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 추계(소득평가액 기준)	175
〈표 VII-18〉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때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장학금 총 지급액 추계(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176
〈표 VII-19〉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때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장학금 총 지급액 추계(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177
〈표 VII-20〉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간의 차액(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178
〈표 VII-21〉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간의 차액(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178
〈표 VII-22〉 하후상박형 제도로 재설계를 위한 국가장학금 I 유형 내용 확인	183
〈표 VII-23〉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 하후상박형 방안 총 지급액 추계	184
〈표 VII-24〉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과 하후상박형 방안하에서의 차액	185
〈표 VII-25〉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과 하후상박형 방안하에서의 차액	185
〈표 VIII-1〉 국가장학금 사업군의 평가내용 및 정책제언	193

그림 목차

[그림 II-1] 국가장학금 시행 절차	7
[그림 II-2] 다자녀장학금 신청 절차	8
[그림 II-3] 국가근로장학금 시행 절차	10
[그림 II-4] 의무종사제도 절차	16
[그림 IV-1] 국·공립대학 교육수준별 연평균 등록금 수준(2022~2023년 내국학생 기준)	28
[그림 IV-2] 총 교육비(COA) 대비 Pell Grant의 비중 변화	39
[그림 IV-3] 대학 등록금 대비 펠 그랜트 상한액 비중	40
[그림 IV-4] Pell Grant 예정액 결정 프로세스	42
[그림 IV-5] 2024년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49
[그림 IV-6] 2025년 급부형 장학금 및 수업료 감면 개선 방안	54
[그림 IV-7] 다자녀 세대 지원(세 자녀가 2살·3살 터울인 경우)	55
[그림 IV-8] 호주 대학의 수입 자원 추이(2020년 달러 기준)	58
[그림 IV-9] 호주 대학의 항목별 지출 추이(2020년 달러 기준)	59
[그림 IV-10] 호주 학자금대출 유형별 연간 신규 HELP 대출액	63
[그림 IV-11] 대학교육 재정의 수업료 중심으로 전환 추이	69
[그림 V-1] 학자금 지원구간별 실등록금 추이(기초~3구간)	81
[그림 V-2] 학자금 지원구간별 실등록금 추이(4~8구간)	82
[그림 V-3]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기초~3구간)	84
[그림 V-4]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4~8구간)	85
[그림 V-5] 구간별 소득 대비 실부담율	87
[그림 V-6]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자 비중(기초~3구간)	89
[그림 V-7]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자 비중(4~8구간)	90
[그림 V-8] 학자금 지원구간별 평균 대출액(대출자 기준, 기초~3구간)	92
[그림 V-9] 학자금 지원구간별 평균 대출액(대출자 기준, 4~8구간)	93

[그림 VI-1]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114
[그림 VI-2] 대통령과학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115
[그림 VI-3]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116
[그림 VI-4]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116
[그림 VI-5]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총액과 건수	117
[그림 VI-6]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118
[그림 VI-7]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118
[그림 VI-8]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119
[그림 VI-9]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121
[그림 VI-10] 인문100년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121
[그림 VI-11] 인문100년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122
[그림 VI-12] 인문100년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122
[그림 VI-13]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124
[그림 VI-14]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125
[그림 VI-1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125
[그림 VI-16]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126
[그림 VI-17]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127
[그림 VI-18]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128
[그림 VI-19]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128
[그림 VI-20]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129
[그림 VI-21]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학교급별 지원총액과 수혜자 수 추이	136
[그림 VI-22]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학교급별 수혜자 1인당 지원액	137
[그림 VI-23]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수혜자의 학교소재지별 추이	137
[그림 VI-24]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수혜자의 성별 추이	138
[그림 VII-1] 만 18세 장래인구추계	151
[그림 VII-2] 대학 입학인구 변화 및 전망	154

I. 서론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포함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2012년 도입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및 청년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하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이공계 각 분야의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기초학문 분야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기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육급여 및 꿈사다리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2024년 기준 약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에도 불구하고 심층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해당 사업군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와 학교에 입학하는지, 실제 국가장학금 사업군의 각 세부사업이 형평성을 유지하며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가장학금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성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심층평가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였는지, 노동시장 성과와 사회이동성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한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다.

Ⅱ. 사업군의 개요

1. 사업군의 개요

가. 도입 배경

국가장학금은 2011년 9월 8일 이명박 정부 당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기반으로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다. 2011년 당시 연간 등록금이 약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여 사립대학의 경우 769만원으로 71% 증가하였으며, 국공립대학은 435만원으로 99% 증가하였다. 게다가 1991년 33.2%로 집계되었던 대학진학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01년 70%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을 전후로 역대 최고치인 80%까지 근접한 상황이었다.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 등록금 상승으로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타났다(구인회·김정은, 2015).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9월 13일에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 비용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민간 부담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에 가까웠다. 이렇듯 고액의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의 부담이 심화되자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재정 개입이 시대적 요구로 부상한 것이다.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와 고등교육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장학금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당시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1.5조원의 국가장학금과 0.75조원 이상의 대학자구노력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명목등록금의 5%를 인하하고,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기대하며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제시하였다.

〈표 II-1〉 국가장학금 도입 당시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단위: 조원, %)

구분	(정부) 국가장학금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포함 자구노력	총 부담완화 효과
소요재원	1.5	0.75	2.25
부담완화	16.9% ¹⁾	5.4% ²⁾	22% 이상 ¹⁾

주: 1) 소득 7분위 이하 지원대상 학생 기준

2) 전체 대학생 기준

자료: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327>, 검색일자: 2024. 10. 13.

나. 근거 법령

국가장학금은 「교육기본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의 ①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국가의 책무)에서는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표 II-2〉 국가장학금 관련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법조항	내용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slId=000901&ancYnChk=0#0000>, 검색일자: 2024. 9. 13.

2. 세부사업별 개요

국가장학금 사업군 예산은 2024년 기준 4.8조원이며, 이 중 98%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며, 우수학생 국가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예산은 전체 예산 중 비중이 적은 편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주로 미래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를 이룬 학생, 혹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학생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에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매우 넓다.

〈표 II-3〉 국가장학금 사업군 예산

(단위: 억원)

사업(군)명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장학금			41,430	41,713	48,625	47,340	48,036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고특 ¹⁾	39,949	40,196	47,036	45,664	47,205
과기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	512	522	529	522	507
기재부	저소득층 장학사업	복권	968	995	1,061	1,154	324

주: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크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국가우수장학생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비수도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으로 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2023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효과성 분석 결과 보고, 2024). 〈표 II-4〉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3개년 예산이다. 도입 당시 1.2조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에는 4.6조원, 2024년에는 4.7조원, 2025년에는 5.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중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액이 10% 내외의 비중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과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액은 국가장학금이나 대학생 근로장학금보다 지원대상이 적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II-4〉 맞춤형 국가장학금 3개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예산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566,436	4,446,000	4,720,453	-	5,305,047
① 국가장학금 지원	4,030,777	3,901,796	4,097,498	-	4,485,299
②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376,445	376,445	469,125	-	627,442
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56	57,856	57,626	-	57,827
④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99,338	107,883	94,184	-	97,963
⑤ 주거장학금 지원 1738	-	-	-	-	34,435
⑥ 운영비(인건비)	2,020	2,020	2,020	-	2,081

국가장학금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 및 자산을 통합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신청한 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및 자동차이며, 구체적인 항목은 〈표 II-5〉와 같다. 소득 및 재산의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산에 포함한다.

〈표 II-5〉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등
금융재산	예·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공 자료

〈표 II-6〉은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구분한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계값과 그에 따른 지원금액이다. 국가장학금은 8구간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지원금액이 감소한다. 2023년 대비 2025년의 구간 경계값과 지원금액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기초·차상위의 경우 2024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표 II-6〉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구분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과 지원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경계값 (기준 중위소득 대비 배율)	지원금액	경계값 (기준 중위소득 대비 배율)	지원금액 (I 유형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700만원 (둘째 전액)	자격기준	전액
1구간	1,620,289원(30%)	520만원	1,718,974원(30%)	570만원
2구간	2,700,482원(50%)	520만원	2,864,957원(50%)	570만원
3구간	3,780,675원(70%)	520만원	4,010,939원(70%)	570만원
4구간	4,860,868원(90%)	390만원	5,156,922원(90%)	420만원
5구간	5,400,964원(100%)	390만원	5,729,913원(100%)	420만원
6구간	7,021,253원(130%)	390만원	7,448,887원(130%)	420만원
7구간	8,101,446원(150%)	350만원	8,594,870원(150%)	350만원
8구간	10,801,928원(200%)	350만원	11,459,826원(200%)	350만원
9구간	16,202,892원(300%)	-	17,189,739원(300%)	-
10구간	16,202,892원 ↑ (300% ↑)	-	17,189,739원 ↑ (300% ↑)	-

주: 1. 지원구간 경계값: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2.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배율
 3.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23년) 5,400,964원, ('24년) 5,729,913원

이 중에서도 국가장학금 I 유형이 가장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장학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B학점(8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래로 현재까지 실시되는 사업이다. 동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계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원구간별로 장학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을 기준으로 총 2조 6,599억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

〈표 II-7〉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형태(지원율)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B학점(8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사업기간	2012년~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관련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저·중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원구간별로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규모는 2024년 기준 2조 6,599억원 수준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내역사업 설명자료

[그림 II-1]은 국가장학금의 시행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뒤 대학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대학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체노력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국가장학금II유형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후 각 대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 결과를 보고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평가 및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교육부에서는 각 사업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II-1] 국가장학금 시행 절차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고등교육 비용을 경감하여 다자녀 가정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학금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조 56억원 수준이며, 지원 기간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하다. 교육비 지원 방식은 대학 등록금상에서 우선감면(등록금 고지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 감면) 혹은 개별 지급(우선감면 미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

특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8구간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3구간까지는 I 유형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만 4유형부터는 국가장학금 I 유형보다 다자녀 장학금의 지급금액이 더 많다.

〈표 11-8〉 2024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첫째·둘째	등록금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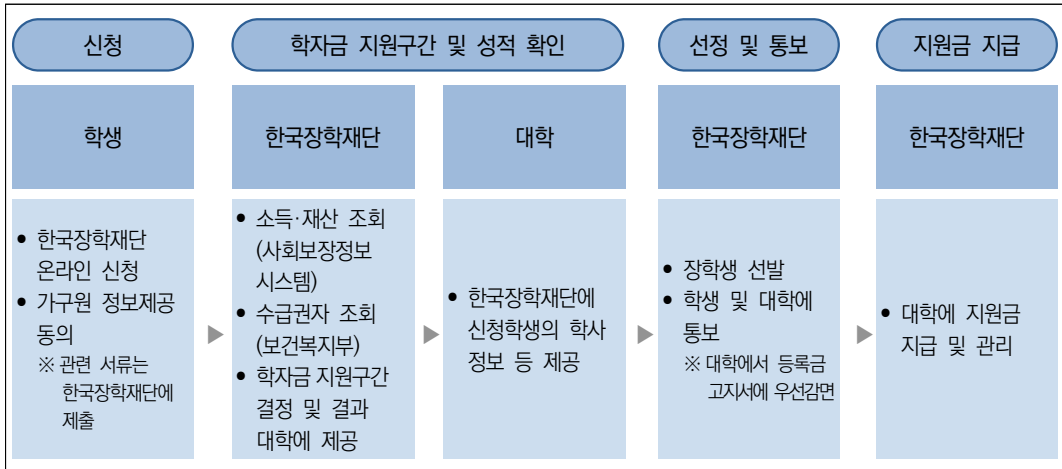
주: 1.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2. 단,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혼으로 분류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내역사업 설명자료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보다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신청 후 장학재단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대학에 결과를 제공한다. 대학에서는 신청학생의 학사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고, 장학재단은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한다.

[그림 11-2] 다자녀장학금 신청 절차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저소득

특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구분되어 각각 시급 9,860원과 12,220원이 지급되며, 일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은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급 12,220원이 지급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은 도시 지역 14,000원, 농어촌 지역 18,000원의 차등화된 시급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사업예산은 4,674억원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이 4,0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9〉 2025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변동액		2025년 예산(안)
		지원 인원 확대	운영비	
① 국가근로	451,787	169,623		621,410
교외근로	256,559	39,471		296,030
교내근로	195,228	130,152		325,380
② 다문화탈북	15,600			15,600
③ 운영비	1,738		1,750	3,488
합계	469,125	169,623	1,750	640,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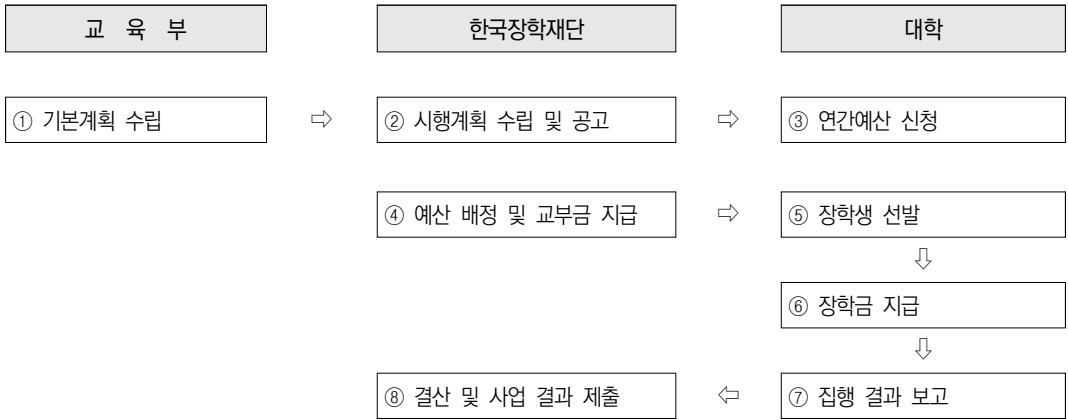
각 사업별로 성적 기준(C0 이상,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두고 있으나, 소득 기준은 국가근로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선선발을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순위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4구간 이하인 학생이며, 2순위는 5구간 이상~6구간 이하, 3순위는 7구간 이상~9구간 이하이다.

〈표 II-10〉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기본 자격요건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우선선발 기준			
경제적 수준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모든 근로장학금 사업은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근로 장학사업 또한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대학에서 연간 예산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에서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교부금을 지급한다. 각 대학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뒤 집행결과를 장학재단에 보고한다. 이후 장학재단에서 결산하고 사업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그림 II-3] 국가근로장학금 시행 절차



나. 국가우수장학금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운영해 온 정부 지원 국가우수장학금(merit-based aid)은 총 열 가지로, ① 대통령과학장학금 ②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¹⁾ ③ 인문100년장학금 ④ 예술체육비전장학금 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⑥ 대학원생지원장학금(종료) ⑦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종료) ⑧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종료) ⑨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⑩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등이 있다. 이 중 드림장학금과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장학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국가우수장학금의 주요 내용과 재정지원 부처 등을 종합 정리하면 <표 II-11>과 같다. 국가우수장학금은 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외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술체육계열에 대한 ‘교육부’ 지원 우수대학

1) 지역대학 우수학생 장학금은 2008년 도입되어 2009년까지 별도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으로 통합되었음.

생 사업, 그 외에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의 대학까지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열 우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종료되었는데, 이공계 우수 전일제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으로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2024년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다.

〈표 II-11〉 국가우수장학금 주요 내용 종합 정리

사업명 (도입 시기)	목표	법적 근거	지원 대상	재원 지원 부처, 주요 지원 내용
대학원 대통령과학 장학금 (2024)	세계 최고의 이공계 연구 인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발굴 및 성장 기반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분조 신설 2024.12.20.)(시행일: 2025.6.2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내 일반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자(단, 주 40시간 이상 연구·학업에 전념하는 전일제 석·박사과정에 한함) - (석사과정)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 이상/4.5만점(3.7 이상/4.3만점) - (박사과정)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 이상/4.5만점(3.7 이상/4.3만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석사과정 월 150만원, 박사과정 월 200만원 ※ 타 장학금, 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 허용
대통령과학 장학금 (2003)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내 1학년 신규장학생 77명(국내일반 6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1학년 신규장학생 20명, 국내 3학년 신규장학생 60명, 계속장학생 345명 내외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장학생: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지원(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원 추가) - 해외장학생: 실비학비, 체제비 등 최대 미화 5만달러(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체제비 연간 최대 2만달러 정액지급, 출국항공료 등)

〈표 II-11〉의 계속

사업명 (도입 시기)	목표	법적 근거	지원 대상	재원 지원 부처, 주요 지원 내용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2003)	이공계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 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 이공계 진학유도 및 우수 과학기술인력으로 육성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 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특별법」 제9조(이공 계 대학생 지원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사업)	- 이공계 분야 대학생(일정 이상의 성적 기준 충족) - 성적: 직전 학기 평균평점 3.5 이상/4.5만점(3.3 이상/4.3 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직전 학기 12 학점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 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 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 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 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2009년부터 폐지)
인문100년 장학금 (2008)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 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지 원대상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신입 및 재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전공 확립유형에 한함)	- 교육부 -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 및 생활비(250만원) *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 출과 중복지원 불가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2015)	전공분야별 재능과 소질 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 재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지 원대상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 과(부) 신입 및 재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자(전공 확립유형에 한함)	- 교육부 -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 및 생활비(250만원) *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 출과 중복지원 불가
전문기술 인재 장학금 (2020)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 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 을 발굴·지원하여 고등직 업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을 보장함으로써 포용국 가 실현에 기여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지원대상 대학의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 인 대학원생은 제외	- 교육부 - 유형에 따라 등록금 전 액 혹은 등록금 전액+생 활비 200만원(1,200명) *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 출과 중복지원 불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2012)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 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 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및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저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수고등학생	- 교육부 - 학업장려비 50만~70만원, 학비 및 체재비(연 6만 달러 한도), 항공료(지 원기간 내 1만달러 한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019)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 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 지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	-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8조(장학제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복권기금 의 배분 및 용도) 등	- 저소득층 중·고생(만 24세 이 하)/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고3) 중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기재부(복권기금), 교육부 -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및 계속 장학생 지속 지원 - 학업장려비(매월 카드포 인트, 중 25만, 고 35만, 대 45만)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 지원

〈표 II-12〉는 국가우수장학금 유형별로 그동안의 누적 지원 현황이다. 누적 지원 금액 측면에서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원 건수 측면에서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순으로 많았다. 수혜자의 성별로는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등 이공계열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남자가, 그 외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대상 장학금은 여자가 많았다.

〈표 II-12〉 국가우수장학금 유형별 누적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누적 운영 연도)	합계			남자			여자		
	금액	건수 ¹⁾	1건당 금액	금액	건수 ¹⁾	1건당 금액	금액	건수 ¹⁾	1건당 금액
대통령과학장학금 (2003~2023년)	117,633	17,587	6.7	89,535	13,710	6.5	28,098	3,877	7.2
	100.0	100.0	-	76.1	78.0	-	23.9	22.0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2003~2023년)	1,175,631	394,004	3.0	804,987	262,796	3.1	370,644	131,208	2.8
	100.0	100.0	-	68.5	66.7	-	31.5	33.3	-
인문100년장학금 (2008~2023년)	264,152	81,415	3.2	82,222	25,339	3.2	181,930	56,076	3.2
	100.0	100.0	-	31.1	31.1	-	68.9	68.9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2015~2023년)	43,280	9,703	4.5	10,767	2,517	4.3	32,513	7,186	4.5
	100.0	100.0	-	24.9	25.9	-	75.1	74.1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2020~2023년)	32,957	8,903	3.7	11,564	3,137	3.7	21,394	5,766	3.7
	100.0	100.0	-	35.1	35.2	-	64.9	64.8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2012~2023년)	30,614	262	116.8	9,000	91	98.9	21,613	171	126.4
	100.0	100.0	-	29.4	34.7	-	70.6	65.3	-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2019~2023년)	61,297	21,573	2.8	23,758	8,745	2.7	37,539	12,828	2.9
	100.0	100.0	-	38.8	40.5	-	61.2	59.5	-

주: 1) 드림장학금의 경우, 학생별로 지급건수가 상이하여 인원기준으로 작성함.

국가우수장학금 가운데 종료된 사업은 크게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우수장학금이다. 대학원사업의 경우 기초학문육성 등과 연계되어 운영한 인문사회계 우수대학원생 사업의 누적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국가우수장학금(종료사업) 유형별 누적 지원 현황(2005~2023년)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누적 운영 연도)	합계			남자			여자		
	금액	건수	1건당 금액	금액	건수	1건당 금액	금액	건수	1건당 금액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2006~2019년)	61,146	18,482	3.3	18,806	5,681	3.3	42,340	12,801	3.3
	100.0	100.0		30.8	30.7		69.2	69.3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2003~2013년)	43,812	9,974	4.4	32,791	7,463	4.4	11,021	2,511	4.4
	100.0	100.0		74.8	74.8		25.2	25.2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2011~2017년)	17,003	8,598	2.0	6,376	3,246	2.0	10,627	5,352	2.0
	100.0	100.0		37.5	37.8		62.5	62.2	

이공계열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 2013년부터 '의무종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공계열 대학으로 입학한 우수인재들이 중도탈락 또는 졸업 이후 의약학계열로 이동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진로연계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공적 지원의 책무성 강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이공계 환수 업무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7.]

[시행일: 2025. 6. 21.] 제9조의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상해·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공계의 산·학·연이 도산하거나 조직이 폐지·축소되는 등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종사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④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2023. 8. 30.>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초의학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직·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국외 및 융·복합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frac{\text{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text{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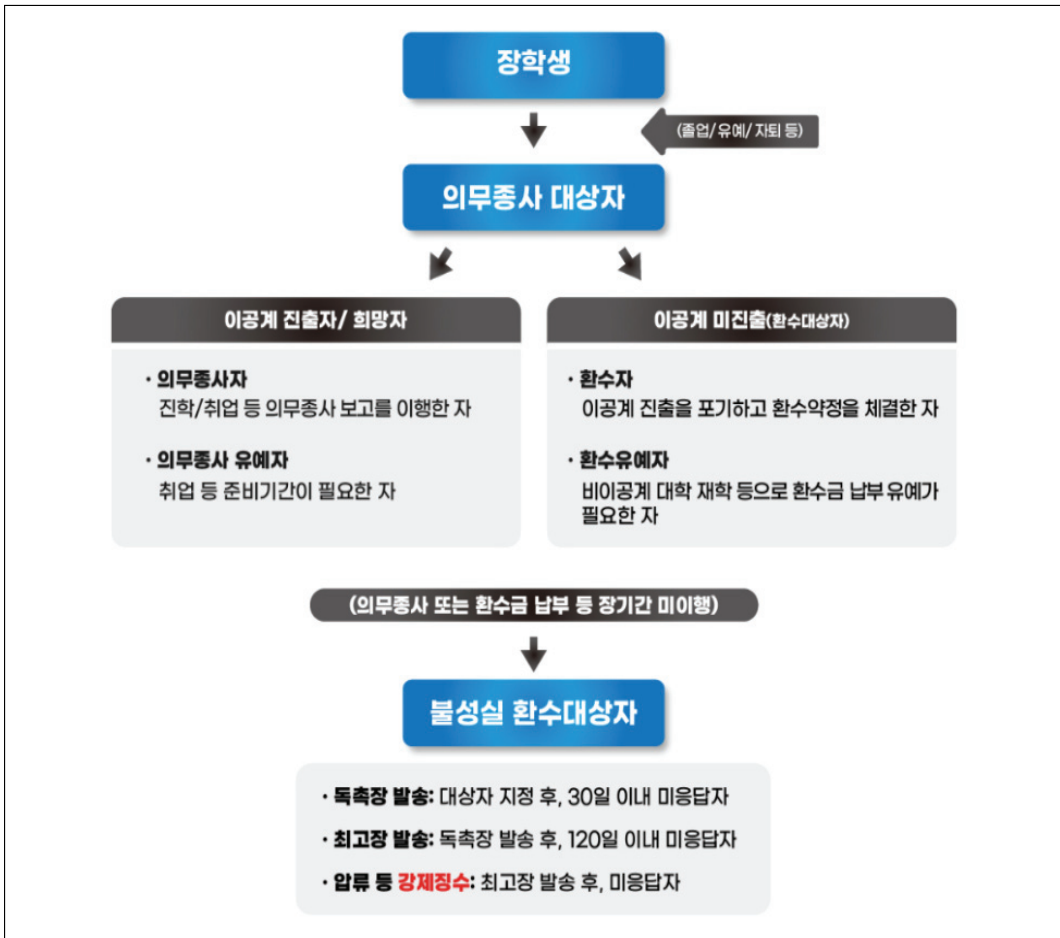
$$\frac{(\text{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text{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text{남은 의무종사기간}} \times \text{총의무종사기간}$$

- ⑦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학·연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4.]

2025년 1월 현재 의무종사제도 대상자는 크게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등 3개 장학금의 수혜자이다. 즉 이공계 전공 우수학생의 관련 분야 진출 장려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되, 수혜 학기만큼 이공계열 산업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제도이다. 의무종사 이행기간은 ‘총 이행기간 = 장학금(연구장려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로, 8개 학기 장학금 수혜자를 예로 들면, 의무종사 이행기간은 ‘8(지급횟수) × 6 × 30 = 1,440일’이다. 환수금액은 ‘총 환수대상 금액 = 수혜한 장학금(연구장려금) 총액 - 수혜 금액 중 초기 2년간 수혜금액’이다. 예를 들어 장학금 8개 학기 수혜자(학기당 100만원)의 총 환수대상 금액은 ‘800만원(100만원 × 8개 학기) - 400만원(100만원 × 초기 2년, 4개 학기) = 400만원’이다. 의무종사제도 절차를 종합정리하면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의무종사제도 절차



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과 드림장학금을 포함한다.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제도로, 복권기금이 복권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적립금(3,678억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였다. 복권기금의 장학사업 기초자금으로 4년간 3,500억원(2020~2023년)을 조성하여 기초자금의 운용 수익과 연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였다. 동 사업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를 재학 중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의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선발이 되면 대학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카드 포인트 등으로 학업 장려비를 지원하고, 멘토링 및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방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14〉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형태(지원율)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중 1~고 3 재학 중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사업기간	2019년~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및 복권기금
선발요건	① 소득: 기초·차상위 ② 성적: (중) C등급 이상, (고)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 ③ 비교과: 결석 10일 미만,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 2024년부터 꿈 장학생 중 200명을 다문화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장학금(1,800명), 다문화 장학금(200명), SOS 장학금(1,000명)으로 구성됨 ■ 복권기금의 소송 적립금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까지 지속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매월 학업 장려비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 		

자료: 교육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월 25만원·35만원·4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는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 교육 현장 전문가와 1:1 멘토링)과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선배 장학생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장학증서 수여식 + 멘토 위촉식 + 명사 강연)을 운영한다.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을 통해 전문·진

학·취업·창업 등 장학생의 성장상황에 맞추어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SOS 장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10개월간 월 3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마음건강 프로그램(장학생의 고민,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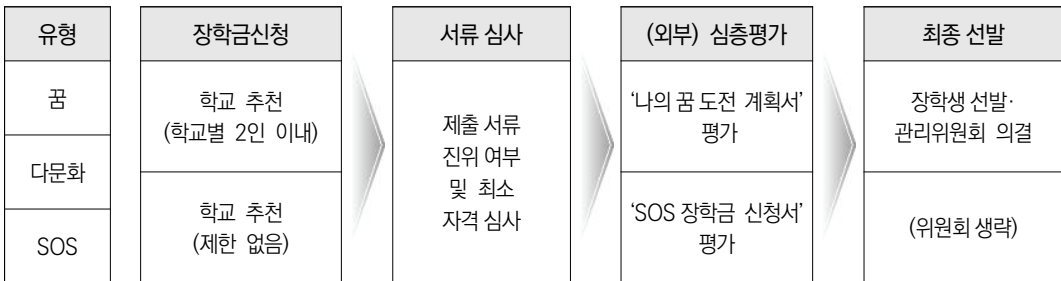
〈표 II-15〉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지원 내용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업 장려비	장학금 월 25만원	장학금 월 35만원	장학금 월 45만원
교육 프로그램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 교육 현장 전문가와 1:1 멘토링)		사회 환원 활동 참여 - 후배 장학생의 멘토 역할 수행 - 사회봉사 활동(30시간 이상)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선배 장학생과 멘토링)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문화체험·대학탐방 등 활동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장학증서 수여식 + 멘토 위촉식 + 명사 강연)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진로·진학·취업·창업 등 장학생의 성장상황에 맞추어 세분화 지원)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장학생의 고민,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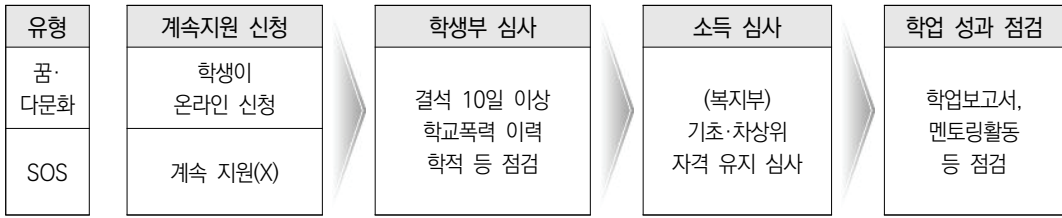
주: 1. SOS 장학생의 경우, 한시적 장학금(10개월간 월 30만원)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지원
자료: 교육부

신규 신청자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류 및 외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발이 진행된다. 계속 지원을 심사하는 경우, 학생이 계속 지원을 신청하면 학생부 정보의 학적상 변동과 출결, 학교폭력 등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차상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표 II-16〉 신규 심사 신청 절차



〈표 II-17〉 계속 지원 심사 절차



‘드림장학금’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신설되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6명을 선발하였다.

〈표 II-18〉 드림장학금 선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¹⁾	계
고2	-	-	5	10	10	12	16	16	20	22	16	11	15	153
고3	10	10	5	10	10	6	14	16	10	8	10	19	15	143
합계	10	10	10	20	20	18	30	32	30	30	26	30	30	296

주: 1) 2024년은 선발 예정 인원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2025. 5.).

2012년 당시 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드림장학금은 점차 증가하여 2024년 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선발된 인원과 신규 선발된 인원이 대학에 재학 중이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누적 선발인원이 많아질수록 장학금 지급액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장학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19〉 드림장학금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10	685	685	1,540	2,387	3,178	3,953	3,953	4,458	4,458	4,769	5,703	5,985
(조정 후 사업비)	310	185	685	1,049	1,897	3,154	3,953	3,953	4,458	4,458	4,769	5,703	5,985

자료: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2025. 5.).

3. 평가 필요성

2024년 국가장학금 사업군의 총 예산이 4.8조원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장학금이 소득과 관계없는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국가장학금이 저소득 가계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 및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장학금이 저소득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켜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여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고 대학서열화가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형태의 장학사업은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 5년 사이에 약 7천억원가량 증액되었으나,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감소²⁾하였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령인구 증감과 지원대상의 변화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재정의 소요 추정액을 검토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더불어 장학금의 지급이 특정 성별이나 지역에 치중되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평가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전에도 내·외부에서 다양한 평가가 일부 이루어졌다. 2018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2015~2017년 당시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인원 중 52%가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국가장학금 중 일반상환 대출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는 대학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필요한 곳에 장학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학비, 생활비 등을 이유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각 가계에서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가장학금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0월 국회예산정책

2) 대학 학령인구(18~21세): 2,105('22) → 1,967('23) → 1,899('24) → 1,865('25) → 1,879('30)

처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소득이 여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장학금액이 도리어 낮게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공시지가 등락과 부동산 등의 가격 변동이 장학금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과연 국가장학금이 대출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경향을 보이는지, 저소득층이 여타 가계보다 등록금 부담이 더 큰지, 소득기준을 변경하면 수혜인원과 재정소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사업군에 대한 평가 개요

1.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본 연구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의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학입시의 결과로 요약될 수 있는 대학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졸업 후 취업 성과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의 경우 각 세부사업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단기 목표를 달성하여 최종 중장기 목표를 이루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여 단기적으로 지원 대상이 선택하는 대학의 유형(전문대, 종합대, 국립대, 사립대 등)과 학과에 영향을 미쳐 대학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드림장학금은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의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는 효과가 있다.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일정 부분 제공하여 대학 재학 중 안정적으로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장학금의 제공은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고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등록금 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휴학 기간이 짧아지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장학금이 지급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감소하거나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위한 지출이 감소할 것이므로 가구의 생활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은 결국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시장 성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취업률, 임금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한다.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사회이동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표 III-1>은 세부 사업별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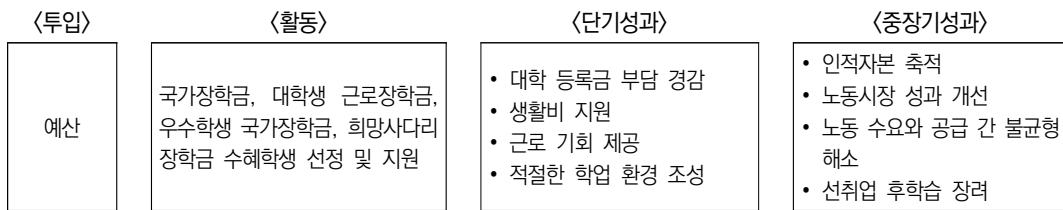
〈표 Ⅲ-1〉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의 세부사업별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획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	순영향
맞춤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저소득층 장학사업			✓		

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으로 구성된다. 투입된 예산으로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생활비 지원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한 학업환경 조성으로 축적한 인적자본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취업 후학습을 장려한다.

〈표 Ⅲ-2〉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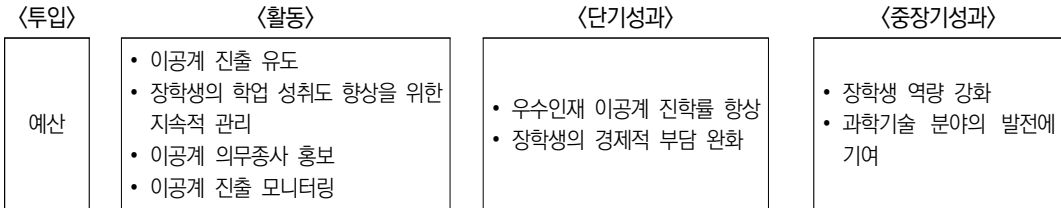


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이공계 각 분야의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비를 지원하여 이공계로 진학을 유도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은 이공계 분야에 일정한 기간 동안 진학, 취업, 혹은 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공

계 산·학·연 진출자를 모니터링하고 의무종사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률을 향상하고 장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학금 수혜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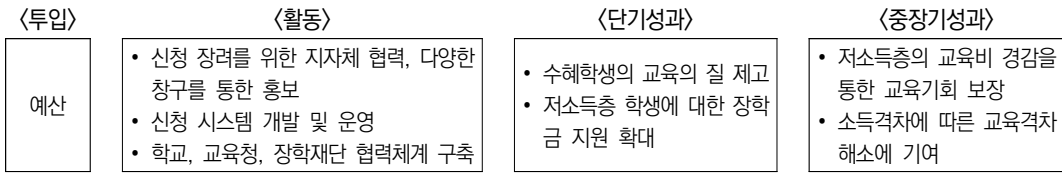
〈표 Ⅲ-3〉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논리모형



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중 꿈사다리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 중고생 및 다문화학생을 발굴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해당 장학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 해당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광고, SNS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신청의 용이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청, 장학재단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혜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경감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표 III-4〉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논리모형



2. 평가방법 및 식별전략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과 이미 시행되고 있던 다양한 장학제도 등이 제공하는 대학 학비 보조 정책이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는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패널」과 「국가장학금 DB」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한국장학패널」은 동일한 응답자를 매년 재조사하는 패널자료이나 본 연구는 대학을 졸업한 후 첫 번째로 취업한 직장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패널 분석이 아닌 횡단면 분석기법인 선형회귀분석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활용한다. 선형회귀분석모형은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계량경제학 분석모형이다. 기본적인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y_{it} = \alpha + X_{it}\beta + \epsilon_{it}$$

y_{it} 는 분석단위 i 의 시점 t 에서 관찰되는 피설명변수 y 값이다. 예를 들어, 학생 i 가 t 연도에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직업의 특성(월급, 종사상 지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α 는 상수항, ϵ_{it} 는 오차항이며, 자료로 관측할 수 없으나 학생 i 가 t 연도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X_{it} 는 설명변수 행렬이며, 주요한 변수로 장학금 수혜 여부 및 장학금 수혜금액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학생 i 의 성별, 취업 당시 나이, 결혼 상태, 자녀 수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β 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추정하는 주요 관심 추정치이다. 이와 같은 선형회귀분석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한 방법은 최소자승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소자승회귀분석은 오차항을 최소로 만드는 β 를 찾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at{\beta} = \operatorname{argmin}_{\beta} \sum_{i=1}^n (y_{it} - X_{it}\beta)^2$$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hat{\beta}$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hat{\beta} = (X'_{it} X_{it})^{-1} X'_{it} y_{it}$$

최소자승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때 편향되지 않은(unbiased)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어야 하며($E[\epsilon_{it}] = 0$), 오차항과 설명변수는 독립이어야 한다($E[X_{it}|\epsilon_{it}] = 0$ 혹은 $E[X_{it}\epsilon_{it}] = 0$). 회귀계수인 β 의 통계적 유의성과 경제적 유의성을 검토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및 금액이 노동시장 성과인 첫 직장 정규직 여부, 첫 직장 월급, 현 직장 정규직 여부, 현 직장 월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장학패널」은 국가장학금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신청하였더라도 수혜 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존재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즉 비슷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수혜금액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장학금 DB」를 이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별 본인 부담률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활비가 등록금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여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만일 회귀분석을 통해 등록금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생활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면, 각 가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후에도 각 가구의 등록금 납부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상세한 학자금 지원구간별 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에서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는 경향이 보인다면, 국가장학금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국가장학금 DB」를 이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진학한 대학의 유형(국공립 및 사립대, 전문대 및 종합대 등)과 학과 등을 분석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는지 검토한다. 만일 국가장학금이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면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진학한 대학이나 학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한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편중하여 진학하는 경향이 관측된다면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입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V. 주요국가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사례

이 장에서는 최근 OECD에서 발표한 「2024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2024)」 제5장에 제시된 각국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³⁾ 그리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지향적 고등교육 비용분담구조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의 정부 학자금 지원제도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OECD 회원국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개요

가. 고등교육 수준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등록금 현황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학비는 일반적으로 학사 프로그램보다 저렴하다. 최근 들어 OECD 회원국들은 학·석사 프로그램과 같은 긴 주기의 고등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짧고 저렴한, 즉 비용 대비 혜택이 더 좋은 단기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OECD, 2019).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단기 및 학사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이다. 무상등록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에 있다. 석사 학위가 제공하는 취업이나 소득상의 사적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학부 무상등록금 4개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석사과정 역시 학비가 없다.

한편 노르웨이의 경우 학사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단기 고등교육과정에는 수업료가 부과된다. 미국은 학사과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3,600달러 미만의 학비가 책정되어 있다. 반면 리투아니아와 네덜란드의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학비는 학사과정의 학비와 동일하다(OECD, 2024: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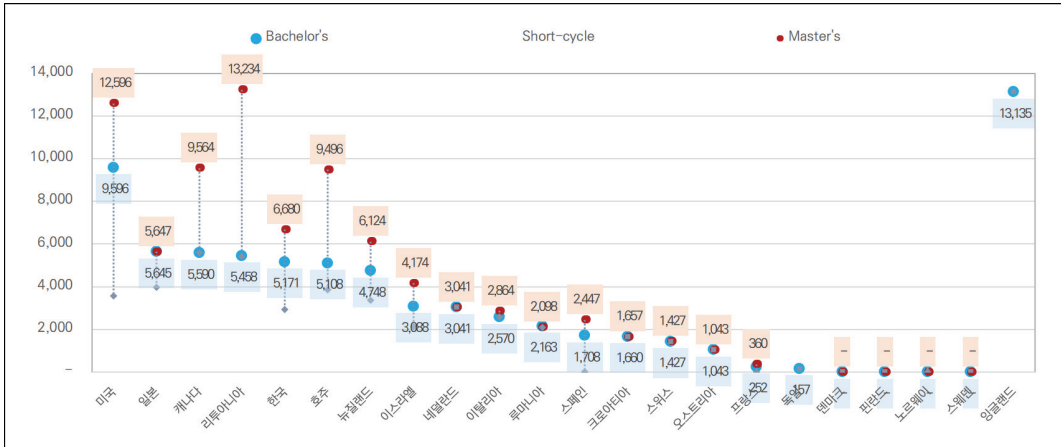
3) EAG 2024 Chapter C5. How much do tertiary students pay and what public support do they receive?

4) 고등교육재정 공적 지원 수준에 따라 OECD 회원국을 구분할 때, 시장지향형 국가는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비중이 50% 미만인 국가로서, 2021년 결산 기준(OECD 2024)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칠레 등 6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등록금은 사적 수익률이 높다는 점(더 나은 취업 기회와 수입 전망)에서 학사과정보다 등록금이 비싸다. 22개 조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석사과정의 학비가 학사과정의 학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석사와 박사 과정을 합산한 것임)에서는 국공립대학 기준 석사과정 학비가 학사과정 학비보다 25~50% 높은 수준이었다. 호주, 벨기에(프랑스어권), 캐나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석사과정 학비가 학사과정 학비보다 70%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24: 318).

[그림 IV-1] 국·공립대학 교육수준별 연평균 등록금 수준(2022~2023년 내국학생 기준)

(단위: USD PPP)



- 주: 1. 호주와 독일은 2021년, 잉글랜드, 스페인, 미국은 2021/22회계년도 자료임
- 2.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석·박사과정이 포함된 값임
- 3. 영국의 경우 국공립대학이 아닌 정부의존형 사립대학도 포함
- 4. 학사과정 등록금액이 높은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OECD(2024), 그림 C5.1.

나. 사립대학 재학생 비중과 기관유형별·교육수준별 등록금 수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비중은 OECD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15% 미만이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학보다 높다. 사립대학 석사과정 수업료는 스페인의 경우 국공립대학보다 5배 이상 높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미국에서는 2배 이상 높지만, 호주, 일본, 한국, 루마니아에서는 2배 미만이다.

한편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의 경우 박사과정 등록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공립대학에서 석사보다 박사 과정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는 3개국(프랑스, 한국, 리투아니아)뿐이었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등록금 수준이 동일하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사보다 석·박사과정의 등록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학비가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에 따라 박사과정 재학생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국공립대학 박사과정 등록을 촉진하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학사 및 석사과정보다 박사과정에 더 낮은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공립대학 박사과정 연평균 학비는 학사과정보다 약 25배 낮으며(약 5,000달러 대비 200달러), 노르웨이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박사과정 지원자를 학생이 아닌 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표 IV-1〉 대학등록금 수준에 의한 국가 분류(국공립대학 내국인 학부생, 2022~2023학년도)

(단위: USD PPP)

국가명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 (전일제, 시간제 포함) (2021/22)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단기	학사	석사	박사	단기	학사	석사	박사
호주	22	3,857	5,108	9,496	196	9,368	10,978	16,057	5,453
오스트리아	24		1,043	1,043	1,043				
캐나다			5,590	9,564	5,983				
덴마크	0	-	-	-	-				
핀란드	49		-	-	-		-	-	-
프랑스	23	-	252	360	564				
독일	12		157				5,509		
이스라엘	12	2,119	3,088	4,174			9,040	10,368	
이탈리아	21		2,570	2,864	547		6,463	8,132	2,730
일본	79	3,975	5,645	5,647	5,647	7,680	10,104	8,808	6,368
대한민국	80	2,922	5,171	6,680	7,777	7,488	9,279	12,523	13,652
리투아니아	12	5,428	5,458	13,234	20,069		5,141	11,216	16,842
네덜란드		3,041	3,041	3,041					
뉴질랜드	0	3,372	4,748	6,124	5,161				
노르웨이	12	552	-	-	-	9,384	5,538		

〈표 IV-1〉의 계속

국가명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 (전일제, 시간제 포함) (2021/22))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단기	학사	석사	박사	단기	학사	석사	박사
스페인	23	-	1,708	2,447			12,693	13,930	
스웨덴	12	-	-	-	-	-	-	-	-
스위스	8		1,427	1,427	408				
미국	28	3,564	9,596	12,596		16,579	34,041	28,017	

주: 1. 호주와 독일은 2021년, 잉글랜드, 스페인, 미국은 2021/22회계년도 자료이며, 정부산하기관과 사립대학이 통합된 자료이며, 독일의 경우 학술프로그램만 포함됨.

2. 핀란드와 스웨덴은 독립민간기관이 아닌 정부의존형 민간기관 재학생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2024), 표 C5.1.

다. 지난 10년간 대학생 수 및 등록금 변화

2012~2013학년도와 2022~2023학년도 사이 지난 10년간 대학생 수, 등록금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가는 대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재정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률은 평균 9% 증가했다. 반면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등록률이 감소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는 학사과정 등록금은 물가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석사학위 취득 비용은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률보다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다. 호주, 벨기에(플랑드르어권), 크로아티아, 이탈리아(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 통합), 리투아니아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석사 학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며, 리투아니아는 이 기간 동안 75%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학사 및 석사과정 합산), 루마니아, 스페인은 이 기간 동안 석사과정 등록금이 실질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무상 등록금인 4개 국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 자국 학생의 경우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핀란드는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도입했고, 스웨덴은 2011년에 비EU/EEA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직전에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사 및 석사 학비의 변화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호주와 리투아니아는 예외적으로 석사과정 연간 등록금이 같은 기간 학사과정의 등록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반대로 스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석사 학비가 학사 학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였다.

〈표 IV-2〉 2012~2013학년도~2022~2023학년도 학생 수 및 등록금 변동

(단위: 2012/2013년 =100)

국가명	2012~2013년~ 2021~2022년 학생 수 변화지수 (전일제, 시간제 포함) (2012/13=100)	2012~2013년~2022~2023년 등록금 변동률 지수 (2012~2013년 = 100)			
		현재가 기준		불변가 기준	
		학사	석사	학사	석사
OECD 회원국					
호주	124	121	145	98	118
오스트리아	104	100	100	80	80
캐나다	117	121	125	94	98
덴마크	106
핀란드	102
프랑스	123	94	97	83	85
독일	120	45	.	38	.
이스라엘	110
이탈리아	115	146	.	129	.
일본	101	100	100	95	95
대한민국	85
리투아니아	65	176	255	121	175
네덜란드	124	125	125	103	103
뉴질랜드	95	130	135	100	104
노르웨이	125
스페인	117	94	55	86	50
스웨덴	111
스위스	124
미국	89	119	121	101	102
기타 참가국					
플랑드르어(벨기에)	112	164	164	133	133
프랑스어(벨기에)	112	100	100	81	81
영국(잉글랜드)	131	240	.	200	.

주: 1. 등록금 기준 연도의 경우, 캐나다는 2020/21학년도, 호주와 독일은 2021학년도, 오스트리아, 영국(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은 2021/22학년도, 미국은 2019/20학년도 자료이며, 독일은 석사에 박사(학술프로그램)도 포함됨.

2. 프랑스어(벨기에)와 영국(잉글랜드) 학사에는 단기과정도 포함됨.

자료: OECD(2024), 표 C5.3. 재구성

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연평균 금액(USD PPP)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공공보조금/장학금) 수혜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9,715), 스위스(9,263), 덴마크(9,230), 오스트리아(9,073), 뉴질랜드(8,006) 순이었다. 이들 국가 가운데 덴마크의 경우 국가장학금만 받는 학생 비율은 66%, 국가장학금+정부학자금대출 수혜학생 비율이 18%, 지원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15%였으며, 학자금대출만 받은 학생 비율은 1% 이내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탈리아의 경우 학자금대출을 운영하지 않으며, 45%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가장학금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90%와 8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선별된 소수 학생에게 집중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 학자금대출(공공 대출/정부보증 민간대출) 수혜액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23,384), 프랑스(18,771), 노르웨이(15,109), 네덜란드(11,243) 순이었다. 영국의 경우 모든 학생이 대학수업료를 대출 기반 후불제로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크다. 그 외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경우 등록금이 낮은 수준(프랑스, 네덜란드)이거나 무상등록금(노르웨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비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자료가 있는 국가 가운데 독일, 미국, 스위스의 경우 2012~2013년도와 비교할 때 2022~2023년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수혜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2022~2023학년도 국가별 학자금 지원 현황

국가명	수업료 면제 학생 비율		연평균 금액		수혜학생 분포				2012~2013년 A+B 수혜자 비율
	학사	석사	국가 장학금 (A)	정부 학자금대출 (B)	B만	A만	A+B	지원 없음	
OECD 회원국									
호주			7,273	5,886	40	0	41	20	
오스트리아			9,073			16		84	15
캐나다			6,009	6,851			39	61	33
덴마크			9,230	4,908	0	66	18	15	
핀란드			2,537	6,940			56	44	52
프랑스	42	32	4,547	18,771	1	33		66	
독일			5,384	5,174			21	79	25

〈표 IV-3〉의 계속

국가명	수업료 면제 학생 비율		연평균 금액		수혜학생 분포				2012~2013년 A+B 수혜자 비율
	학사	석사	국가 장학금 (A)	정부 학자금대출 (B)	B만	A만	A+B	지원 없음	
이스라엘									
이탈리아	52	50	9,715		0	45	0	55	20
일본			4,706	7,889					
대한민국			3,469	5,195					
리투아니아				6,362	5	57	0	38	54
네덜란드	0	0	5,067	11,243					
뉴질랜드	20	0	8,006	8,774	46	4	23	27	88
노르웨이			5,484	15,109	8	2	62	28	
스페인	57	33				40	0	60	33
스웨덴			3,724	9,069	0	13	78	9	91
스위스			9,263	7,388	1	9	1	90	15
미국			2,202	2,879	7	35	38	20	82
기타 참가국									
플랑드르어(벨기에)			2,864		0	22	0	78	20
프랑스어(벨기에)	24	23			0	20	0	80	18
영국(잉글랜드)				23,384	93	0	0	7	84

- 주: 1. 등록금 기준 연도의 경우, 캐나다는 2020/21학년도, 호주와 독일은 2021학년도, 오스트리아, 영국(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은 2021/22학년도, 미국은 2019/20학년도 자료이며, 독일은 석사에 박사(학술프로그램)도 포함됨.
 2. 프랑스어(벨기에)와 영국(잉글랜드) 학사에는 단기과정도 포함됨.
 3. 프랑스는 국공립대학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4. 미국과 플랑드르어(벨기에)의 학자금대출은 단기과정과 학사과정만 포함됨.
 5. 국가장학금은 공공 보조금/장학금을 의미함.
 6. 학자금대출은 공공 대출 또는 정부보증 민간대출을 의미함.

자료: OECD(2024), 표 C5.3.

학비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 고등교육을 위하여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간접보조금제도가 시행되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모든 학생'에 대한 '해외유학비'와 '의료비' 지원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24개 조사 참여국 가운데 16개국이 '가족 및 자녀수당'을 지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 고등교육을 위한 학생(및 그 가족)에 대한 간접 보조금(2022~2023학년도)

(단위: 국가 수)

구분	예	예		아니요	해당 없음
		모든 학생	사회적 배경에 따른 선별지원		
학생 대상 보조금					
교통비		10	3	3	2
의료비		6	4	5	4
해외에서 지불해야 하는 학비를 포함한 해외 유학비		7	2	5	5
보조금 지급 식사 또는 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식료품비		5	2	7	4
사교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비용		2		10	6
도서 및 소모품비		1	1	9	6
기타 대상		1	7	4	3
가족에 대한 간접 보조금					
학생 신분예 따라 달라지는 가족 수당 또는 자녀 수당	16			8	
세금 감면, 세금 공제	12			10	

자료: OECD(2024), 그림 C5.4.

마. 종합 정리: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별 분류

OECD에서는 ① 등록금 없음 + 높은 재정 지원 ② 등록금 높음 + 높은 재정 지원 ③ 등록금 낮음 또는 중간 수준 +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등의 세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한다(OECD, 2024: 316). 재정지원 수준이 높다는 것은 대학생의 50% 이상이 장학금(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외 생활비 등의 비용도 장학금(또는 보조금)이나 대출을 이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대학 등록금 수준을 토대로 국가를 5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국공립대학 내국인 학부생 기준). 즉 ① 무상교육 국가 ② 연간 1,100달러 미만의 낮은 학비를 부과하는 국가 ③ 연간 1,400~3,100달러 사이의 비교적 저렴한 학비를 부과하는 국가 ④ 연간 4,500~6,000달러를 부과하는 국가 ⑤ 연간 9,500달러 이상 매우 높은 학비를 부과하는 국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분류를 대학 등록금 수준과 학자금 지원 수준을 조합하여 OECD 회원국을 다시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대학등록금 수준에 의한 국가 분류(국공립대학 내국인 학부생, 2022~2023학년도)

등록금 + 학자금 지원	대학등록금 구분	국가명	학자금 지원 형태
등록금 없음 + 높은 재정지원	무상교육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등록금은 무료, 생활비는 대출과 장학금(보조금)으로 충당
등록금 낮음 또는 중간수준 + 소수의 학생 대상 재정지원	연간 1,100달러 미만의 낮은 학비를 부과하는 국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이 45%, 재정지원은 보조금이나 장학금 중심(학자금 대출 미활성화)
	연간 1,400~3,100달러 사이의 비교적 저렴한 학비를 부과하는 국가	네덜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 등	
등록금 높음 + 높은 재정지원	연간 4,500~6,000달러를 부과하는 국가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등	연간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보조금)으로 충당(한국 52%, 캐나다 63%, 호주 75%)
	연간 9,500달러 이상 매우 높은 학비를 부과하는 국가	미국과 영국	영국은 90% 이상의 학생이 대출만으로 충당 미국은 장학금(보조금)+대출 35%, 장학금(보조금)만 7%, 대출만 7%

자료: OECD(2024)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 미국

가. 연방정부 고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 4”

미국 연방정부는 「2010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and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 개정으로 국가수준 교육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 5년 단위(2022~2026)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를 통한 인종 형평성 향상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85 on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라 연방교육부 형평성 향상계획 수립 후 주요 내용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 명의의 행정규칙인 「비법정 국고보조금 지출우선순위 및 정의(Secretary’s Supplemental Priorities and Definitions for Discretionary Grants Programs)」는 전략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연방정부 고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전략목표 4” 세부목표 및 추진 과제에는 고등교육 형평성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IV-6〉 참고).

〈표 IV-6〉 미국 고등교육 관련 “전략목표 4” 세부목표 및 추진 과제

세부목표	내용	
4-1 학업 및 학위 취득 지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이수율 제고(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 교육-인력수급체계 간 연결성 강화 → 고등교육 이수자 직업 기회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문 성취 및 학위 취득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 및 주정부 지원(특히 사회적 배려 학생-대학진학 첫 세대, 저소득, 유색인종, 장애학생)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보조금 제공) 고등교육기관 지원으로 저소득 학생의 학업 및 기관 차원의 관리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역 교육정책 및 고등교육기관 지원) 사회적 배려 계층을 중심으로 우수 교육과정, 심화학습자료 접근성, 학사유형(복수학위제 등), 대학생활동지원 및 진로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강화) 주정부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고등교육 체제 수준의 문제 해결책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접근성 확대) 정부기관·자선기관 협력으로 공공 및 민간 정보자원 확보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주정부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기관 모니터링 및 재정자원을 통한 기술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자 연구) 대입, 등록금, 학위, 졸업 후 성과 등 자료 수집, 연구전략 및 결과 확산 지원 등 재정지원 수혜자 유관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관련 정보 지원방식 개선) 학자금 계획서(College Financing Plan)의 투명성 및 용어 개선 - (다양성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역사적 흑인대학(HBCU)·미국원주민대학·소수자 지원대학·공립대학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 및 다양성 제고 		
4-2 학자금 지원 정책 개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등록금으로 미국인 6명 중 1명이 학자금 지원 수혜(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 정책 정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 상환방식 및 상환 면제방법 등 안내 필요('22. 5.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정책 종료로 상환 및 추심 재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절차 개선(대상 학생 수혜 용이성 증진) - 학자금 대출자 상환·상환면제 지원, 채무불이행 불이익 경감 지원 - 장학금 관련 민간위탁기관 책무성 향상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활용 제고) Studentaid.gov 등 사이트 기반 등록금, 학자금 대출 시 부채 영향, 중위소득, 학자금 보조 정책 및 지원 서식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방지를 위한 방법 안내) 타 부처 및 주정부 협력 및 지원 강화로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 부채의 장기화를 방지 방안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대상 증거기반 정책 사례 확산) 펄 그랜트(연방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 및 사회적 배려 집단 지원 방식에 대한 대학별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학자금 지원, 대출상환 및 상환면제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상환 정보 제공) 학자금 서비스 제공 주체 및 민간기관의 역량 개선으로 학생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상환방식 및 상담 지원 - (학자금 대출 기관 관리) 민간위탁기관의 책무성 및 기관대상 감독 강화, 학자금 대출 성과 강화 대책 마련 		

〈표 IV-6〉의 계속

세부목표	내용	
4-3 직업 및 교육 기회 확대	배경	- 고성장 산업 취업 가능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관련 구조화된 안내 제공 - 고등교육 이수 방법 안내로 고등교육을 통한 성공의 기회를 향상 필요
	내용	- 양질의 직업 및 교육기회, 중등·고등교육프로그램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
	추진 과제	-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 확대) 교육계와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확대 및 강화하여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및 성인교육 학습자들의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 확대
		-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 질 제고) 민간기업 및 기관 협력으로 학생 진로목표·흥미와 연계된 조직화된 직업 경험-교수-학습과정 통합 제공
		- (교육-직업기회 연계) 중등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양질의 직업기회 간 연계 강화
		- (교육-진로 연계 모델 개발 및 지원) 고용주, 인력투자위원회, 지역교육기관, 재취업 센터 등 연결로 교육기회와 진로 전환모델 개발 및 지원
		- (기관 지원 확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주정부 및 고등교육기관 지원
- (성인학습자 기본 지원 확대) 교육기회를 추구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기본적인 필요(주거·식사·교통 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4-4 고등교육 투명성 및 선택권 확대	배경	- 시장수요 연계 양질의 고등·직업교육 접근성과 사회적 격차 해결 필요(전공 및 직업·진로 접근성 공정성 강화로 사회적 배려 계층 이수율 개선) - 4년제 대학 편입 시 인종(흑인 및 라틴계) 및 소득수준(저소득)에 따른 격차 개선 필요
	내용	- 상급학교 진학과정 투명성 및 학생 선택권 강화, 학위 및 자격증 인정기준 명확화 등 중등·고등·전문교육 간 연계 강화
	추진 과제	- (접근성 확대)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 기초교양과목 수강 접근성 확대(사회적 배려 계층 집중 지원)
		- (편입 등 투명성 제고) 대학 간, 또는 자격증명과정에서 2·4년제 학위과정으로의 원활하고 투명한 편입체제 구현
		- (정부 지원) 교수요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주정부 지원

나.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장학금(펠 그랜트)과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며, 학자금대출액 규모가 펠 그랜트 지원액보다 약 두 배가량 크다. 2023년 가을학기 기준 펠 그랜트 수혜자와 학자금대출 신청자 수는 각각 640만명 정도이며, 펠 그랜트의 1인당 평균 수혜액은 4,930달러, 학자금대출의 1인당 평균금액은 9,310달러이다. 2023년 가을학기 기준, 펠 그랜트와 연방 학자금대출은 각각 학생 1인당 각종 학자금 지원 총액의 17%와 24%를 차지한다(Ma & Pender, 2023).

연방정부 세출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약 1,700억달러에서 2024년 약 1,400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학자금 대비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다(〈표 IV-7〉 참조). 장학금 세출은 2018년 이래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가 2023년 정체하고 2024년 소폭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학자금대출은 매년 4,300만명가량이 신청하고 학자금대출 총액은 1조 6,200억달러이다. 학자금대출 총액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자금대출 신청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1인당 학자금대출액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1인당 장학금액을 확대하여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7〉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액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2023년 불변))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¹⁾
연방정부	장학금	49,974	48,539	44,574	40,924	40,253	44,319
	학자금대출	110,741	107,301	99,689	93,312	87,199	85,686
	기타 ²⁾	17,778	16,543	15,340	13,775	11,975	10,874
	소계	178,494	172,382	159,602	148,011	139,427	140,879
기타 학자금 지원 ³⁾		309,437	306,883	290,829	280,191	268,265	270,014
계		487,931	479,265	450,431	428,202	407,692	410,893
연방정부 비중(%)		36.58	35.97	35.43	34.57	34.20	34.29

주: 1) 2023~2024년 자료는 추정치임

2) 근로장학금 및 세제혜택 관련 비용

3) 주정부, 대학, 사립기관 장학금 및 사설은행 학자금대출액 포함

자료: Ma & Pender(2023), Table S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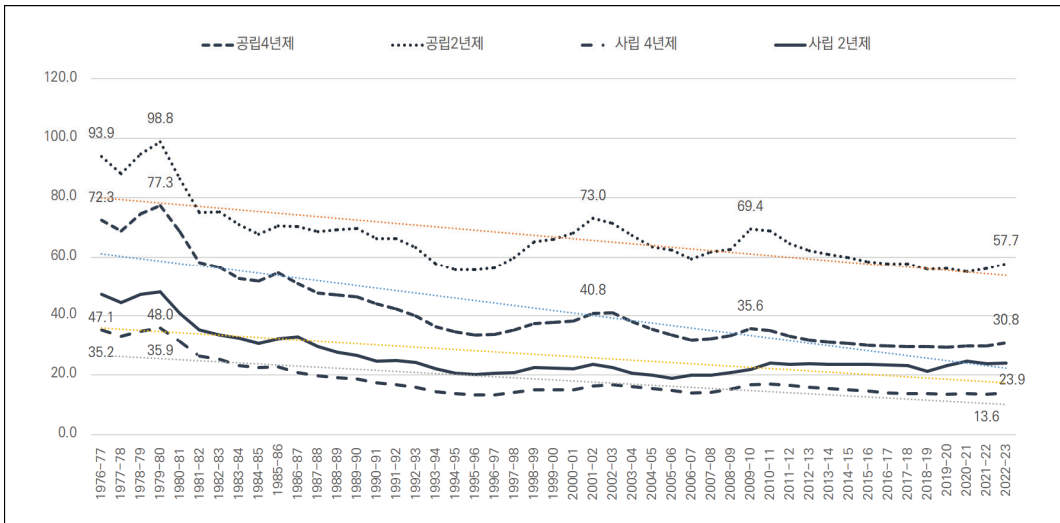
다. 연방 펠 그랜트(Pell Grant)

연방 펠 그랜트(Pell Grant)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연방 장학금으로, 우리나라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유사한 것이다. 연방 Pell Grant는 개정 「1965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HEA; P.L. 89-329) Title IV하에서 후기중등교육 학생을 지원하는 단일 연방정부 사업으로 가장 큰 것이다. Pell Grant는 전신이 ‘기본교육기회지원금(Basic Education Opportunity Grants)’으로 1973년부터 시작되었고, 2023회계연도에는 약 6,500만명의 학부생에게 31억달러를 지원하였다. 2019~2020년 기준 미국 전체 학부학생의 40% 정도가 Pell Grant를 받았으며, 2021~2022년 Pell Grant 수혜자의 약 92%가 총 가족소득 6만달러 미만이었다(Dortch, 2024).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이 대학등록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라면, Pell Grant는 등록금을 포함한 학업에 필요한 총 교육비(Cost of Attendance, 이하 COA)에 대한 지원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COA 대비 Pell Grant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22~2023년 공립 4년제 대학과 사립 4년제 대학은 각각 30.8%와 13.6%에 불과하였다([그림 IV-2] 참고). 대학등록금 대비 Pell Grant 역시 각각 70.7%와 19.1% 정도이다([그림 IV-3] 참고). 다만 소득수준별 장학금 수혜 등으로 4년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재학생의 가계부담 실질교육비는 1만 5천달러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8> 참고).

[그림 IV-2] 총 교육비(COA) 대비 Pell Grant의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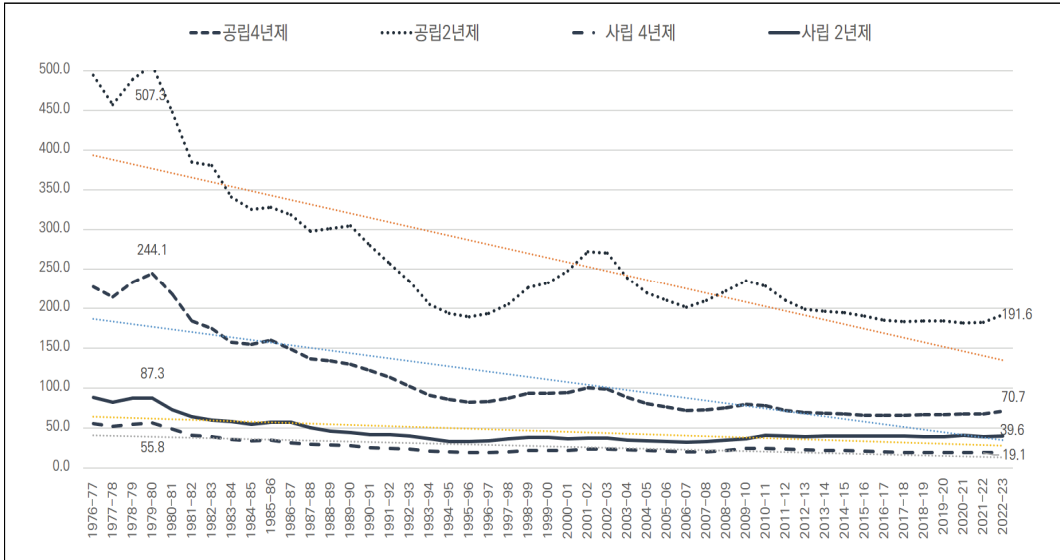


- 주: 1. 경상가 기준
2. 사립대학 자료에는 비영리, 영리기관이 모두 포함됨

- 자료: 1. Pell Grant 상한액 정보는 Dortch(2024)의 Appendix B. Historical Pell Grant Award Amounts 데이터 활용
2. 등록금, 총교육비 정보는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Chapter 3. Postsecondary Education, Chapter 4. Federal Funds for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통계 데이터 활용, https://nces.ed.gov/programs/digest/2023menu_table_s.asp

[그림 IV-3] 대학 등록금 대비 펠 그랜트 상한액 비중

(단위: %)



- 주: 1. 경상가 기준
2. 사립대학 자료에는 비영리, 영리기관이 모두 포함됨

- 자료: 1. 펠 그랜트 상한액 정보는 Dortch(2024)의 Appendix B. Historical Pell Grant Award Amounts 데이터 활용
2. 등록금, 총교육비 정보는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Chapter 3. Postsecondary Education, Chapter 4. Federal Funds for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통계 데이터 활용, https://nces.ed.gov/programs/digest/2023menu_tables.asp

<표 IV-8> 소득수준별 4년제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액 및 순 교육비

구분	2009~2010		2019~2020		2020~2021		2021~2022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장학금 수혜액(각종 무상지원, 수당 포함)								
전체 평균	\$5,980	\$15,560	\$8,600	\$25,290	\$8,960	\$26,620	\$9,400	\$28,070
\$0~\$30,000	9,080	17,460	11,800	26,230	12,240	27,820	12,790	29,740
\$30,001~\$48,000	8,330	18,710	11,390	29,870	11,820	31,340	12,510	33,510
\$48,001~\$75,000	4,910	16,810	8,400	28,340	8,910	29,970	9,710	31,920
\$75,001~\$110,000	2,270	14,650	4,780	25,290	5,090	26,600	5,730	28,080
\$110,001 이상	1,590	11,560	2,870	21,330	3,070	22,390	3,300	23,400

〈표 IV-8〉의 계속

구분	2009~2010		2019~2020		2020~2021		2021~2022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공립 (in state)	사립 (비영리)
가계 부담 실질 교육비(Net price of attendance)								
전체 평균	11,070	21,780	13,740	27,390	13,640	26,480	14,270	27,950
\$0~\$30,000	7,720	15,970	8,990	20,260	8,810	19,030	9,150	19,740
\$30,001~\$48,000	9,260	17,200	10,580	20,220	10,200	19,170	10,370	19,590
\$48,001~\$75,000	13,290	20,270	14,420	22,980	13,760	21,760	13,800	22,360
\$75,001~\$110,000	16,410	23,900	19,100	27,020	18,490	25,950	18,960	27,010
\$110,001 이상	17,880	30,210	22,410	35,600	21,750	34,450	22,800	36,280

자료: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Table 331.30의 데이터 활용

Pell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차로, 학생이 직접 연방 학자금 무료 신청서(FAFSA)를 제출해야 한다. FAFSA의 개인 재정정보를 토대로 평가된 두 가지 학생 재정지표, 즉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소득세 신고서상 가족 총 소득에서 특정 조정액을 뺀 금액) 수준 여부와 학생지원지수(Student Aid Index, SAI)에 따라서 Pell Grant 지급액이 결정된다(그림 IV-4) 참고). 최근 5년간 Pell Grant 지급 상한액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펠 그랜트(Pell Grant) 상한액

(단위: 달러)

회계연도	재량적 기본 상한액	법적(의무적) 추가액	총 상한액
2020~2021	5,285	1,060	6,345
2021~2022	5,435	1,060	6,495
2022~2023	5,835	1,060	6,895
2023~2024	6,335	1,060	7,395
2024~2025	6,335	1,060	7,395

주: 2017~2018 회계연도부터 법적(의무적) 추가 보너스는 1,060달러가 유지되고 있음.

자료: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관련 기관(LHHS)이 자금을 지원하는 계정에 대한 연간 세출 법안 검토, FY2020~FY2024, CRS.

[그림 IV-4] Pell Grant 예정액 결정 프로세스



주: AGI는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으로,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가족의 총 소득에서 특정 조정액을 뺀 금액, SAI는 학생지원지수(Student Aid Index)

라. 펠 그랜트(Pell Grant)의 주요 변화

1) 연방장학금 구매력 하락

연방 장학금인 펠 그랜트는 도입 이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펠 그랜트의 1인당 지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대비 구매력은 현저하게 감소해 왔다. 1993년에는 펠 그랜트의 최대금액을 지원받으면 국공립대의 학비와 캠퍼스 수수료의 90%를 충당할 수 있었고, 2001년에는 그 비중이 99.6%로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초반 이 지표가 급감했고

이후로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 2014년에는 62.7%만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등록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보다 높고, 펠 그랜트 지원액 인상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공립대학비는 120% 증가하였으나 펠 그랜트 최대금액은 50% 증가하는 데 그쳤다(College Board, 2014).

한편 국립 대학진학 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 NCAN)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불 가능한 금액과 학비를 추정하여 대학교육의 경제적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학비는 등록금, 기숙사비, 도서비 등의 제반 비용에 비상금 300달러를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지불능력은 펠 그랜트를 포함한 각종 장학금, 연방 학자금대출, 국가근로를 통한 소득, 가정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주 40시간을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을 때 소득의 합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공립 대학의 33%에만 재학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지불 가능금액이 학비 대비 1,690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2019년의 2,627달러에 비해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수업료 동결정책, 2021년 대규모 연방예산 편성 등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 펠 그랜트는 주요 고등교육 정책 중 하나이며 학생에게 직접 지원된다는 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이지만, 교육기회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대적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전만큼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7,000달러 수준인 펠 그랜트 최대 수혜금액을 1만 3,000달러로 두 배 인상하고 펠 그랜트 관련 예산을 법제화하자는 “더블 펠(#DoublePell)” 운동이 대학, 대학행정가 연합회 및 정치인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NASFAA, 2022).

2) 연방정부 개선 노력: 학자금 지원 절차 및 장학금 산정공식 개편

연방정부에서는 2020년 「연방 학자금 신청서 간소화 법(FAFSA Simplification Act)」을 제정해서 학생별 학자금 지원금액 산정공식 및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먼저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관련 정책은 산정공식 개편과 지원 절차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방 소득기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와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생이 매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신청서에 재산 및 소득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기존에 사용되던 산정공식은 신청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 기여도 추정치(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산출하고, 학생이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생활비 및 기타 소요비용에서 가구 기여도 추정치를 뺀 금액을 필요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최대 수혜금액(2024년 기준 7,395달러) 한도 내에서 펠 그랜트를 지원한 후 남은 금액만큼 연방 학자금 대출 및 기타 학자금의 수혜한도가 정해진다.

기존의 산정공식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 약 20%의 학생들의 가구 기여도 추정치가 0달러로 계산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상당수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명 ‘형제 할인(siblings discount)’인데, 가구소득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구당 대학 재학 중인 자녀의 수를 산정공식에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형제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가구 기여도 추정치가 과소추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와 같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산정공식은 가구 기여도 추정치 대신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 SAI)를 사용하여 중간 구간에 있는 학생들의 대상 수혜금액을 산정한다. 먼저 가구소득이 거주지의 최저생계소득의 175% 미만인 학생들을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SAI 산출값과 무관하게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학생들의 SAI 지수는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자산 중 학자금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하는데, 소득이 적을 경우 음수(-)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의 가구 기여도 추정치가 0값인 학생들의 재정지원 필요도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수 도입 이외에도 소득, 자산, 가구구성, 자산규모 산정 원칙 등을 개선해서 형제 할인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최대 금액 수혜자 수도 증가하였다. 수혜금액 한도는 2023년 가을학기 기준 전년 대비 500달러가 증가한 7,395달러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펠 그랜트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였다(Ma & Pender, 2024).

또 다른 변화로는 전반적으로 신청 절차와 공식이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서는 약 10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 가구소득이나 재산상황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이 직접 기입해야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부모 명의의 납세기록을 연동하여 자동 기입할 수 있었지만,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인 저소득층, 대학진학 첫 세대, 가구 및 소득구성이 복잡한 학생 등의 경우 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장학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50% 정도만이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신청서를 제출할 확률이 더 낮다(Ma & Pender, 2024).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서 간소화 작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2020년 관련 법 개정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정보제공 동의서만 제출하고 연방정부에서 직접 국세청 정보를 연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신청서 제출 시 수혜금액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상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정책 또한 실시한 바 있다. 임기 중 총 530만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총 1,888억달러의 상환을 면제했다. 상환을 시작할 당시 대비 대출잔액이 증가하거나, 15년 이상 상환을 진행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폐교한 경우 상환 면제 대상이 되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와 같은 형태의 상환 면제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 성별 및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정책이나 역사적 흑인대학 및 기타 소수자 지원대학에 지급되는 장학금 또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25).

3. 일본

가. 대학 등록금 추이

일본 국립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授業料, 등록금)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성령(省令)에서 정한 표준액을 따르고 있다. 각 국립대학은 표준액의 20%까지 상한(上限)할 수 있다. 2024년도 기준, 일본 국립대학의 입학금 표준액은 28만 2,000엔이며, 수업료는 53만 5,800엔이다. 2024년도까지의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표준액 추이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일본 국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추이(주간_1990~2024년)

(단위: 엔)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1990	206,000	339,600	2008	282,000	535,800
1991	"	375,600	2009	"	"
1992	230,000	"	2010	"	"
1993	"	411,600	2011	"	"
1994	260,000	"	2012	"	"
1995	"	447,600	2013	"	"
1996	270,000	"	2014	"	"
1997	"	469,200	2015	"	"
1998	275,000	"	2016	"	"
1999	"	478,800	2017	"	"
2000	277,000	"	2018	"	"
2001	"	496,800	2019	"	"
2002	282,000	"	2020	"	"
2003	"	520,800	2021	"	"
2004	"	"	2022	"	"
2005	"	535,800	2023	"	"
2006	"	"	2024	"	"
2007	"	"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分科会(第180回)·高等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第14回, 24.12.13.) 合同会議配付資料_【参考資料1】
関係データ集

공립대학은 입학생이나 보호자의 주소가 지역 내·외에 따라 입학금이 다르다. 지역 내의 경우는 납세자가 본인 또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지역 외 학생들보다 입학금이 적은 편이다.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지역 외 공립대학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일본 공립대학 지역 외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 추이(1990~2023년)

(단위: 엔)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1990	287,341	337,105	2007	399,351	536,238
1991	295,798	366,032	2008	399,986	536,449
1992	324,775	374,160	2009	402,720	536,632
1993	329,467	405,840	2010	397,149	535,962
1994	357,787	410,757	2011	399,058	535,959
1995	363,745	440,471	2012	397,595	537,960
1996	371,288	446,146	2013	397,909	537,933
1997	373,893	463,629	2014	397,721	537,857
1998	375,743	469,200	2015	397,721	537,857
1999	381,271	477,015	2016	393,426	537,809
2000	383,607	478,800	2017	394,225	538,294
2001	387,200	491,170	2018	393,618	538,633
2002	394,097	496,800	2019	392,391	538,734
2003	397,327	517,920	2020	392,111	536,382
2004	397,271	522,118	2021	391,305	536,363
2005	401,380	530,586	2022	389,125	536,195
2006	400,000	535,118	2023	374,371	536,191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分科会(第180回)·高等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第14回.) 合同会議配付資料(24.12.13.)_【参考資料1】
関係データ集

〈표 IV-12〉는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한 사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추이다. 2024년 8월에 오분샤(旺文社) 교육정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2024년도 대학 학비 평균액⁵⁾에 따르면, 지역 외 공립대학 입학금은 38만 2,423엔이고 수업료는 53만 6,391엔이다. 사립대학 평균액은 입학금이 25만 8,434엔, 수업료는 98만 5,236엔이다.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한 평균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외 공립대학 수업료의 평균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사립대학 수업료의 평균액은 100만엔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9월에 도쿄대학은 2025년부터 수업료를 20% 올려 64만 2,960엔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질 높은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대의 표준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이 30%나 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일부에서는 국립대의 표준액이 상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5) 旺文社(2024), 2024年度 大学の学費平均額(2024. 8. 6.) https://eic.obunsha.co.jp/file/educational_info/2024/0806.pdf

〈표 IV-12〉 일본 사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액 추이(1990~2023년)

(단위: 엔)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연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1990	266,603	615,486	2007	273,564	834,751
1991	271,151	641,608	2008	273,602	848,178
1992	271,948	668,460	2009	272,169	851,621
1993	275,824	688,046	2010	268,924	858,265
1994	280,892	708,847	2011	269,481	857,763
1995	282,574	728,365	2012	267,608	859,367
1996	287,581	744,733	2013	204,417	860,266
1997	288,471	757,158	2014	261,089	864,384
1998	290,799	770,024	2015	256,069	868,447
1999	290,815	783,298	2016	253,461	877,735
2000	290,691	789,659	2017	252,030	900,093
2001	286,528	799,973	2018	249,985	904,146
2002	284,828	804,367	2019	248,813	911,716
2003	283,306	807,413	2020	247,052	927,705
2004	279,794	817,952	2021	245,951	930,943
2005	280,033	830,583	2023	240,806	959,205
2006	277,262	836,297			

자료: 文部科学省, 大学分科会(第180回)·高等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第14回, 24.12.13.) 合同会議配付資料_【参考資料1】
関係データ集

나. 학자금 지원

학부생 대상의 경제적 지원에는 크게 ‘대여형 장학금’과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가 있다.

1) 대여형 장학금

대여형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제1형 장학금(무이자)’과 ‘제2형 장학금(이자)’ 두 종류가 있으며, 졸업 후에는 반환해야 한다. JASSO의 추천 기준에 근거하여 대학이 추천하고, JASSO에서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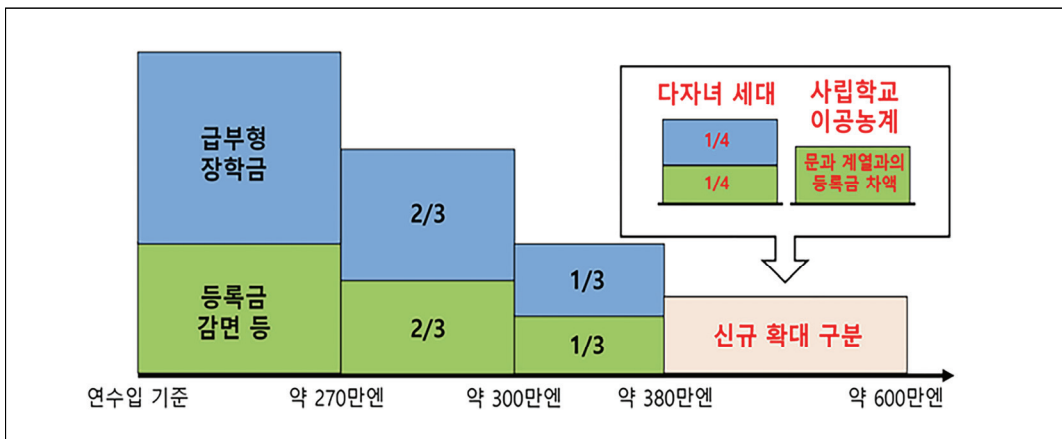
가계 기준에 따라 제1형 장학금은 연 최대 77만엔(자택 외, 월 6.4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제2형 장학금은 연 최대 144만엔(월 12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

일본은 2017년도에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 단기대학 및 전문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급부형 장학금(給付型奨学金) 제도를 창설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2018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8(이른바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업료 감면 및 급부형 장학금을 대폭으로 확충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4월부터 실시한 ‘고등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高等教育の修学支援新制度)’이다.

세대 수입과 자산 요건(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한 세대)을 충족하며, 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레포트 등으로 배울 의욕을 확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계 기준은 대상 학생과 생계유지자가 ‘수입 기준’ 및 ‘자산 기준’ 모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 ‘수입 기준’은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합계에 따라 I~IV 구분으로 나뉜다. ‘자산 기준’은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자산액 합계가 기준액보다 미만이어야 된다. 따라서 기준액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2024년부터 육아 지원 등의 관점에서 다자녀 세대인 중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이와 더불어 이·공·농과 계열 중간층에도 확대했다(그림 IV-5).

[그림 IV-5] 2024년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

- 신규 지원 구분 대상은 세대 연 수입이 600만엔 정도까지인 학부 단계(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4, 5학년생·전문학교)
- 다자녀 세대 지원: 부양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세대(부양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첫째부터 지원)가 대상
- 이공농계 지원: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학부·학과도 학위 수여 분야에 이학·공학·농학이 포함되면 대상

〈지급 수준〉

- 다자녀 세대 지원: 전액 지원 중 1/4 지원(급부형 장학금과 등록금 등 감면)
- 이공농계 지원: 사립학교 문과 계열과의 등록금 차액(인문·사회과학 계열과의 등록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착목하여, 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표 IV-13〉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수입 기준

지원 구분	수입 기준 ¹⁾
제Ⅰ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 시정촌 주민세) 소득 비율이 비과세일 것 ²⁾ - 구체적으로는,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합계가 100엔 미만일 것
제Ⅱ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³⁾ 합계가 100엔 이상 25,600엔 미만일 것
제Ⅲ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³⁾ 합계가 25,600엔 이상 51,300엔 미만일 것
제Ⅳ구분	-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지급액 산정 기준액 ³⁾ 합계가 51,300엔 이상 154,500엔 미만일 것

주: 1) 수입에 대해서는 2023년(1~12월)의 수입에 기반한 2024년도 주민세 정보를 통해 산출된 지급액 산정 기준액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지 심사함. 신청 후 수입 감소(실업 등)가 있어도 상황을 고려할 수 없음⁶⁾

2)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⁷⁾ 주택 대출 공제 같은 세액공제 등(임시적인 감세 조치 포함)은 수입 기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지급액 산정 기준⁸⁾ = 과세 표준액 × 6% - (시정촌 주민세 조정 공제액 + 시정촌민세 조정액)⁹⁾ (100엔 미만은 버림)

〈표 IV-14〉 일본 급부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산 기준

생계유지자 인원 수	기준액
2명일 경우	2,000만엔 미만
1명일 경우	1,250만엔 미만

급부형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과정(통신교육 이외의 과정)의 경우, 대학에서 급부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부터 정규 졸업 시기까지 세대의 소득금액에 근거한 구분(제Ⅰ~Ⅳ 구분)에 따라,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및 통학 형태(자택 통학·자택 외 통학)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월액(月額))이 매달 지급된다.¹⁰⁾

6) 신청 시 수입 등에 변경이 있어도, 심사엔 고려하지 않음.

7) 고향(ふるさと) 또는 임의의 지자체에 기부를 한 경우에, 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원칙으로 전액이 공제되는 제도(일정 상한은 있음)

8) 시정촌 주민세 소득할이 비과세인 사람은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산식과 관계없이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엔이 됨.

9) 정령(政令) 지정 도시에 대해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는(시정촌 주민세 조정 공제액 + 시정촌 주민세 조정액)에서 3/4를 곱한 액으로 함.

10) 주간, 야간제 동일

〈표 IV-15〉 국·공·사립대학 급부 장학금 지원 금액(주·야간제)

구분		국공립		사립	
		자택 통학	자택 외 통학	자택 통학	자택 외 통학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제 I 구분	29,200엔 (33,300엔)	66,700엔	38,300엔 (42,500엔)	75,800엔
	제 II 구분	19,500엔 (22,200엔)	44,500엔	25,600엔 (28,400엔)	50,600엔
	제 III 구분	9,800엔 (11,100엔)	22,300엔	12,800엔 (14,200엔)	25,300엔
	제 IV 구분 (다자녀 세대에 한함)	7,300엔 (8,400엔)	16,700엔	9,600엔 (10,700엔)	19,000엔
고등전문 학교 (4학년 이상)	제 I 구분	17,500엔 (25,800엔)	34,200엔	26,700엔 (35,000엔)	43,300엔
	제 II 구분	11,700엔 (17,200엔)	22,800엔	17,800엔 (23,400엔)	28,900엔
	제 III 구분	5,900엔 (8,600엔)	11,400엔	8,900엔 (11,700엔)	14,500엔
	제 IV 구분 (다자녀 세대에 한함)	4,400엔 (6,500엔)	8,600엔	6,700엔 (8,800엔)	10,900엔

주: 1. 국공립 경우, 독립행정법인·지방 독립행정법인이 설치한 학교를 포함함.
 2. 생활보호 세대이면서 자택에서 통학하는 사람 및 아동 양호시설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 안의 금액에 해당함.

통신교육 과정은 정규 졸업 연도까지 세대의 소득 금액을 근거한 구분(제 I ~IV구분)에 따라, 수업 형태(인쇄 교재, 스쿨링, 방송, 미디어),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통학 형태(자택 통학·자택 외 통학)와 관계없이 〈표 IV-16〉의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표 IV-16〉 통신교육 과정 학생에 대한 급부형 장학금

구분	(국립·공립·사립/자택·자택 외 공통)
제 I 구분	51,000엔
제 II 구분	34,000엔
제 III 구분	17,000엔
제 IV 구분 (다자녀 세대에 한함)	12,800엔

또한 급부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수업료·입학금 면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세대의 소득금액 구분(제 I ~IV구분)에 따라,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및 학교 종류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입학금·수업료 감면의 상한액(年額)으로 하며, 제 II ~IV구분 학생은 제 I 구

분의 2/3, 1/3, 1/4 금액으로 감면된다. 대학 1년차 후기 이후부터 지원받는 사람은 입학금 면제·감액을 받을 수 없다.

〈표 IV-17〉 제Ⅰ~Ⅲ구분 입학금·수업료 감면액(주·야간제)

구분		국공립 ¹⁾		사립 ²⁾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대학	제Ⅰ구분	282,000엔 (141,000엔)	535,800엔 (267,900엔)	260,000엔 (140,000엔)	700,000엔 (360,000엔)
	제Ⅱ구분	188,000엔 (94,000엔)	357,200엔 (178,600엔)	173,400엔 (93,400엔)	466,700엔 (240,000엔)
	제Ⅲ구분	94,000엔 (47,000엔)	178,600엔 (89,300엔)	86,700엔 (46,700엔)	233,400엔 (120,000엔)
단기대학	제Ⅰ구분	169,200엔 (84,600엔)	390,000엔 (195,000엔)	250,000엔 (170,000엔)	620,000엔 (360,000엔)
	제Ⅱ구분	112,800엔 (56,400엔)	269,000엔 (130,000엔)	166,700엔 (113,400엔)	413,400엔 (240,000엔)
	제Ⅲ구분	56,400엔 (28,200엔)	130,000엔 (65,000엔)	83,400엔 (56,700엔)	206,700엔 (120,000엔)
전수학교 (전문과정)	제Ⅰ구분	70,000엔 (35,000엔)	166,800엔 (83,400엔)	160,000엔 (140,000엔)	590,000엔 (390,000엔)
	제Ⅱ구분	46,700엔 (23,400엔)	111,200엔 (55,600엔)	106,700엔 (93,400엔)	393,400엔 (260,000엔)
	제Ⅲ구분	23,400엔 (11,700엔)	55,600엔 (27,800엔)	53,400엔 (46,700엔)	196,700엔 (130,000엔)
고등전문학교 (4~5학년생)	제Ⅰ구분	84,600엔	234,600엔	130,000엔	700,000엔
	제Ⅱ구분	56,400엔	156,400엔	86,700엔	466,700엔
	제Ⅲ구분	28,200엔	78,200엔	43,400엔	23,400엔

주: 1. 국공립 경우, 독립행정법인·지방 독립행정법인이 설치한 학교를 포함함.

2. ()는 야간제임.

1) 국립대학은 학비의 표준액이 문부과학성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각 대학의 판단으로 20% 한도로 증액도 인정하고 있음. 공립 대학은 지역 학생과 그 외 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에서 입학금 차가 있는 대학이 많음.

2) 문부과학성은 문과, 이과, 의과 등과 학부를 대략적으로 나눠 학비 평균치 데이터를 내고 있음.

〈표 IV-18〉 제IV구분 입학금·수업료 감면액

구분			입학금 감면액	수업료 감면액 (연액)
대학	다자녀	국공립	70,500엔	134,000엔
		사립	65,000엔	175,000엔
	이공농	사립	86,700엔	233,400엔
단기대학	다자녀	국공립	42,300엔	97,500엔
		사립	62,500엔	155,000엔
	이공농	사립	62,500엔	155,000엔
전문학교 (전문과정)	다자녀	국공립	17,500엔	41,700엔
		사립	40,000엔	147,500엔
	이공농	사립	40,000엔	147,500엔
고등전문학교 (4~5학년생)	다자녀	국공립	21,200엔	58,700엔
		사립	32,500엔	175,000엔
	이공농	사립	43,400엔	233,400엔

사립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의 통신 과정 입학금 감면 상한액(1회 한정 지급)은 3만엔, 수업료 감면 상한액(연액(年額))은 13만엔이다. 현재 고등전문학교 및 국공립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에서는 통신 과정이 개강되어 있지 않다.

〈표 IV-19〉 통신 과정 입학금·수업료 감면 상한액

구분	사립	
	입학금	수업료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30,000엔	130,0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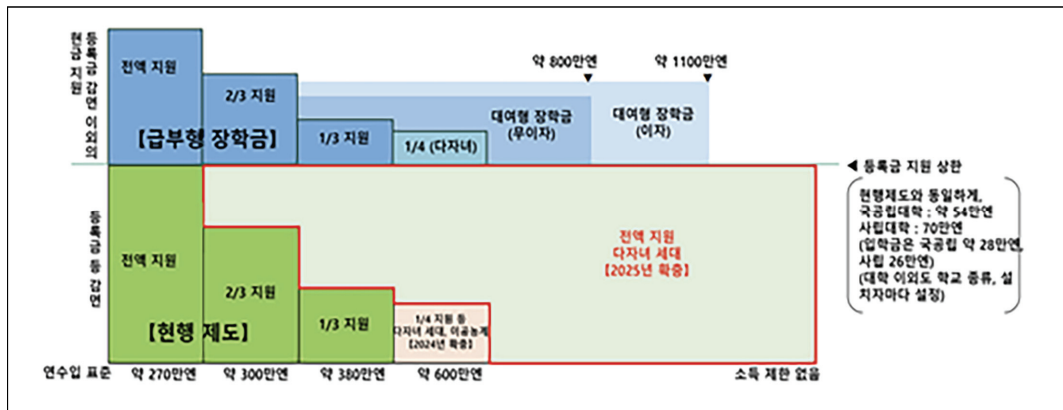
다. 최근 동향

2025년도부터는 다자녀 세대 학생에게 소득 제한 없이 대학 수업료·입학금을 국가가 정한 일정액까지 무상으로 지급한다. 여기에는 2024년도 이전부터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입학 후 각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되며, 3명 동시에 부양(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받고 있는 동안은 첫째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첫째 자녀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등 부양에서 벗어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정한 일정액은 <표 IV-20>처럼 현행 제도의 전액 지원과 같다.

[그림 IV-6] 2025년 급부형 장학금 및 수업료 감면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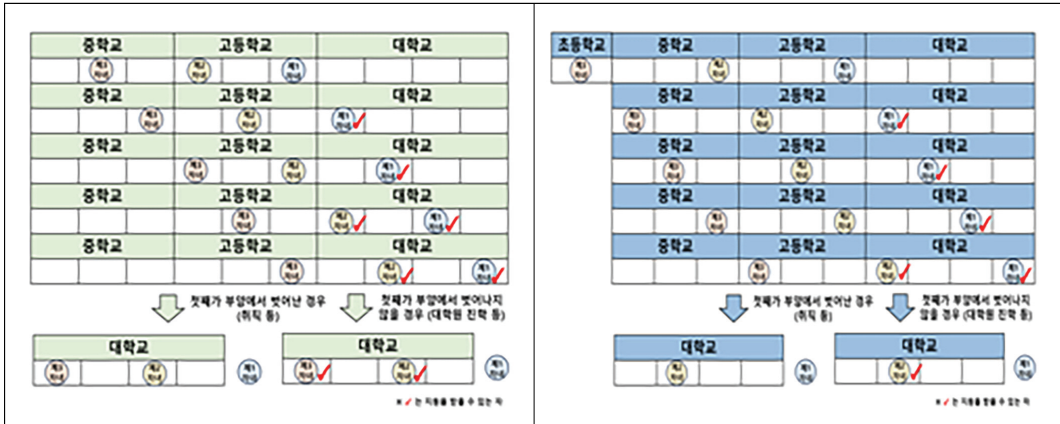


<표 IV-20> 다자녀 세대 관련, 국가가 정한 일정액

	국공립		사립	
	입학금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대학	28만엔	54만엔	26만엔	70만엔
단기대학	17만엔	39만엔	25만엔	62만엔
고등전문학교	8만엔	23만엔	13만엔	70만엔
전문학교	7만엔	17만엔	16만엔	50만엔

이를 통해 둘째 자녀까지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셋째 자녀는 대상이 될 확률이 낮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선 방향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7] 다자녀 세대 지원(세 자녀가 2살·3살 터울인 경우)



자료: 文部科学省, 令和7年度からの奨学金制度の改正(多子世帯の大学等の授業料等無償化)に係るFAQ를 토대로 일부 작성자 편집.

또한 2025년부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일부 학업 성과 측정 요건이 변경되며, 2024년도 이전부터 재학한 학생도 적용된다.

〈표 IV-21〉 2025년 학업 요건 적정화 주요 내용

구분	기존 내용(→ 변경 내용)
경고(지원은 계속) 되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률이 8할 이하 【변경 없음】. 반 학기 15회 수업 중 결석이 3번 이상 - 취득 학점 수 6할 → 7할 이하로 변경: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가 124학점인 경우) 학점 수가 1학년(18 → 21학점 이하), 2학년(37 → 43학점 이하), 3학년(55 → 65학점 이하), 4학년(74 → 86학점 이하) - GPA(성적 평가)가 소속한 학부 등에서 하위 1/4인 경우 【변경 없음】
폐지(지원 끊김) 되는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연한 내에 졸업·수료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 없음】 - 출석률 5 → 6할 이하로 변경. 반 학기 15회 수업 중 결석이 8 → 6회 이상 - 취득 학점이 5 → 6할 이하로 변경: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가 124학점인 경우) 학점 수가 1학년(15 → 18학점 이하), 2학년(31 → 37학점 이하), 3학년(46 → 55학점 이하), 4학년(62 → 74학점 이하) - 경고 요건에서 2회 연속으로 해당 【변경 없음】 ※ 2회째의 경고가 GPA(성적 평가) 요건뿐인 경우, 지원 끊김이 아니라 다음 판정까지 지급 정지

4. 호주

가.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개요¹¹⁾

호주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지원법(Higher Education Support Act, HESA) 2003」에 의하여 재정을 지원한다. 본 법은 연방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보조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지원하거나 일반적으로 대출 형식으로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교육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¹²⁾ 교육부는 HESA 2003에 입각하여 전공 교육, 공정성, 정액 보조금 계획 등을 관할하고, 호주국세청과 협력하여 대학 학자금 대출 계획을 수립한다. 「고등교육 품질과 표준기관에 관한 법률 2011(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Act 2011)」에 따라서 고등교육의 기준과 자격을 책임 관리한다. 「유학생 교육서비스에 관한 법률 2000(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과 「호주 연구협의회 법률 2001(Australian Research Council Act 2001)」 관련 사항 역시 교육부가 관장한다.

2012년에 출범한 고등교육품질표준기관(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은 고등교육의 품질과 기관 표준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학생교육서비스에 관한 법률 2000(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관련 규제 기능도 담당한다. 고등교육표준패널(Higher Education Standards Panel)의 자문에 의거하여 고등교육품질과표준기관의 권한 아래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고등교육표준체계(한계점 표준) 2021’은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과 과정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표준패널을 임명하여 고등교육의 표준 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자문을 구한다. 표준 제정 이전에는 각 주 및 준주 정부의 교육부 장관과 고등교육품질표준기관이 연방정부의 교육부 장관에 자문하였지만, 이후 실무에서 표준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들에 관하여 패널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고등교육기관 교부금(주로 교육 목적으로 대학에 지급되는 교부금) ② 학자금 대출(학비 및 기타 비용을 대출받는 학생을 대신하여 대학에 지급되는 학자금) ③ 학생 수입 지원금(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금) ④ 고등교육기관 연구교부금(연구 목적으로 대학에

11) 호주와 영국의 운영 사례는 남수경(2025)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2) '(2) 제도적 재정지원 근거와 경과'의 내용은 Andrew Norton(2023)을 요약·정리함.

지급되는 교부금).

2021~2022년 기준 연방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제공한 지원규모는 약 222억 달러였다. 이 중 153억달러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전년도(2020~2021년) 학생 대출 상환금은 50억달러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방정부교부금(CGS)으로 72.8억달러였으며, 그 다음으로 HECS-HELP(46.8억달러), FEE-HELP(19.4억달러), 청년 수당(17.4억달러), 연구지원 프로그램(RSP)(14.3억달러) 순이었다.

〈표 IV-22〉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기관 및 학생 재정지원 개요(2021~2022년)

대분류	중분류	사업	지원액 (\$billion)
1) 교육 관련 교부금 (Teaching-related grants)(\$7.9billion)	연방정부학생 지원금	연방정부교부금제도	7.28
		취업준비졸업 이전기금	0.35
		NPILF ¹⁾	0.23
2) 학자금 대출(\$6.95billion)	소득연계대출	HECS-HELP	4.68
		FEE-HELP	1.94
		Student Start-up	0.16
		SA-HELP	0.12
		OS-HELP	0.05
3) 소득 보조(\$2.5billion)	Youth Allowance ²⁾	16~24세 학생 생활비 보조	1.74
	Austudy ²⁾	25세 이상 학생 생활비 보조	0.59
	Abstudy ²⁾	원주민 학생 생활비 보조	0.15
4) 공평성 프로그램(대학경유)(\$0.36billion)		원주민, 지역민 및 저소득층 학업성취 기금(IRLSAF), 원주민 학생 프로그램, 장애지원 등	0.36
5) 연구 교부금(Research Grants)(\$4.5billion)	프로젝트 교부금	호주연구위원회	0.74
		국립건강의료연구위원회(NHMRC) ³⁾	0.70
		의학연구미래기금(MRFF) ³⁾	0.28
		기타 연방정부 경쟁 보조금	0.26
	총액교부금	연구훈련 프로그램	1.07
		연구지원 프로그램	1.43
6) 기타 소규모 교부금(\$.1billion)			0.10
총액			22.23

주: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은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지출만을 기반으로 한 통계임.

1) NPILF: 국가우선사업 및 산업연계기금(National Priorities and Industry Linkage Fund), IRLSAF: 원주민·지역주민·사회 및 경제배경이 열악한 호주인성취기금(Indigenous, Regional and Low SES Attainment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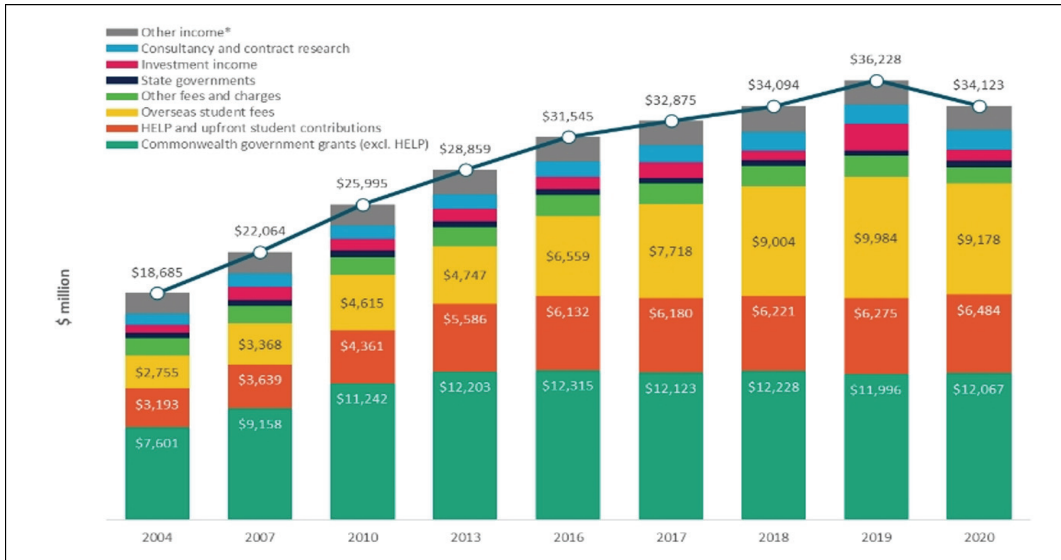
2) Youth Allowance, Austudy and Abstudy 지출은 2022년 6월 고등교육 수혜자 비율을 기반으로 추정되었음.

3) NHMRC와 MRFF 지출은 대학에만 해당함.

자료: Norton, A. Mapping Australian higher education 2023(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2023), pp. 82~83의 Table 2: Overview of Commonwealth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students, 2021~22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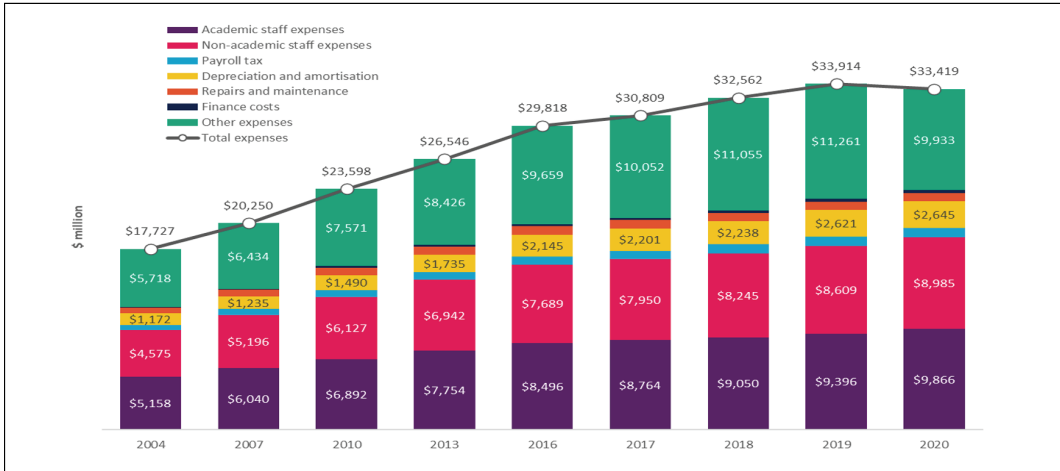
2020년 호주 대학의 총 운영 수익은 2019년 363억달러에서 실질 기준 5.9%(21억달러) 감소한 341억달러에 그쳤는데, 감소의 원인은 유학생등록금 수입 감소에 의한 것이다. 전체 수익 중 호주 정부 보조금(HELP 제외)으로부터의 수익은 2004년 40.7%에서 2019년 33.1%로 감소했다가 2020년에는 35.4%로 증가하였다. 유학생 등록금 수입은 2004년 14.7%에서 2019년 27.6%로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국경 폐쇄로 26.9%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총 운영 수익이 5.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운영지출은 2019년 339억달러에서 334억달러로 실질 기준 1.5%(또는 5억 2,400만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0년에는 총 직원 복리후생비(46% 증가)와 금융비용(4% 증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 항목이 감소하였다.

[그림 IV-8] 호주 대학의 수입 재원 추이(2020년 달러 기준)



자료: Universities Australia, "2022 Higher Education Facts and Figures", 2022. 6., p. 29. 그림 16.

[그림 IV-9] 호주 대학의 항목별 지출 추이(2020년 달러 기준)



자료: Universities Australia, "2022 Higher Education Facts and Figures", 2022. 6., p. 30. 그림 17.

나. 일반대학 전공 계열별 평균 등록금 현황

호주의 대학 등록금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전공 클러스터별 총 교육비에 대한 학생분담금과 정부분담금 구성비에서 '학생분담금 상한액'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매년 전공 클러스터별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이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 상한액 등이 정해진다. 학생분담금에 대해서 학생은 선불로 낼 수도 있고, 후불(학자금대출)로 지불할 수도 있었다. 2022학년도까지는 학생분담금을 선불로 낼 경우 10% 할인액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선불로 지불할 수는 있으나 할인제도는 폐지되었다.

호주의 경우 후불제, 즉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학생분담금은 소속 대학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이자 정도나 상한액 정도가 다르다. 즉 대학인증을 통과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되면 충분한 정부분담금을 지원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 조건으로 수업료를 충당할 수 있는 반면, 소속 대학의 질적 수준이 낮게 평가받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유리한 조건으로 학생분담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연방의 지원(CGS funding)을 받을 수 있는 학생(Commonwealth-Supported students)으로 분류하고, 그 외 학생을 교육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학생(full-fee-paying students)으로 구분한다.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교육비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 대학이 외국인 학생이나 전액을 지불하는 국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교육비 최고액에 법적인 제한이 없고 시장 원리로 결정된다.

연방지원 대상 학생의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방 분담금과 학생 개인 분담금의 총합으로 재정지원 가능 최대치와 동일하다. 평균 등록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전공계열에 따라서 다양하다. 연방 및 학생 분담금의 개념은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장래 소득 및 교육비용을 토대로 불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반면, 2021년 이후 국가우선순위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 연방분담금을 낮추고 학생분담금을 높였다. 즉 2020학년도까지는 총 8개의 전공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정부분담금이 결정되었으나(〈표 IV-23〉 참고), 2021학년도 부터는 총 4개의 전공클러스터로 정부분담금 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되 학생분담금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공 클러스터별 학생분담금과 정부분담금은 〈표 IV-24〉와 같이 매년 인상되었다.

〈표 IV-23〉 호주 전공 클러스터별 학생과 정부 분담금 상한액(2020년)

(단위: 달러)

클러스터	해당 전공군		학생분담금(등록금) 상한액	연방정부분담금 (정부지원금)
클러스터 1	법률, 회계, 행정, 경제, 상업		11,155	2,198
클러스터 2	인문학		6,684	6,116
클러스터 3	수학, 통계, 행동 과학, 사회, 컴퓨팅, 건축 환경, 기타 보건	수학, 통계, 컴퓨팅, 건축 환경 또는 기타 보건	9,527	10,821
		행동과학 또는 사회과학	6,684	
클러스터 4	교육		6,684	11,260
클러스터 5	임상 심리학, 연합 보건, 외국어, 시각 및 공연 예술	임상 심리학, 외국어, 시각 및 공연 예술	6,684	13,308
		연합 보건	9,527	
클러스터 6	간호		6,684	14,858
클러스터 7	공학, 과학, 측량		9,527	18,920
클러스터 8	농업, 의학, 치의학, 수의학	의학, 치의학, 수의학	11,155	24,014
		농업	9,527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allocation of units of study to funding clusters,"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resources/2025-allocation-units-study-funding-clusters>, 검색일자 2025. 2. 20.

〈표 IV-24〉 호주 전공 클러스터별 학생과 정부 분담금 상한액(2023~2025년)

(단위: 달러)

클러스터	해당 전공군	하위 전공군	학생분담금(등록금) 상한액			연방정부분담금 (정부지원금)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클러스터1	법률, 회계, 행정, 경제, 상업, 커뮤니케이션, 사회 및 문화	법률, 회계, 행정, 경제, 상업, 커뮤니케이션	15,142	16,323	16,992	1,147	1,236	1,286
		사회 및 문화 (역사, 철학 등)						
		사회 및 문화 (정치, 사회, 인류학 등)						
클러스터 2	교육, 임상 심리학, 영어, 수학, 통계, 연합 보건(Allied Health), 기타 보건, 건축 환경, 컴퓨팅, 시각 및 공연 예술, 전문 진로 심리학, 전문 진로 사회복지	교육, 임상 심리학, 영어, 수학, 통계	4,124	4,445	4,627	13,836	14,915	15,526
		연합 보건, 기타 보건, 건축 환경, 컴퓨팅, 시각 및 공연 예술, 전문 진로 심리학, 전문 진로 사회복지	8,301	8,948	9,314			
클러스터 3	간호학, 원주민 및 외국어, 공학, 측량학, 환경학, 과학	간호학, 원주민 및 외국어	4,124	4,445	4,627	16,969	18,292	19,041
		공학, 측량학, 환경학, 과학	8,301	8,948	9,314			
클러스터 4	농업, 의학, 치의학, 수의학, 병리학	농업	4,124	4,445	4,627	28,196	30,395	31,641
		병리학	8,301	8,948	9,314			
		의학, 치의학, 수의학	11,800	12,720	13,241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allocation of units of study to funding clusters,"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resources/2025-allocation-units-study-funding-clusters>, 검색일자 2025. 2. 20.

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

사립대인 호주 가톨릭대학을 제외한 테이블 A 대학의 최근 5년 장학금, 교내보조금, 상금의 지출 내역은 〈표 IV-25〉와 같다. 2017년에 17억달러 규모에서 2018년 20억달러 규모로 증가한 이후에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호주는 학자금 대출 중심의 대학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25〉 최근 5년 호주 테이블 A 대학 장학금, 교내 보조금, 상금의 추세

(단위: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학금, 교내 보조금, 상금 (Scholarships, Grants and Prizes)	1,767,768	2,001,304	2,159,346	2,202,900	2,184,693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allocation of units of study to funding clusters,"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resources/2025-allocation-units-study-funding-clusters>, 검색일자 2025. 2. 20.

호주의 고등교육 기여금제도(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CS)는 고등교육 진학률의 상승으로 고등교육 비용이 증가하여 1989년 이후 대학 등록금 제도가 실시되고 무상교육에서 유상교육으로 고등교육 체계가 변화하면서 도입되었다. 근거 법률은 「고등교육지원법」, 「VET 학생 대출법」 등이며, 대출 대상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가능하다. 기존의 HECS는 2005년에 고등교육 학자금대출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으로 대체되었다.

고등교육 학생을 위한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빠르게 확산되어서 현재 5종이 운영 중이다. HELP는 HECS-HELP, FEE-HELP, SA-HELP, OS-HELP, STARTUP-HELP로 구성된다.

먼저 HECS-HELP는 정부가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방후원자격(Commonwealth supported place, CSP) 고등교육기관(여기에는 공립대학교, 일부 국가전략 전공 사립대학교, 대학원의 일부 포함)에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대출제도이다. 연방정부 학비 지원 대상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수업료(개인분담금)의 전체나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 받게 되고, 이후 학생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세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된다. 상환 실질이자율을 0%로 두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금액이 상승하는 구조로, 해당 연도 3월 CPI(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다. 2023년에 HECS-HELP를 통한 대출은 약 49억달러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CSP 기관이 아닌 곳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가 수업료에 포함되어 수업료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출이 바로 FEE-HELP이다. FEE-HELP는 주로 국공립대학 대학 학생, 국공립대학 이외 재학, 준비프로그램(preparatory programs)이나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호주에서 인정받으려는 이민자를 위한 교량 과정(bridging course), OUA가 제공하는 과목, 마이크로자격증(microcredential)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제도이다. FEE-HELP 이용자는 20%의 대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컨대 학자금대출 3천달러를 받으면 수수료 600달러(대출금의 20%)가 더해져 총 3,600달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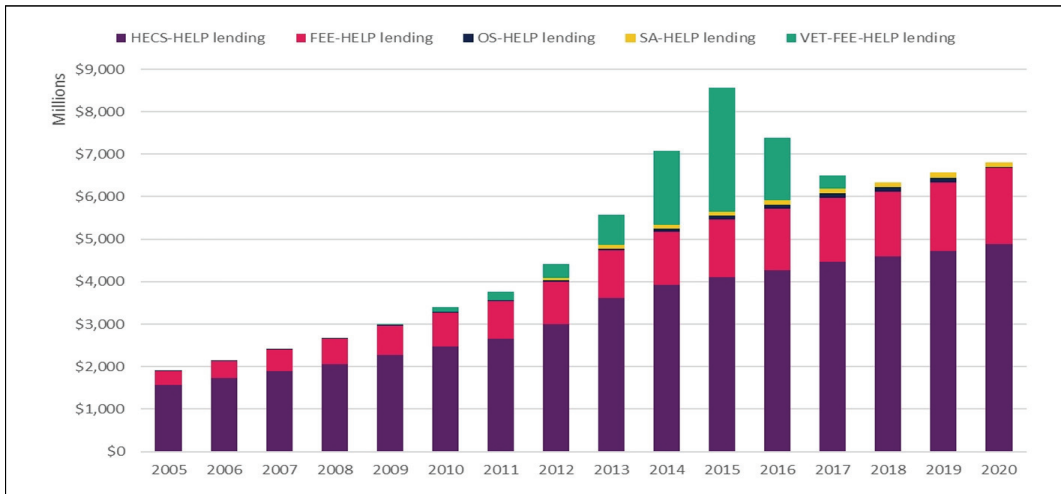
상환해야 한다. 2023년에 FEE-HELP의 대출 규모는 19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사립대 학생이 전체의 11%,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제공기관의 학생이 28% 수준을 차지한다. 고등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별도로 운영되던 학자금대출은 2017년 1월 1일부터 VET FEE-HELP로 대체되었다.

한편 SA-HELP와 OS-HELP는 교육비 이외의 비용을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SA-HELP는 학생 서비스와 편의시설 비용(student services and amenities fee, SSAF)을 지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다. OS-HELP는 CSP(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 등록되어 있고 해외에서 공부하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간 신규 HELP 대출 총액이 2010년 34억달러에서 2015년 86억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주도형 시스템의 도입과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FEE-HELP(VET FEE-HELP)의 도입에 의한 것이다. 2019년 신규 대출은 문제가 많았던 VET FEE-HELP 제도가 VET Student loan으로 전환, 대체된 이후 약 66억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림 IV-10] 호주 학자금대출 유형별 연간 신규 HELP 대출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Universities Australia, "2022 Higher Education Facts and Figures", 2022. 6., p. 25. 그림 12.

끝으로 STARTUP-HELP는 Startup Year 과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Startup Year 과정은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술, 역량 및 인맥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과정(accelerator program course)이다. STARTUP-HELP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및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호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Startup Year 과정에 등록하되, 수학하는 기관에서 STARTUP-HELP 대출 가능 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FEE-HELP와 VET FEE-HELP, HECS-HELP, VET 학자금 대출 등을 포괄하여 통합 HELP 대출 한도제(The combined HELP loan limit)가 도입되었다. 2024년 기준 HELP 통합 대출 상한액은 일반학생의 경우 12만 1,844달러이며, 의치약학 분야 학생의 경우 17만 4,998달러이다.¹³⁾ 이러한 금액이 2025년에는 각각 12만 6,839달러와 18만 2,172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¹⁴⁾

〈표 IV-26〉 호주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대출 유형	주요 연혁	용자 대상	연간 대출수(명)	연간 대출액(달러)
HECS-HELP	1989년 HECS 시작, 2005년 HECS-HELP 전환	(연방의 지원을 받는) 학생의 개인분담금	787,394 (2021년)	47억(2021년) 49억(2023년 추정)
FEE-HELP	2005년 시작, 1994~2004년 OUA 학생을 위한 OLPDS, 2002~2004년 해외전문가 교량과정 BOTPLS, 2002~2004년 대학원생을 위한 PELS 대체	등록금을 전액납부하는 국내학 생의 교육비, OUA비, 해외에서 훈련받은 전문가 교량과정, 마이크로자격증 (microcredentials) 일부	155,721 (2021년)	19~20억 (2021~2023년)
OS-HELP	2005년 시작	해외유학 비용	16,661(코로나19 이전 2019년)	1억 6,800만(2019년) 1억 900만 (2023년 추정)
SA-HELP	2012년 시작	학생 서비스와 편의시설 비용	522,673 (2021년)	1억 2,100만 (2023년 추정)
STARTUP-HELP	2023년 입법, 2024년 시작	스타트업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2,000 (매년)	2,400만 추정
Student start-up Loan	2016년 시작, 목적이 유사한 1998~2003년 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1993~1997년 Austudy/Austudy Supplement 대체	고등교육 소득지원 수령학생을 위한 생활비	91,600 (2020~2021년)	1억 5,800만 (2021~2022년)

1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 2024. 12. 21. 기준

14)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studyassist.gov.au/loan-eligibility/your-borrowing-limit>, 2024. 12. 21. 기준

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주요 내용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보통 고용주가 학생 채무자의 급여에서 분할상환금을 공제한 후 PAYG 시스템으로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송금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용자 채무자는 자신의 국제 소득을 호주국세청에 보고하고 호주 내 채무자와 동일한 물가 상승분 지급 협약과 이자율을 활용하여 상환한다. HELP는 상환 실질이자율을 0%로 두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상환 금액이 상승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HECS-HELP의 경우,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고 해당 연도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한다. HECS-HELP를 선납부할 경우 2022년까지는 10% 할인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더 이상 할인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크게 자발적 상환과 의무 상환으로 구분된다. 자발적인 상환은 호주국세청이 교육부에 상환을 보고하면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상환하여 HELP 잔액을 갚아 가는 제도이다. 한편 의무 상환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상환이 진행되는 제도이다. 2023~2024년 발생한 소득에서 의무적인 상환의 기준점은 5만 1,550달러이다. 의무 상환액은 학자금대출액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고용 계약을 맺으면 고용인에게 HELP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용주는 PAYG(Pay as you go) 원천징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연도 동안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호주국세청에 의하여 의무적인 상환액이 계산되는데, 채무자의 사망 및 파산 시에도 면제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표 IV-27〉 호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율(2024~2025 소득 연도 기준)

상환 수입	상환 비율
\$54,435 미만	0
\$54,435~\$62,850	1.0%
\$62,851~\$66,620	2.0%
\$66,621~\$70,618	2.5%
\$70,619~\$74,855	3.0%
\$74,856~\$79,346	3.5%
\$79,347~\$84,107	4.0%
\$84,108~\$89,154	4.5%
\$89,155~\$94,503	5.0%
\$94,504~\$100,174	5.5%
\$100,175~\$106,185	6.0%

〈표 IV-27〉의 계속

상환 수입	상환 비율
\$106,186~\$112,556	6.5%
\$112,557~\$119,309	7.0%
\$119,310~\$126,467	7.5%
\$126,468~\$134,056	8.0%
\$134,057~\$142,100	8.5%
\$142,101~\$150,626	9.0%
\$150,627~\$159,663	9.5%
\$159,664 초과	10.0%

자료: Commonwealth supported places and HECS-HELP information. p. 21.

마.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최근 변화 동향

국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중장기 계획 「호주 대학 합의안」에서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즉 고등교육 참여의 확대를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민 집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소외지역 출신에게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집단의 2035년도 총원율과 참여율 목표를 정하고, 2050년까지 호주 전체인구 대비 해당 그룹의 인구비와 동등한 비율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IV-28〉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표 집단의 2035년 고등교육 총원 및 참여 목표

(단위: %)

구분	원주민 학생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소외지역 출신	장애학생
현재	2.1	17.0	19.8	현재 비율 유지
2035년	3.1	20.2	24.0	

자료: Australia Government, 2024.

정부는 인구상 비율과 고등교육(국내 테이블A 대학) 등록과 졸업률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과 교습 이외에도 적정한 비용의 학생 주거, 구직활동 보조, 소득 지원 등의 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호주 고등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에서 학생 형평성을 위한 국립센터(National Centre for Students Equity in Higher Education)’와 협력하여 소수 계층 학생 집단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대학 준비 과정 무상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수 집단의 더 많은 학생이 입학 조건을 갖추어 대학에 진학하려는 동기 부여가 되도록 무료 준비 과정(fee-free preparatory course, 기존의 enabling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료 준비 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고등교육 입학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습에 대한 온라인 등 전달비용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필요 기반 재정지원(Needs-based funding)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집단의 학생당 추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위치에 따른 비용, 졸업 등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과 학업 성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학생에게 초점을 둔다는 내용의 임무-기반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서 합의된 학업 이수율을 충족한 고등교육 제공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담긴 ‘학생 중심의 재정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소득을 지원한다. 재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정적인 문제로 고등교육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학생의 소득 지원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 수당을 위한 부모 소득 인정구간(Parental Income Free Area for Youth Allowance)’을 가족당 5만 8,108호주달러에서 6만 8,857호주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와 남성의 주당 평균 소득(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도 연동할 계획이다. 시간제 학생(학업 시간이 전일제 대비 50~74%)에게는 학비에 비례하여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보장제도와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사회서비스부 장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기존 재정지원의 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는 ‘취업준비 대학졸업 패키지(Job-ready Graduates package)’이다. 패키지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고등교육에 투자하여 대학이 학생, 산업, 지역사회에 최고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패키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20년 180억호주달러에서 2024년까지 200억호주달러로 증가해 왔다. 2021년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 3만개의 학사 수준 연방정부후원자격(CSPs) 자리를, 단기과정에서도 5만개의 새로운 연방정부후원자격(CSPs)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공학, 컴퓨팅, 연합 건강, 교육, 간호학 등 국가적 우선순위 분야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고등교육 진학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농촌 및 지방 지역 학생들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원주민 호주인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도 지원하였다. 특히 국립지역 농촌소외지역고등교육전략(National Regional, Rural and Remote Tertiary Education Strategy, Napthine Review에서 제시)에 근거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역 및 지리적으로 소외된 학생과 대도시 학생 간 격차를 극복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 대학의 연구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21년에 도입된 Job-ready Graduates 패키지는 앞으로 고용 수요가 증가할 분야에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전공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 방식의 접근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고등교육 이수율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평생 소득에 근거하여 Job-ready Graduates 패키지의 학생 부담금을 산정하였다. Job-ready Graduates는 학생들의 분야 선택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5%의 학생만이 이전의 학생 부담금 구조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과정(유도 분야)에 등록하였다. 특히 연방지원자격으로 언론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분담금이 113%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학생 부담금 최고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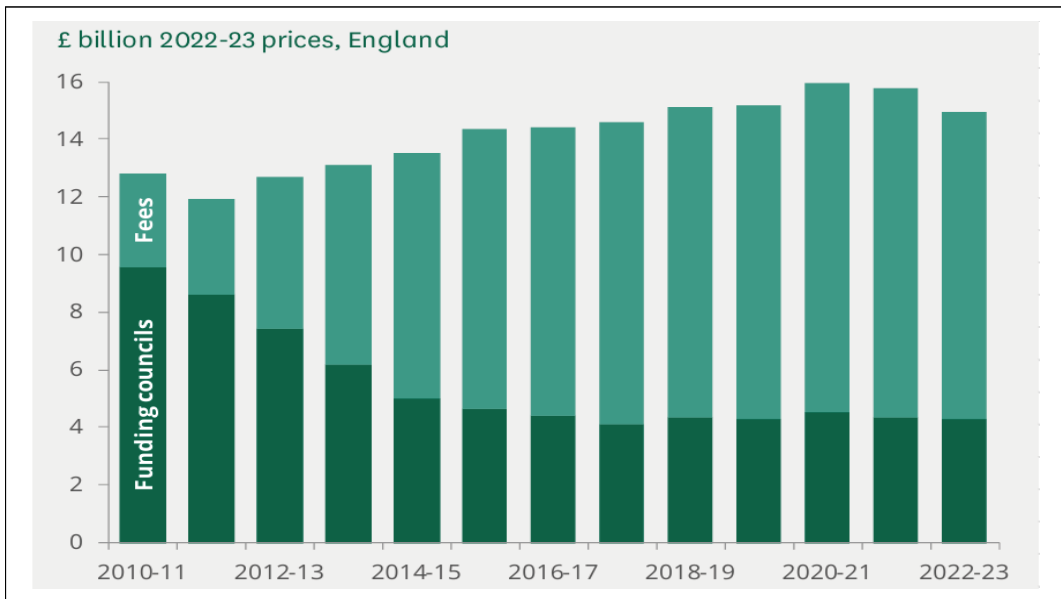
셋째, HELP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1989년에 도입된 HELP, 특히 HECS-HELP는 성공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생 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향후 개선과제는 공정하고 단순화된 지표 등 현대화된 HELP 시스템으로 변화에 있다. 저소득자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수입에 대한 저해 요소(disincentive)를 제한해야 한다. 임금의 증가보다 대출액이 상승하지 않도록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지수보다 낮은 수준에서 HELP를 물가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우선시되는 분야나 기술이 부족한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활용할 수 있는 연방지원자격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호주 고등교육위원회’는 대학원생이 전액 부담하기에 앞서 연방지원자격 대상 대학과 임무-기반 협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학비 전액 부담 대학원 재학 내국인 학생에게 높은 교육비(전일제에 상응하는 학생에 4만 호주달러 이상)를 부과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5. 영국

가. 고등교육 교수-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변화 개요

영국(잉글랜드)의 교수-학습을 위한 자금지원 변화를 살펴보면,¹⁵⁾ 고등교육 교수-학습은 주로 학생이 지불하는 수업료와 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2012년부터 등록금 상한액이 인상되었다. £3,000에서 £9,000까지 교육보조금이 삭감되었다. 영국 내 자국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현재 £9,250으로 제한되어 있다.¹⁶⁾ 2023~2024년 기준 국가 지원 '경상비 지원금'은 총 £1,407 million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비용교육 등에 대한 교육 보조금이 £1,038 million, 학생 접근 및 성공을 위한 지원금 £306 million, 전문기관을 위한 지원금 £58 million이었다(Atherton et. al., 2024. 7. 15: 35~36).

[그림 IV-11] 대학교육 재정의 수업료 중심으로 전환 추이



자료: Atherton, G. Lewis, J., & Bolton, P. (2024. 7. 15). Higher Education in the UK: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challenges. House of Commons Library. p. 26.

15) Atherton, G. Lewis, J., & Bolton, P. (2024. 7. 15). Higher Education in the UK: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challenges,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640/>

16)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수업료 상한액이 £9,250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소한 2025학년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Strategic Priorities Grant)을 통해 영국에서 ‘고비용’ 교육(예: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제공한다. 2022~2023년에는 총 9억 7,400만파운드에 달하였다. 2021년 1월, 정부는 연간 법정 지침서에서 앞으로 고비용 전공에 대한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명시하였다. 즉 의학, 치과, 수의학, 간호학, STEM 과목, IT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공’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증가하였다. 예술과 디자인, 음악, 무용, 드라마와 공연 예술, 미디어 연구, 고고학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비전략적 전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삭감하였다.

이러한 삭감은 처음에는 50%가 될 것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삭감이 예고되었다. 수도, 그중에서 런던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반영해서 런던의 고등교육기관에 추가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용했던 런던 가중치(London weighting)를 제거하였다.

영국 정부는 대학이 당면한 재정적 압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였다(Atherton, Lewis, & Bolton, 2024). 고등교육(16세 이후 대학의 추가 및 고등교육)에 대한 총 공공 및 민간 지출은 2020년 GDP의 2.1%였다. 이는 칠레(2.7%), 미국(2.5%), 캐나다(2.4%)에 이어 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평균 1.5%).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 자금이 학생에게 대출로 제공되는 영국 자금 모델 특성상, 기관에 대한 직접 공공 자금은 GDP의 0.5%로 OECD 평균인 GDP의 1.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 보조금 삭감과 등록금 상한제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 16일 영국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OfS(Office for Students)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 대학의 40%가 예산 적자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생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학이 유학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OfS의 보고서는 ① 인플레이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 ② 최근 유학생의 급격한 감소 ③ 유학생 수업료 의존도가 높은 대학의 경우 특정 국가에 유학생이 집중된 상황 ④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부지 유지 관리 및 개발의 경제성과 상당한 투자 비용 필요 등으로 대학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 규제로 인하여 대학들은 급여 정산, 에너지 비용 및 자본 확보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50개 이상의 대학이 비용을 대폭 절감하거나 합병하지 않는 한 ‘폐쇄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⁷⁾

나.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주요 내용

2024~2025년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고등교육 학생재정 규정(개정안)」에 제시된 학자금 대출, 보조금 및 등록금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에 대한 학자금대출은 자택통학, 런던소재 대학, 기타, 해외 등에 따라서 상한액이 결정되는데, 가계소득을 평가하여 수준별로 비례하여 지원하는 부분(2024~2025년 기준 2만 5,000파운드 미만은 최대액 지원)과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부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특별지원이나 생활비 보조금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최대 상한액이 증가한다. 2024~2025년 신입 전일제 학생과 2016년 8월 1일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재학생 중 첫 학년도 첫날에 만 60세 이상인 학생은 2024~2025년 도서, 여행, 장비 및 육아 비용에 대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 대출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계산할 때 학생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024~2025년 기준 잉글랜드 대학생의 생활비에 대한 상세 기준별 대출 상한액은 <표 IV-29>, <표 IV-30>과 같다. 특별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생은 크게 연령에 따라서 60세 이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그 외는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나 거주상황에 따라서 상한액 한도가 달라진다. 생활비 및 추가 지원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평가 기여도'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경우 총 평가 기여금은 가구 내 학생 수로 나눈다. 생활비 대출에 대한 평가 기여금은 가구 소득이 £42,875를 초과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상황, 예컨대 부양가족이나 자녀 등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나 수당이 있다.

17) UCU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HE shrinking, <https://qmucu.org/qmul-transformation/uk-he-shrinking/>

〈표 IV-29〉 2024~2025년 잉글랜드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 상한액(특별지원을 받지 않는 전일제 학생)

(단위: £)

구분		총액 (100%)	소득과 무관한 대출액	소득평가 기반 대출액
일반학생	자택통학	8,610(8,102)	3,790(3,482)	4,820(4,620)
	런던	13,348(12,367)	6,647(6,056)	6,701(6,311)
	기타	10,227(9,672)	4,767(4,432)	5,460(5,240)
	해외	11,713(10,485)	5,662(4,920)	6,051(5,565)
60세 이상 학생	자택통학	10,158(9,684)	3,790(3,482)	6,368(6,202)
	런던	14,557(13,643)	6,647(6,056)	7,910(7,587)
	기타	11,658(11,144)	4,767(4,432)	6,891(6,712)
	해외	13,038(11,896)	5,662(4,920)	7,376(6,976)

주: 1. ()의 수치는 마지막 학년도 대출 상한액을 의미함.

- 생활비 대출의 전체 연도 및 최종 연도 요율에 대한 소득평가 방식: ① 자택통학자는 소득이 £25,000를 초과하여 £1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6.91씩 감소 ② 런던 통학자는 소득이 25,000파운드 이상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파운드씩 감소 ③ 기타 통학자는 소득이 25,000파운드 이상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파운드씩 감소 ④ 해외 유학자는 소득이 25,000파운드 이상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파운드씩 감소
- 최소 비소득 평가 전액 해외 대출의 소득 기준은 £66,026. 최소 비소득 평가 최종 연도 대출 금리에 대한 소득 기준은 ① £56,925(자택) ② £67,474파운드(런던) ③ £60,842(기타) ④ £62,731(해외)

자료: Loan, Grant, and Tuition Fee Rates for Academic Year 2024/25, Memorandum: Support Available under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e Regulations for 2024/25, pp. 3~4. TABLE A1, TABLE A2.

〈표 IV-30〉 2024~2025년 잉글랜드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 상한액(특별지원을 받는 전일제 학생)

(단위: £)

구분	특별지원 요소 (100%)	생계비 요소 (100%)	대출 상한액 (100%)
자택통학	4,327(4,327)	5,831(5,357)	10,158(9,684)
런던	4,327(4,327)	10,230(9,316)	14,557(13,643)
기타	4,327(4,327)	7,331(6,817)	11,658(11,144)
해외	4,327(4,327)	8,711(7,569)	13,038(11,896)

주: 1. ()의 수치는 마지막 학년도 대출 상한액을 의미함.

- 학생의 연간 대출금에 대한 소득 평가 방식: ① 자택통학자는 소득이 £25,000 이상에서 £42,875까지 £4.323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씩 감소. 소득이 £42,875 이상에서 £6.91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씩 감소 ② 런던통학자는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대출금 £4.624 감소(£25,000 이상~최대 £42,875 소득자). 소득 £42,875 초과 시 £6.73씩 대출금 감소 ③ 기타통학자는 소득 £25,000 이상~최대 £42,875까지 £4.42 증가할 때마다 £1씩 대출 감소. 소득 £42,875 이상 시 £6.84 증가할 때마다 £1씩 대출 감소 ④ 해외유학자는 소득 £25,000 이상~£42,875까지는 £4.512 증가할 때마다 £1씩 대출 감소. 소득 £42,875 이상 시 £6.78 증가할 때마다 £1씩 대출 감소. 해외 대출의 최소 비소득 평가 전액 이자율에 대한 소득 기준은 £66,029
- 최종학년 대출 금리에 대한 소득 평가 방식: ① 자택통학자는 소득 £25,000 이상~£42,875까지는 £4.288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씩 감소. 소득 £42,875 이상 시 £6.91 증가할 때마다 대출 £1씩 감소 ② 런던통학자는 소득 £25,000를 초과하여 £42,875까지 £4.546 증가할 때마다 대출 £1씩 감소. 소득 £42,875 초과 시 £6.73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씩 감소 ③ 기타통학자는 소득 £25,000 이상~£42,875까지는 £4.375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씩 감소. 소득 £42,875 이상 시 £6.84 증가할 때마다 대출이 £1씩 감소 ④ 해외유학자는 소득 £25,000 이상~£42,875까지 £4.416 증가할 때마다 대출 £1씩 감소. 소득 £42,875 이상 시 £6.78 증가할 때마다 대출 £1씩 감소
- 최소 비소득 평가 최종 연도 대출 금리에 대한 소득 기준은 ① £56,930(자택) ② £67,474(런던) ③ £60,844(기타) ④ £62,734(해외)

자료: Loan, Grant, and Tuition Fee Rates for Academic Year 2024/25, Memorandum: Support Available under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e Regulations for 2024/25, pp. 3~4. TABLE A1, TABLE A2.

둘째, 영국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OfS의 평가를 기반으로 대학유형별 등록금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일제 학생 기준 일반과정과 속성과정 대학의 등록금 상한액은 <표 IV-31>과 같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지원 상한액은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평가 결과(교육 우수성과 학생성과 프레임워크, TFT 통과 여부)와 학생의 학업상황(연간 전일제, 마지막 학년, 실습-학습병행, 해외유학, 에라스무스/튜링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만 전일제 속성(accelerated)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일반과정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한액이 결정·지원된다. 이들 등록금 상한액은 선불제 학자금대출(up-front fee loan) 형태로 학생의 소속 대학에 직접 지급된다.

<표 IV-31> 2024~2025년 잉글랜드 대학의 수업료 상한액

(단위: £)

구분		수업료 상한액: TEF 미인증대학	수업료 상한액: TEF 인증대학
전일제 일반 학위 과정	1년 내내	9,000(6,000)	9,250(6,165)
	마지막 학년(15주 미만 출석)	4,500(3,000)	4,625(3,080)
	샌드위치 근무 배치 연도	1,800(1,200)	1,850(1,230)
	해외 유학 연도	1,350(900)	1,385(920)
	에라스무스/튜링 연도	1,350(900)	1,385(920)
전일제 속성 학위 과정	1년 내내	10,800(7,200)	11,100(7,400)
	샌드위치 근무 배치 연도	2,160(1,440)	2,220(1,475)
	해외 유학 연도	1,620(1,080)	1,660(1,105)
	에라스무스/튜링 연도	1,620(1,080)	1,660(1,105)

주: ()의 수치는 OfS Access and Participation Plan이 없는 대학의 등록금 상한액을 의미함.

자료: Loan, Grant, and Tuition Fee Rates for Academic Year 2024/25, Memorandum: Support Available under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e Regulations for 2024/25, pp. 8-9, TABLE A5, TABLE A7.

<표 IV-32>는 특별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대학생의 소득 평가 기반 생활비 대출 상한액 산출 예시를 보여준다. £25,000 이하인 학생은 거주 상황에 따라서 최대치를 대출받을 수 있다.

〈표 IV-32〉 일반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액 결정: 소득 수준별 예시

구분	수입(£)	소득 평가(£)	평가 기여도(£)	생활비 대출(£)
자택 통학생	25,000	0	0	8,610
	30,000	723	0	7,887
	35,000	1447	0	7,163
	40,000	2170	0	6,440
	42,875	2586	0	6,024
	45,000	2894	308	5,716
	50,000	3617	1031	4,993
	55,000	4341	1755	4,269
	58,307	4820	2234	3,790(+)
	60,000	4820	2234	3,790
런던 학생	25,000	0	0	13,348
	30,000	742	0	12,606
	35,000	1485	0	11,863
	40,000	2228	0	11,120
	42,875	2656	0	10,692
	45,000	2971	315	10,377
	50,000	3714	1058	9,634
	55,000	4457	1801	8,891
	60,000	5200	2544	8,148
	65,000	5943	3287	7,405
	70,000	6686	4030	6,662
	70,098	6701	4045	6,647(+)
75,000	6701	4045	6,647	
런던 외 지역 학생	25,000	0	0	10,227
	30,000	730	0	9,497
	35,000	1461	0	8,766
	40,000	2192	0	8,035
	42,875	2613	0	7,614
	45,000	2923	310	7,304
	50,000	3654	1,041	6,573
	55,000	4385	1,772	5,842
	60,000	5116	2,503	5,111
	62,347	5460	2,847	4,767(+)
	65,000	5460	2,847	4,767
70,000	5460	2,847	4,767	

자료: Loan, Grant, and Tuition Fee Rates for Academic Year 2024/25, Memorandum: Support Available under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e Regulations for 2024/25, p. 14, TABLE A15.

6.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사적 부담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4개국을 중심으로 학자금 지원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과 호주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는 데 특히 소득연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s)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전문대학(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 일본의 전문학교 등)의 비중이 높고, 재학생 수 기준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사립대학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영국과 호주는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을 시행하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비용 전공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적 재원이 투자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장학금과 가장 유사한 학자금 지원 유형은 미국의 펠 그랜트(Pell Grant)와 일본의 급부형 장학금이다. 이들 제도는 대학생 가정의 경제력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 무상지원 유형이다. 다만 대학생 가정의 경제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교육비의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의 펠 그랜트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먼저 펠 그랜트는 ‘모든 학자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이다. 자격을 갖춘 학생의 펠 그랜트 수여액은 일련의 수여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여 규칙은 각 수여 연도에 재정 자원이 가장 적은 학생(가정의 AGI 또는 학생의 SAI에 따라 결정됨)이 가장 높은 펠 그랜트 수여를 받도록 설계되었다. 학생의 재정 자원이 증가하거나 AGI 및 SAI가 증가하면 펠 그랜트 수여는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감소한다. 또한 펠 그랜트 보조금은 전일제 미만으로 1년 내내 출석하는 학생에게는 비례 배분된다. 펠 그랜트 수여 규정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이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부생의 재정지원 패키지에서 펠 그랜트를 연방 필요 기반 지원의 기초로 삼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펠 그랜트가 지급된 후 다른 HEA 연방 지원금이 지원 패키지에 추가된다. 다음으로 펠 그랜트는 ‘총 교육비에 대한 지원금’이다. 각 학생의 보조금 규모는 주로 조정 총소득(AGI), SAI, 수여 연도의 총 최대 펠 그랜트 및 학생의 등록 강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학생의 재학 비용(COA)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급부형 장학금 역시 총 교육비를 기준으로 장학금의 지급액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일반과정과 통신교육과정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르고, 대학에서 급부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정규 졸업 시기까지 세대의 소득 금액을 근거한 구분(제 I~IV 구분)에 따라서 설립유형(국공립·사립) 및 통학 형태(자택 통학·자택 외 통학)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월액(月額))이 매달 지급된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학자금대출제도를 기반으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대학생을 ‘가난한 성인(independent poor person)’이라고 가정하고, 대학생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호주의 대학생 기본수당, 자녀수당 등은 우리나라 교육부의 국가장학정책보다는 복지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급부형 장학금 역시 도입 배경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의 하나로 대학교 교육비 부담을 들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범부처 사업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펠 그랜트 역시 ‘준지원금(quasi-entitlement)’¹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교육 분야 형평성 제고 정책으로 복지정책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주요국의 운영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가장학금은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이라는 재화에 대한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학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머물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는 대학등록금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도 혜택을 보는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 연동형 국가장학금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쟁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늦게 급부형 장학금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소비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은 대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필요한 연간 추가 예산액을 3.1조엔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액이 소요되는 급부형 장학금 예산을 문교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의 고등교육예산 내용이 잠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영국 정부 역시 대부분의 공공 자금이 학생에게 대출로 제공되는 영국 대부분의 자금 모델 특성상 기관에 대한 직접

18) entitlement(지원금):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

공공 자금은 GDP의 0.5%로 OECD 평균인 GDP의 1.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 지난 10년간 정부 보조금 삭감과 등록금 상한제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등교육에서 매우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V. 국가장학금 사업군 효과성 분석

장학금 지원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의 소득 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결과 계층 간 소득이동성이 강화되어 보다 높은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등록금 부담 완화가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은 중간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소득이동성과 형평성 증진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성 분석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확장 전후의 코호트별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학 진학률, 진학하는 대학의 성격, 그리고 코호트별 소득분포나 소득이동성 차이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자료의 제약상 장학금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은 단기 혹은 중간 목표와 장기목표의 달성 여부를 가용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의 효과성 분석은 먼저 등록금 부담 완화 정도를 장학금 수혜 이후 실부담 등록금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학금의 대출 감소효과를 살펴본 후, 장학금이 사회이동성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이하의 효과성 분석은 크게 대학 입학이나 재학 단계에서 장학금의 효과와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효과를 살펴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대학 입학과 재학 단계 효과 부분은 등록금 부담 경감, 대출 감소, 그리고 대학 교육 기회 형평성 등 세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효과 부분은 수혜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장학금의 사회이동성 제고 검토 등 두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1. 분석 자료

분석자료는 크게 두 종류인데 첫 번째 자료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대출자료이다. 국가 장학금 지급이 시작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까지 1학기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장학재단 DB 중 일부이다. 개인단위 자료로 주요 변수는 학년, 성, 생년, 대학소재지역(17개 시도), 설립주체(국, 공, 사립), 대학유형(4년

제, 전문대, 사이버대 등), 학교규모(재학생으로 본 학교 규모를 5개 등급으로 나눈 변수), 전공계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등록금액, 장학금액, 등록금대출액, 생활비대출액 등이 다. 장학재단 DB의 가장 큰 장점은 모집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장학재단 DB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표본선택에서 발생하는 편의에서 자유로워 해당 자료에서 나타난 분포나 추이 등의 분석 결과를 전반적인 상관관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다만 개인 특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미시적인 심층분석에는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두 번째 자료는 한국장학패널 1기 조사자료이다. 이 자료에 장학재단 DB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장학패널 자료는 표본이지만 장학재단 DB와 결합할 경우 각 학생이 받은 장학금 자료와 더불어 학생의 특성, 졸업한 학교의 특성, 노동시장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유용한 자료로 구축될 수 있다. 한국장학패널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단으로 2014년 1만 60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2023년 3월까지 8차 조사를 수행한 뒤 종료되었다. 한국장학패널 1기 조사자료는 대학 입학 및 재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있어 노동시장 성과와 사회이동성 등 졸업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국장학패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설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등록금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대학교육을 받을 의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의 성과로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 등록금 부담의 경감 정도이다.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등록금 실부담액과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해 보았다. 등록금 실부담액은 각 연도별로 따져 보았을 때 해당 학자금 지원구간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등록금에서 장학금액 차이의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우선 가장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출신 학생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이 집단의 2012년의 실부담 등록금액은 100만원에 약간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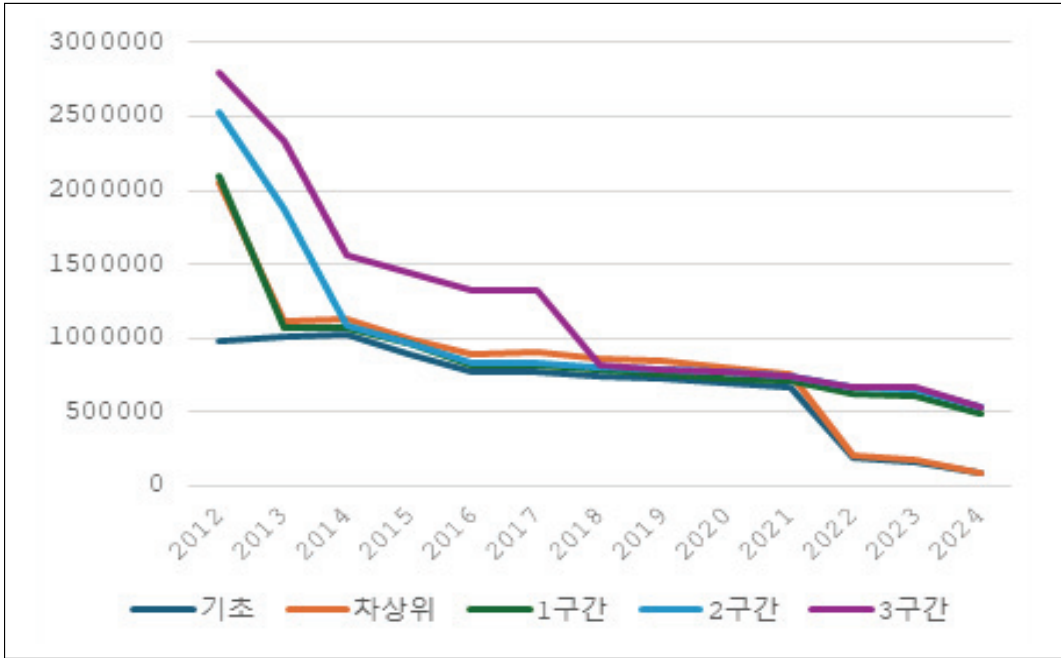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1학기에 이르면 실부담 등록금액이 10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차상위 계층도 국가장학금이 처음 도입된 2012년만 하더라도 200만원이 넘는 실부담금액은 2024년에 이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출신 학생 집단의 실부담금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구간과 3구간이 지불하는 실부담액의 평균 차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만 하더라도 70만원의 차이가 있었지만 2018년에 이르면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 2024년의 평균 실부담액은 소득 1구간에서 3구간까지 거의 비슷하며, 약 50만원 수준이다.

4구간에서 8구간까지의 실부담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13년만 하더라도 이 구간 소득의 실부담 등록금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렀다. 2018년을 기점으로 실부담 등록금액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4, 5, 6구간의 평균 실부담액은 130만원 전후로 떨어졌으며, 이후로도 계속 하락하여 2024년에는 100만원 혹은 그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7구간과 8구간도 2013년 300만원에 가깝던 실부담은 2022년에 그 전해에 비해 거의 100만원 가깝게 떨어졌으며, 2024년에는 130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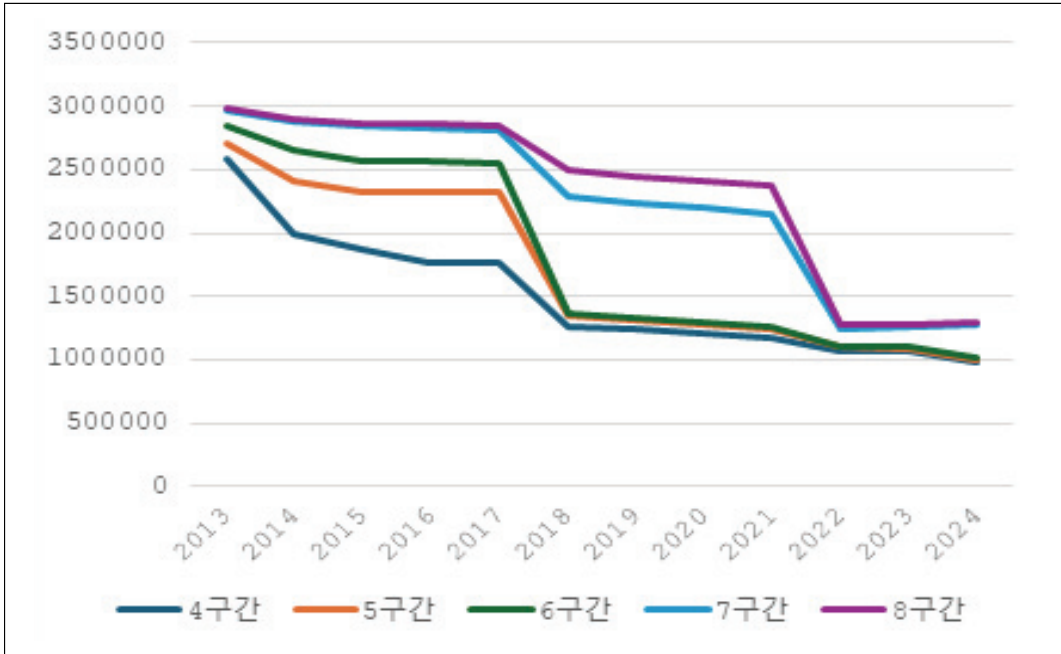
2024년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6구간 이하에서는 실부담 등록금의 평균이 100만원 혹은 그 이하이고 7, 8구간은 약 130만원 수준이다. 실부담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와 함께 학자금 지원구간 사이의 실부담액의 차이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8구간 사이의 차이는 200만원에 가까웠지만, 2024년의 차이는 12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림 V-1] 학자금 지원구간별 실등록금 추이(기초~3구간)



연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2012	985,153	2,054,489	2,102,355	2,524,228	2,799,592
2013	1,003,121	1,103,680	1,067,019	1,876,691	2,341,027
2014	1,030,268	1,122,605	1,071,101	1,088,350	1,566,989
2015	898,945	1,001,180	971,737	965,816	1,440,981
2016	766,959	895,449	820,763	827,843	1,328,058
2017	778,524	911,938	818,357	828,544	1,331,256
2018	750,103	867,563	784,522	809,135	813,176
2019	727,533	841,873	762,295	793,675	793,920
2020	704,510	806,158	735,977	769,276	770,608
2021	670,529	766,703	716,823	743,970	745,498
2022	196,001	212,890	624,989	667,655	672,847
2023	163,891	181,405	614,193	659,264	669,679
2024	0	0	492,032	531,120	537,091

[그림 V-2] 학자금 지원구간별 실등록금 추이(4~8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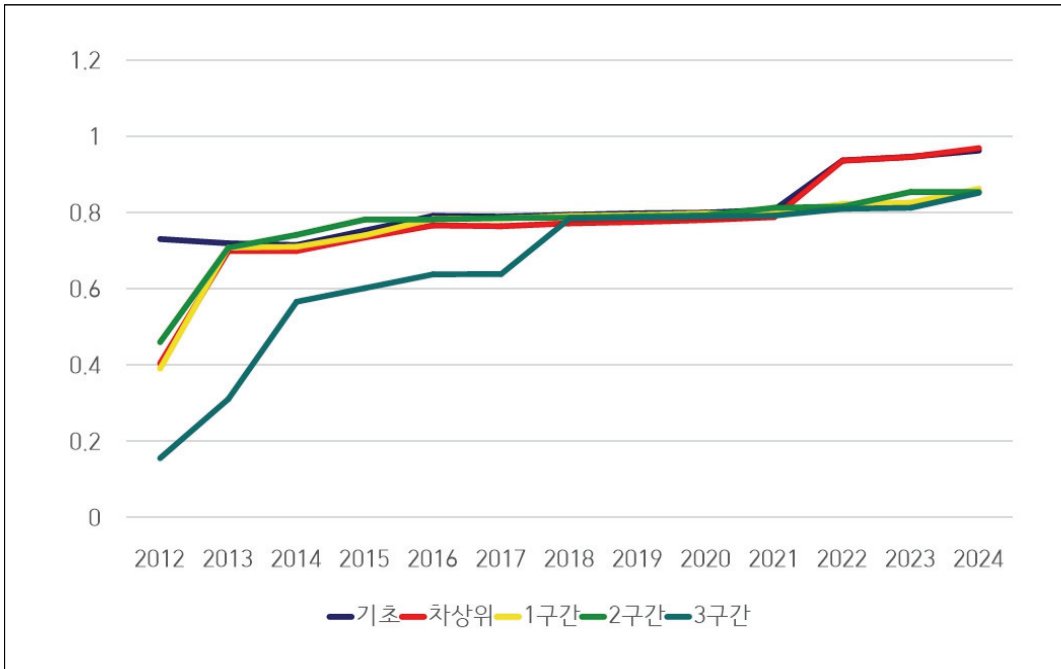
연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3	2,591,404	2,712,410	2,839,441	2,970,532	2,981,465
2014	1,990,972	2,419,135	2,650,423	2,875,618	2,898,200
2015	1,874,240	2,318,083	2,571,198	2,842,817	2,866,173
2016	1,773,939	2,325,237	2,563,594	2,835,487	2,855,647
2017	1,766,506	2,319,249	2,555,407	2,819,382	2,849,221
2018	1,266,998	1,349,273	1,361,840	2,281,934	2,504,214
2019	1,236,177	1,317,046	1,331,025	2,234,895	2,451,569
2020	1,207,111	1,283,819	1,302,988	2,205,930	2,412,206
2021	1,170,417	1,248,716	1,265,374	2,145,727	2,377,977
2022	1,073,782	1,098,907	1,109,210	1,249,509	1,277,478
2023	1,067,374	1,083,274	1,102,530	1,252,744	1,277,314
2024	984,925	995,305	1,020,278	1,272,283	1,297,939

다른 각도에서 국가장학금의 실부담 감소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의 비중이다.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될 당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등록금의 평균 73% 정도였지만, 차상위나 그 이상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수준이 등록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3구간의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의 평균 16%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이 상황은 2013년 이후에는 크게 개선되어 2구간 이하의 경우 장학금이 등록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액은 계속 상승하여 2024년에 이르면 기초와 차상위 계층은 장학금이 등록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1구간과 3구간에도 장학금은 등록금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4구간 이상에서는 2013년 등록금 대비 장학금은 1/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은 꾸준히 늘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 이후에는 4구간에서 6구간 사이의 집단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액 비중은 65% 정도에 이르게 된다. 2024년 현재 4구간에서 6구간 사이 가구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액의 평균값은 약 72% 수준이다. 2022년 이후에는 7, 8구간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되면서 2024년 현재 8구간 집단의 경우 등록금액 대비 장학금액의 평균은 64%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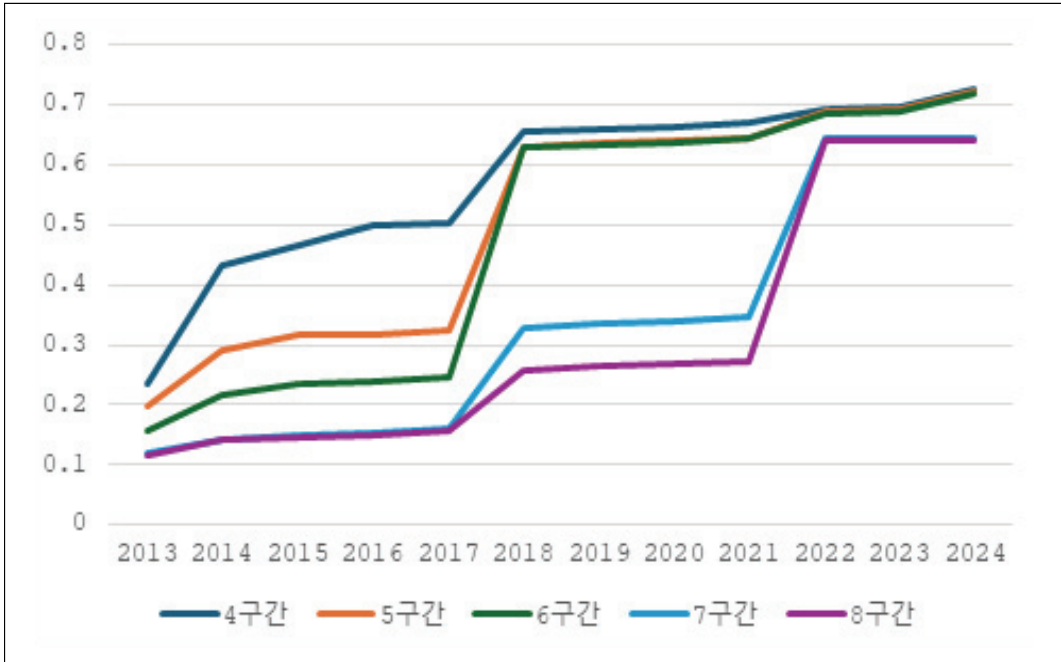
이상의 관측으로부터 그동안의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장학금의 혜택이 거의 그대로 실부담 등록금이나 등록금 대비 장학금액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각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액 자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학 간 등록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선택하는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 큰 차이가 없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등록금 실부담액이나 등록금 대비 장학금의 비중에서 보이는 현상은 적어도 장학금 수혜자 사이에서는 소득과 등록금 사이의 관계가 크지 않으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 기회의 균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이는 다음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림 V-3]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기초~3구간)



연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2012	73.1	40.5	39.2	24.3	15.6
2013	72.3	70	38.9	52.5	18.6
2014	71.6	70.1	71.2	71	56.7
2015	75.3	73.6	74.2	74.3	60.3
2016	79.7	77.3	78.6	78.6	64
2017	79	76.5	78.5	78.3	64
2018	79.5	77.3	79.3	78.7	78.5
2019	79.9	77.6	79.5	78.8	78.8
2020	80.1	78.2	79.9	79.1	79.1
2021	80.8	78.9	80	79.5	79.3
2022	93.7	93.7	82.3	81.3	81.1
2023	94.7	94.6	82.6	81.6	81.3
2024	96.3	96.9	86.3	85.5	85.2

[그림 V-4]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중(4~8구간)



연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3	22.3	19.7	16.2	11.4	11.2
2014	43.4	29.2	21.7	14.3	14.1
2015	46.7	31.8	23.6	14.8	14.6
2016	50	32	24.1	15.3	15.3
2017	50.4	32.3	24.5	16	15.7
2018	65.6	63.2	63.1	32.7	25.7
2019	66.1	63.7	63.5	33.6	26.6
2020	66.5	64.1	63.8	33.9	27
2021	66.9	64.6	64.3	34.7	27.2
2022	69.4	68.9	68.7	64.6	64.1
2023	69.7	69.3	69	64.6	64.3
2024	72.5	72.3	71.8	64.4	64

장학금의 등록금 경감효과를 살펴보는 마지막 변수로, 소득평가액 대비 등록금액에 대해 살펴본다. 등록금 실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등록금 실부담률} = \frac{\text{등록금} - \text{장학금}}{6 \times \text{소득인정액}}$$

이상의 지표는 한 학기 등록금이 반년 소득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의미한다. 기초 구간이나 차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 자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표는 1구간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 이 지표 값의 평균을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구해보면 소득에 가구의 소득과 비교한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며, 이 지표의 구간별 차이는 장학금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지표의 특징은 1구간에서 매우 높은 값을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1구간에 속한 가구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의 수준도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 지표가 1이 넘는다는 것은 6개월치 소득보다 등록금이 더 많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관측된다. 그리고 모두 1구간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다.¹⁹⁾ 전체 관측치에서는 이런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이는 이상 관측치로 간주하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V-5]는 2015년, 2019년, 2024년 등 세 개 연도에 대해 이 지표 값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과 대비할 때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액은 모든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와 장학금의 확대, 그리고 등록금의 동결 등 세 가지 효과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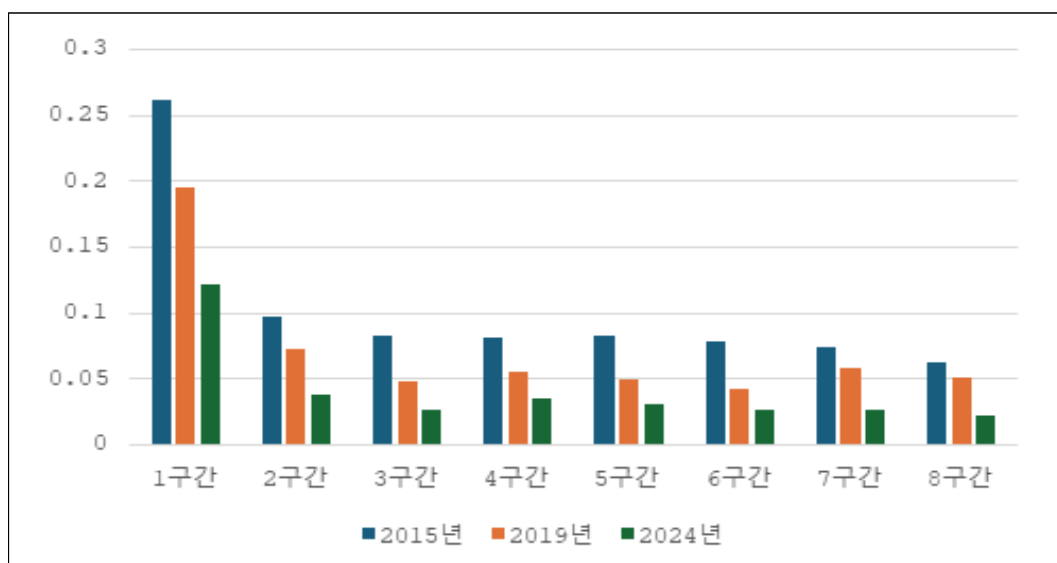
2015년에는 소득인정액 대비 등록금 실부담률이 학자금 지원구간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즉 소득과 비교한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가 부담하는 등록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2019년에는 다소 변화가 있어서 3구간보다는 4구간에서 이 값이 더 컸으며 6구간보다는 7구간에서 이 값이 더 컸다. 그렇지만 2024년에는 3구간과 4구간 사이를 제외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지표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표

19) 2013년에 1400건, 2014년에 1002건, 2015년에 308건, 2016년 598건, 2017년 179건, 2018년 407건, 2019년 210건, 2020년 248건, 2021년 127건, 2022년 443건, 2023년 303건, 2024년 134건 등 총 5,549건이 있다. 이런 관측치에 대해서는 등록금 실부담액이나 소득 대비 실부담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하지 않았다. 5,549건은 총 관측치 1,111만 2,875건의 0.05%로, 이들이 계산에서 빠짐으로써 주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를 소득과 비교한 상대적인 실부담 등록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2구간 이상에서는 등록금이 소득인정액의 5% 미만으로 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구간에서는 이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10%를 넘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1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1구간의 경우도 등록금 실부담액 평균이 약 1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부담 역할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V-5] 구간별 소득 대비 실부담율



학자금 지원구간	2015	2019	2024
1구간	26.2	19.6	12.2
2구간	9.7	7.2	3.9
3구간	8.3	4.8	2.6
4구간	8.2	5.6	3.6
5구간	8.4	5	3
6구간	7.9	4.2	2.6
7구간	7.4	5.8	2.7
8구간	6.2	5.1	2.2

3. 대출 감소

가. 장학재단 DB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은 수혜자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그러나 대학 생활에는 등록금 외에도 많이 비용이 수반된다. 국가장학금과 함께 운영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는데,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장학금으로 인해 대출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하에서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학생들의 대출이 줄어들었는지, 특히 저소득층의 대출 필요성을 낮추었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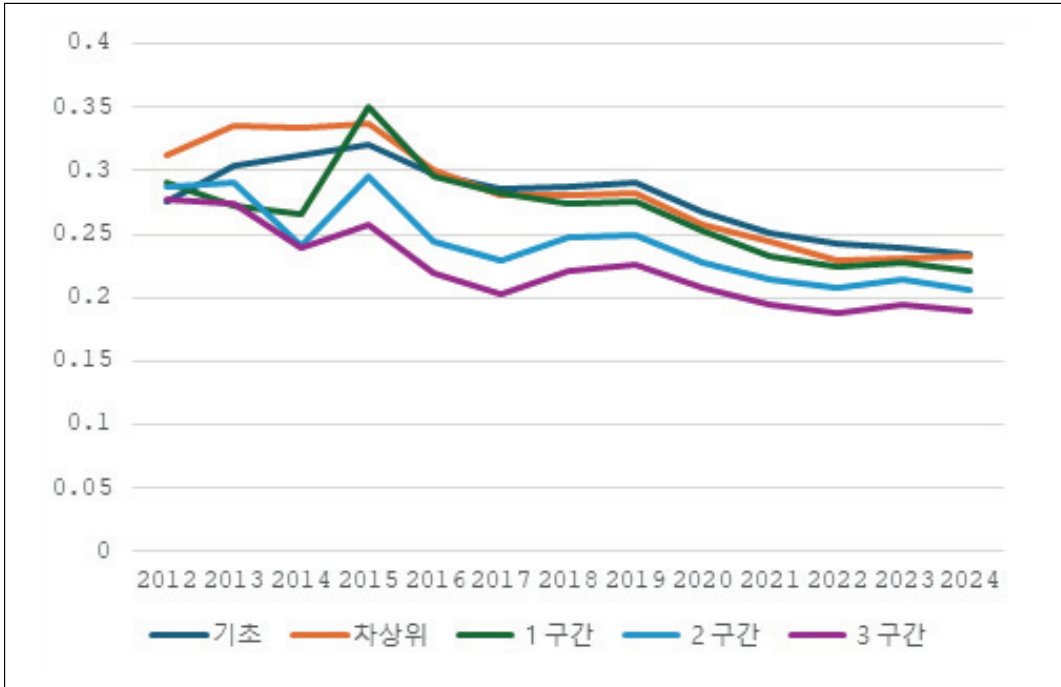
우선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각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본다. [그림 V-6]과 [그림 V-7]은 2012~2024년 사이 각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대출 받은 학생’은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 중 하나라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두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장학금 도입 이후 모든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대출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2015년과 같은 예외적인 해를 제외한다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자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4~8구간의 대출자 비중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줄어들다가 2018년에 증가하는 현상이다. 2018년 국가장학금의 수혜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출의 필요성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2017년과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4%와 3.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출자 비중 증가에는 경기변동 외의 제도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8년 이후에는 다시 대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3년의 대출자 비중의 증가는 경기 변동적인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에는 대출자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경기변동 외에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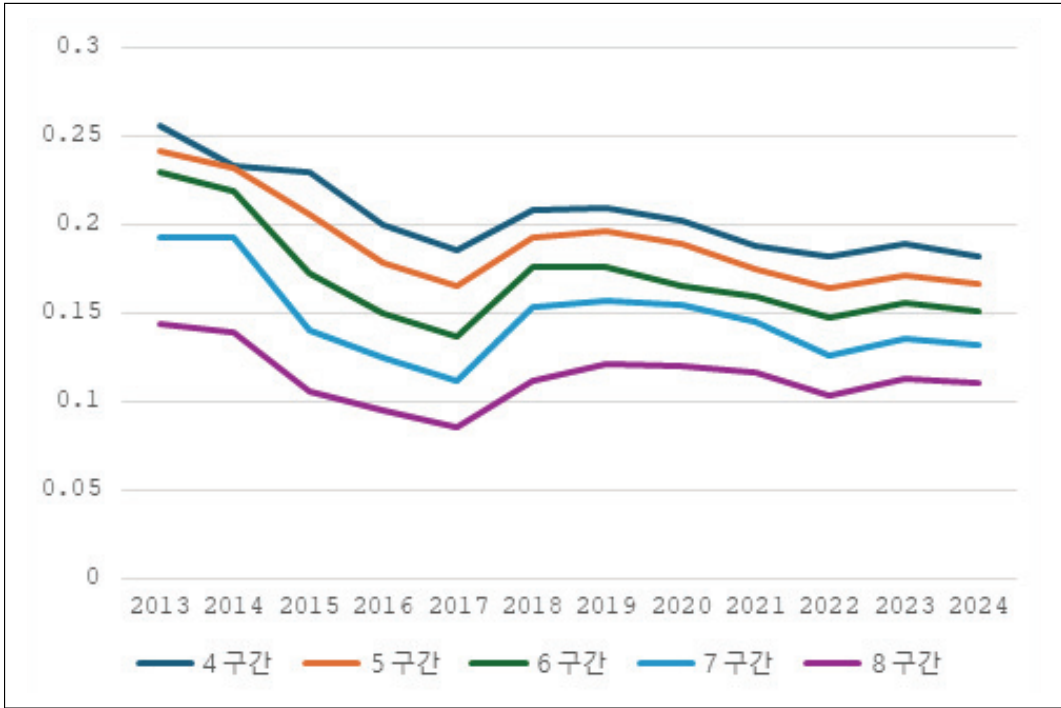
몇 차례의 이례적인 연도가 있었지만, 국가장학금 도입과 확대의 전반적인 영향은 대출자 비중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접한 학자금 지원구간 사이의 대출자 비중은 1~2%p 차이를 보인다. 기초 구간과 8구간 사이의 대출자 비중 차이는 약 12%p에 달하고 있다.

[그림 V-6]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자 비중(기초~3구간)



연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2012	27.6	31.2	29	28.7	27.7
2013	30.5	33.6	27.3	29.1	27.4
2014	31.3	33.4	26.6	24	23.9
2015	32	33.8	35.1	29.6	25.7
2016	29.7	30.1	29.5	24.5	21.9
2017	28.7	28.1	28.3	23	20.3
2018	28.7	28.1	27.4	24.7	22.2
2019	29.1	28.3	27.5	24.9	22.6
2020	26.8	25.8	25.3	22.7	20.8
2021	25.1	24.4	23.2	21.5	19.4
2022	24.3	23	22.4	20.7	18.9
2023	24	23.2	22.8	21.4	19.5
2024	23.5	23.3	22.1	20.7	19.1

[그림 V-7]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자 비중(4~8구간)



연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3	25.6	24.2	23	19.3	14.4
2014	23.4	23.2	22	19.3	14
2015	23	20.6	17.3	14.1	10.6
2016	20	17.9	15	12.5	9.6
2017	18.5	16.5	13.7	11.2	8.6
2018	20.9	19.3	17.6	15.4	11.2
2019	21	19.6	17.7	15.7	12.2
2020	20.2	19	16.6	15.5	12.1
2021	18.9	17.5	16	14.6	11.6
2022	18.2	16.5	14.8	12.7	10.4
2023	18.9	17.2	15.6	13.6	11.3
2024	18.2	16.7	15.2	13.2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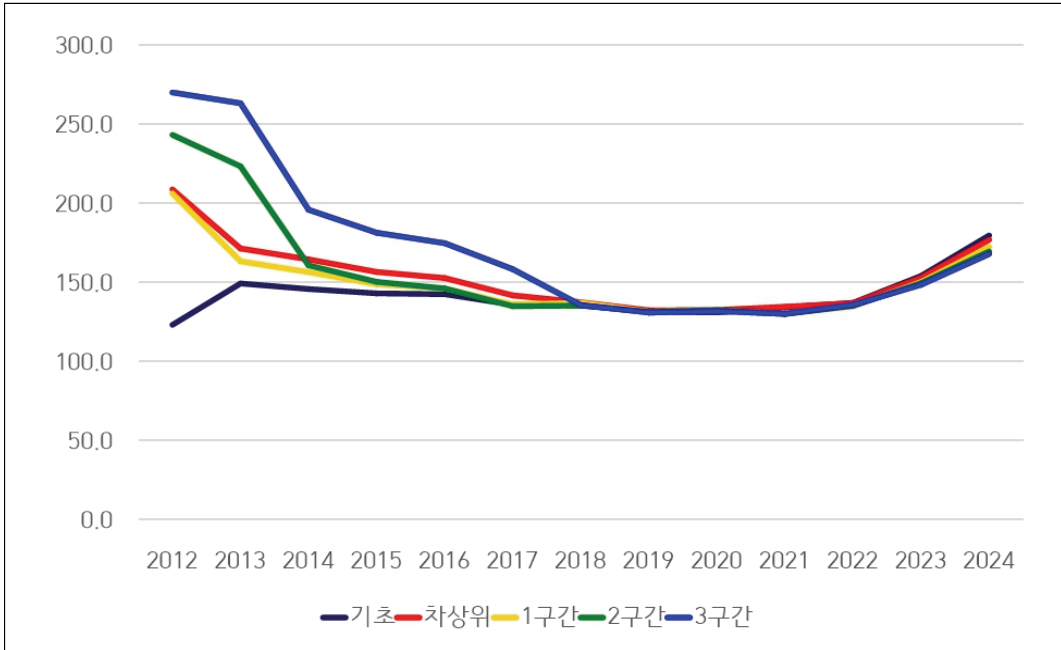
다음으로 평균 대출액을 살펴본다. 대출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평균 대출액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던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출자 비중과는 달리 대체로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이 증가하며 2019년까지는 모든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평균 대출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이후 3구간 이하의 학자금 지원구간에서는 평균 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대출액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인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구간의 평균 대출액은 약 180만원이며 3구간의 평균 대출액은 약 168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구간의 경우 장학금 도입 첫 해에 비해 대출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 이후의 증가세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3구간 이하에서는 2024년의 대출액은 2020년과 비교할 때 평균 대출액이 35만~4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정 정도 생활비대출액의 한도가 올라간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3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4구간 이상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있다. 4구간 이상에서 대출액 추세를 보면 장학금의 혜택이 늘어나던 2018년까지는 평균 대출액이 줄어드는 추세였고, 2022년 7구간과 8구간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증가하면서 이 구간의 평균 대출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4구간 이상의 모든 구간에서 평균 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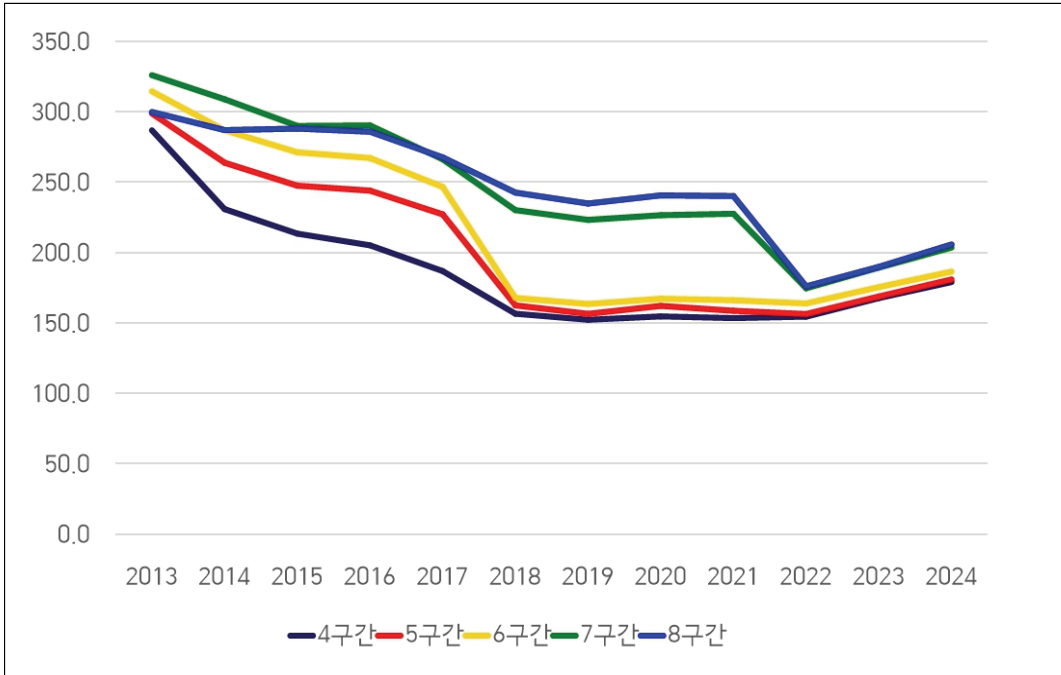
7구간과 8구간의 대출액이 그 아래 구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두 구간에서는 2022년과 2024년 사이 평균 대출액이 약 30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6구간과 7구간의 소득 차이는 소득평가액 수준으로 약 72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약 140만원에 이른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출액에서 평균 18만원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장학금 혜택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대출액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V-8] 학자금 지원구간별 평균 대출액(대출자 기준, 기초~3구간)



연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2012	123.3	208.8	206.3	243.3	270.2
2013	149.4	171.5	163.4	223.4	263.3
2014	145.9	164.6	156.6	160.8	196.0
2015	143.2	156.7	148.9	150.4	181.5
2016	142.6	152.8	146.2	146.2	174.9
2017	136.0	141.9	136.2	135.0	158.4
2018	135.6	137.5	137.3	135.4	135.8
2019	131.7	132.4	131.6	131.5	131.0
2020	131.1	132.6	132.5	132.6	132.0
2021	134.3	134.7	130.1	130.2	130.2
2022	137.1	136.9	135.0	135.2	135.8
2023	154.2	153.1	150.3	149.6	148.6
2024	179.8	177.0	172.5	169.7	168.0

[그림 V-9] 학자금 지원구간별 평균 대출액(대출자 기준, 4~8구간)



연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13	286.8	298.9	314.5	326.0	299.8
2014	230.9	263.8	286.9	308.9	287.0
2015	213.5	247.5	271.2	290.0	288.1
2016	205.1	244.0	267.1	290.3	285.8
2017	186.9	227.1	246.6	266.3	267.6
2018	156.5	162.5	167.7	230.2	242.6
2019	152.3	156.5	163.5	223.2	234.8
2020	154.7	162.1	167.2	226.5	240.6
2021	153.4	158.6	166.1	227.6	240.1
2022	154.5	156.3	163.9	174.6	176.0
2023	167.7	168.8	175.5	189.3	189.9
2024	179.1	180.9	186.5	203.6	205.8

〈표 V-1〉은 대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Probit)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등록금 대출 여부, 생활비 대출 여부, 그리고 등록금 혹은 생활비 대출 여부 등 세 가지이며, 2015년과 2024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소득인정액, 등록금, 장학금, 여성과 사립 더미 등을 포함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받을 확률은 낮아질 것이며 등록금 수준이 높으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학금액이 많아질수록 대출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등록금을 통제할 경우 국·사립 여부가 대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선형적으로 알 수 없으며, 이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덜 받고, 등록금 높을수록 대출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등록금과 장학금액 같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등록금은 대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출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대 재학하는 경우 2015년에는 대출을 더 받는 성향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사립대 재학할 경우 생활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24년의 차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2015년에는 장학금액이 많을수록 등록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으나, 2024년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024년의 장학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대출의 가능성을 줄여 줄 만큼 장학금 혜택이 증가해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장학금액의 증가가 대출 가능성을 낮추어 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장학금액이 많을수록 생활비 대출은 늘어나는 현상은 2015년과 2024년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 대출 여부 결정 요인(PROBIT)

구분	2015년			2024년		
	등록금	생활비	등록+생활	등록금	생활비	등록+생활
소득인정액	-0.000583***	-0.00121***	-0.00105***	-0.000400***	-0.000673***	-0.000619***
	(1.57e-05)	(1.54e-05)	(1.42e-05)	(8.68e-06)	(6.95e-06)	(6.59e-06)
등록금	0.00246***	0.000773***	0.00174***	0.00439***	0.00115***	0.00232***
	(2.25e-05)	(2.29e-05)	(2.10e-05)	(3.21e-05)	(2.75e-05)	(2.58e-05)
장학금	0.000562***	0.000902***	0.000477***	-0.00305***	0.000374***	-0.000625***
	(4.52e-05)	(4.44e-05)	(4.10e-05)	(4.68e-05)	(3.66e-05)	(3.48e-05)
여성	0.00707**	-0.0251***	-0.00142	-0.0458***	-0.119***	-0.0945***
	(0.00337)	(0.00342)	(0.00315)	(0.00449)	(0.00379)	(0.00357)

〈표 V-1〉의 계속

구분	2015년			2024년		
	등록금	생활비	등록+생활	등록금	생활비	등록+생활
사립	0.379***	0.0425***	0.131***	0.263***	-0.120***	-0.0862***
	(0.00646)	(0.00568)	(0.00538)	(0.00984)	(0.00608)	(0.00594)
관측치 수	811,021	811,021	811,021	731,165	731,165	731,165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대출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몇 개 연도에 대해 제시한 결과는 〈표 V-2〉와 같다. 기본적으로 등록금액이 높을수록 대출액은 늘어나며, 장학금액이 많을수록 대출액은 줄어든다. 2020년을 제외하면 등록금 때문에 증가하는 대출액이 장학금으로 인해 낮아지는 대출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등록금이 대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에 의해 줄어드는 대출액도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대출액이 적으며 사립 재학생의 대출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나 사이버대가 4년제 대학(일반대·산업대·교육대)에 비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출액을 보면, 2013년의 경우 8구간을 제외하면 높은 구간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15년에도 이어졌지만 2018년부터는 6구간까지는 대출을 덜 받다가 7, 8구간으로 가면서 대출을 더 받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2022년에도 유지되었지만 2024년에는 4구간까지는 대출액이 늘었다가 5구간 이후 줄어드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자로 한정해 볼 때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대출액 증감의 패턴을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편 회귀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능력이 일관되게 떨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측되는 요인만으로는 대출 패턴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표 V-2〉 대출액에 대한 회귀분석(대출자들 대상)

구분	2013	2015	2018	2020	2022	2024
등록금	0.737*** (0.00291)	0.546*** (0.00281)	0.366*** (0.00298)	0.377*** (0.00332)	0.301*** (0.00327)	0.247*** (0.00412)
장학금	-0.617*** (0.0120)	-0.536*** (0.00692)	-0.556*** (0.00482)	-0.558*** (0.00506)	-0.255*** (0.00401)	-0.192*** (0.00468)
여성	-4.666*** (0.359)	0.105 (0.348)	-2.077*** (0.385)	-3.740*** (0.409)	-4.812*** (0.378)	-6.873*** (0.462)
사립	-23.08*** (0.759)	-21.96*** (0.732)	-7.226*** (0.789)	-6.544*** (0.839)	-16.62*** (0.761)	-20.02*** (0.937)
전문대	16.35*** (0.438)	8.872*** (0.430)	-2.124*** (0.480)	0.442 (0.516)	0.209 (0.490)	-0.422 (0.613)
사이버대	37.39*** (1.752)	15.58*** (1.446)	1.344 (1.326)	4.665*** (1.343)	20.80*** (1.123)	26.15*** (1.356)
차상위	11.66*** (1.088)	6.855*** (0.938)	-2.155** (0.984)	-2.127** (1.065)	-1.229 (0.946)	-3.184*** (1.175)
1구간	7.001*** (0.826)	1.106 (0.746)	-1.242 (0.810)	-2.381*** (0.912)	-16.81*** (0.852)	-18.04*** (1.077)
2구간	15.50*** (1.260)	1.688** (0.747)	-3.640*** (0.859)	-2.698*** (0.961)	-17.62*** (0.904)	-21.97*** (1.136)
3구간	26.80*** (1.724)	4.274*** (0.889)	-3.649*** (0.880)	-3.408*** (0.968)	-17.56*** (0.914)	-23.79*** (1.139)
4구간	34.72*** (2.002)	11.34*** (1.104)	-10.40*** (0.946)	-8.473*** (1.024)	-10.99*** (0.991)	-22.69*** (1.225)
5구간	39.56*** (2.138)	20.88*** (1.359)	-9.763*** (1.178)	-6.629*** (1.244)	-10.40*** (1.190)	-21.56*** (1.456)
6구간	47.85*** (2.262)	31.20*** (1.519)	-5.227*** (1.019)	-1.623 (1.012)	-3.620*** (0.974)	-16.74*** (1.194)
7구간	51.10*** (2.410)	35.98*** (1.671)	5.407*** (1.190)	5.817*** (1.336)	2.914*** (1.129)	-5.142*** (1.391)
8구간	22.50*** (2.429)	33.95*** (1.705)	6.613*** (1.252)	8.437*** (1.307)	3.145*** (1.024)	-4.298*** (1.272)
관측치	243,323	228,601	182,628	169,747	144,496	143,685
R2	0.460	0.367	0.260	0.257	0.112	0.050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마지막으로 비대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Tobit 분석의 결과를 <표 V-3>에 제시하였다.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기초구간에 비해 2, 3, 4구간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경향은 2014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표 V-3〉 대출액에 대한 Tobit 분석

구분	2013	2015	2018	2020	2022	2024
등록금	0.720*** (0.00727)	0.549*** (0.00584)	0.392*** (0.00582)	0.472*** (0.00643)	0.496*** (0.00690)	0.677*** (0.00868)
장학금	0.0271 (0.0284)	-0.141*** (0.0129)	-0.134*** (0.00855)	-0.201*** (0.00882)	-0.239*** (0.00805)	-0.287*** (0.00937)
여성	15.37*** (0.901)	0.422 (0.734)	-21.18*** (0.742)	-21.39*** (0.769)	-24.78*** (0.763)	-27.26*** (0.932)
사립	52.13*** (1.804)	35.64*** (1.449)	31.07*** (1.465)	20.35*** (1.533)	-0.305 (1.509)	-23.12*** (1.865)
전문대	11.53*** (1.123)	-5.118*** (0.921)	-15.45*** (0.938)	-14.96*** (0.982)	-9.526*** (1.003)	-5.849*** (1.249)
사이버대	-41.70*** (3.887)	-69.74*** (2.635)	-66.14*** (2.305)	-60.67*** (2.312)	-39.67*** (2.159)	-18.63*** (2.624)
차상위	26.98*** (2.951)	10.72*** (2.128)	-9.824*** (2.045)	-13.62*** (2.160)	-14.28*** (2.050)	-8.762*** (2.524)
1구간	-23.82*** (2.192)	16.40*** (1.690)	-9.861*** (1.684)	-11.17*** (1.852)	-27.00*** (1.840)	-29.29*** (2.296)
2구간	19.74*** (3.115)	-17.24*** (1.676)	-31.78*** (1.769)	-34.70*** (1.932)	-44.04*** (1.936)	-49.82*** (2.408)
3구간	21.10*** (4.165)	-39.05*** (1.912)	-50.83*** (1.792)	-49.67*** (1.932)	-58.85*** (1.943)	-66.49*** (2.400)
4구간	11.56** (4.804)	-55.07*** (2.255)	-60.28*** (1.892)	-56.06*** (2.015)	-68.95*** (2.069)	-85.80*** (2.542)
5구간	0.654 (5.113)	-70.68*** (2.667)	-72.96*** (2.291)	-67.04*** (2.393)	-85.74*** (2.434)	-102.9*** (2.968)

〈표 V-3〉의 계속

구분	2013	2015	2018	2020	2022	2024
6구간	-6.828 (5.396)	-101.5*** (2.918)	-87.49*** (1.987)	-89.04*** (1.962)	-101.0*** (2.007)	-121.7*** (2.451)
7구간	-47.91*** (5.719)	-138.3*** (3.160)	-102.7*** (2.231)	-101.0*** (2.462)	-125.5*** (2.257)	-150.1*** (2.780)
8구간	-125.3*** (5.735)	-189.3*** (3.179)	-155.7*** (2.311)	-143.6*** (2.397)	-155.8*** (2.065)	-183.3*** (2.558)
관측치	950,714	904,575	920,290	868,340	831,800	816,798

주: () 안은 표준오차이며, *** p < 0.01, ** p < 0.05, * p < 0.1

이상의 대출 여부와 대출액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위 학자금 지원구간에 더 두텁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막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출받는 학생의 비중으로 보거나 대출 확률로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도가 지나도 소득에 따른 대출액 차이가 줄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출받는 학생들로만 표본을 구성해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출이 학자금이나 필요한 생활비 이외의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한국장학패널 분석

한국장학재단 DB를 이용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과연 장학패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을 평가한 추정식의 종속변수를 대출 여부 및 대출 금액으로 변경하여 추정한 결과를 〈표 V-4〉에 요약하였다. 본 분석에서 대출은 장학재단 대출 및 금융권 대출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액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분석대상은 모든 졸업생이며, 관측치 수가 첫 직장 분석과 다른 것은 졸업한 후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와 3차년도(2017) 이전에 취업하여 첫 취업 당시의 자료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대출금액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토빗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대다수가 비대출자인 장학재단 DB와 유사하게 응답자의 54%가 대출 경험이 없어 0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토빗분석은 모서리해(corner solution)가 발생하는 경우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모서리해는

대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각 개인은 예산선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출의 경우 이 예산선을 확장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런데 어떤 개인은 대출을 활용하여 예산선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하지 않는다. 혹은 대출이 아니라 예금을 원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대출을 하지 않는 선택을 모서리해로 볼 수 있다.

만일 국가장학금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가 대출확률이나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이 대출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대출할 확률이 낮았다. 국가장학금 지급을 결정하는 심사과정에 가구의 경제적 상황도 포함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출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출확률이 낮아지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결과는 국가장학금이 충분한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출금액에 대한 분석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의 회귀계수가 양수(+)를 보인 것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대출금액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V-4〉 국가장학금이 대출에 미친 영향

	대출 여부		대출금액(토빗분석, 한계효과)	
수혜 여부	0.425*** (0.157)		582.8 (379.2)	
log(수혜금액)		0.0221* (0.0114)		7.609 (22.32)
수혜 여부×log(가구소득)	-0.0511* (0.0262)		-70.94 (63.44)	
log(수혜금액×가구소득)		-0.00169 (0.00629)		8.981 (12.62)
졸업 당시 나이	0.0354*** (0.00332)	0.0361*** (0.00333)	78.18*** (6.470)	78.55*** (6.474)
여성	0.0587*** (0.0124)	0.0572*** (0.0124)	128.7*** (24.42)	127.1*** (24.46)

〈표 V-4〉의 계속

	대출 여부		대출금액(토빗분석, 한계효과)	
기혼	-0.0102 (0.0222)	-0.00626 (0.0222)	-10.64 (43.98)	-8.201 (44.06)
log(가구소득)	-0.0139 (0.0241)	-0.0510*** (0.0114)	-40.84 (60.65)	-106.3*** (22.73)
상수항	-0.443*** (0.169)	-0.229** (0.111)		
관측치 수	9,216	9,216	9,216	9,216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
자료: 한국장학재단 3~8차

4. 대학 교육의 기회 형평성 제고

대학교육의 형평성 제고는 국가장학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이동성과 경제적인 형평성 제고라고 한다면 그 유력한 수단을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에서 찾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대학교육의 비용과 상관없이 대학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선택하는 대학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에 대한 선호가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만으로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면, 대학 등록금과 소득(구간)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이 진학하는 대학의 등록금이 시계열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는 횡단면 상으로 소득과 등록금 간의 관계를 통하여 국가장학금이 교육 기회 형평성에 기여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주어진 국가장학금 수혜자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등록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립대학생으로 표본을 한정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간단한 식을 통해 소득과 등록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본다. 두 식에 대한 추정치는 2015년에서 2024년까지 각 연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단계로 살펴

보는 이유는 기초와 차상위 구간의 경우 소득자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과 1구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 등록금 차이를 먼저 살펴본 후, 소득자료가 주어진 1구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소득에 대한 등록금의 탄력성을 살펴본다.

$$\text{등록금}_i = \beta_0 + \beta_1(\text{기초/차상위더미})_i + \epsilon_i$$

$$\ln(\text{등록금})_i = \beta_0 + \beta_1 \ln(\text{가구소득})_i + \epsilon_i$$

추정 결과는 <표 V-5>로 요약할 수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과 1구간 이상 소득계층 간 등록금 차이는 약 10만원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2015년에는 약 13만원이었지만, 2016년 10만원으로 떨어졌고 2017년 이후에는 10만원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간 장학금 수혜자들이 선택했던 학교의 등록금 평균이 313만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를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1구간 이상에서 보이는 장학금 수혜자 간의 소득탄력성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득탄력성의 값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0.006~0.018,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0.0104~0.029 수준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인정액의 평균은 547만원이고 등록금의 평균은 305만원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소득이 10% 이상 더 높아서 약 600만원에 이르더라도 등록금은 1만원 이하로 더 높을 뿐이다. 따라서 소득 1구간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사이에서는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V-5> 등록금과 소득 사이의 관계 추정 결과

구분	기초/차상위 더미(만원)	소득평가액 탄력성	소득인정액 탄력성
2015	-13.18	0.00655	0.0104
2016	-10.33	0.008	0.0138
2017	-8.874	0.0102	0.0172
2018	-9.438	0.0145	0.0219
2019	-8.8	0.0192	0.0246
2020	-8.687	0.0187	0.0248
2021	-9.012	0.0184	0.024
2022	-10.02	0.0178	0.0277
2023	-9.427	0.0156	0.0282
2024	-9.756	0.0181	0.0292

주: 각 연도별 추정에서 나온 계수값이며 모든 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전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자 간 소득과 등록금 사이의 관계는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석은 장학금 수혜자 간의 비교일 뿐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분석은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 2024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 평균 등록금은 1인당 연간 약 683만원이며, 이 중 사립대학이 약 763만원, 국공립대학이 약 421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학기당으로 보면 사립대학의 등록금액 평균은 약 380만원 수준이다. 이와 비교할 때 장학금 수혜자들이 선택한 대학의 등록금은 305만원으로 더 낮은 수준이다. 물론 평균을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 이 수치를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차이를 도출하는 데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등록금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수혜자를 포함한 확장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장학금 수혜자 간에 보이는 소득에 대한 등록금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나 차상위 계층의 학기당 실질 등록금 지급액은 평균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등록금 수준이 더 높은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장학금만으로는 저소득층이 더 좋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향후 확장된 자료를 통해 더 엄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5. 노동시장 성과 개선

가. 분석 방법

노동시장 성과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표 중에서 본 심층평가에서는 한국장학패널 1기 조사의 3차(2017년)~8차(2023년) 자료를 이용하여 첫 직장 정규직 여부, 첫 직장의 세전 월급, 현 직장 정규직 여부, 현 직장의 세전 월급을 살펴본다. 3차 자료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정보를 패널에 병합하여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장학금액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3~8차로 제한하였다.

첫 직장과 관련한 분석에 사용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 \text{ 국가장학금}_i + X_i\gamma + \epsilon_i$$

첫 직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는 만큼 졸업 후 취업한 첫 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종속 변수는 첫 직장에 취업한 졸업생 i 의 정규직 여부, 세전 월급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을 응답한 비율이 낮아 응답하지 않은 관측치의 세전 월급의 예측치 (fitted value)를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예측치를 산출하였다. 먼저 취업 첫 해 월급을 응답한 관측치를 대학 재학 중 국가장학금을 받은 그룹과 받지 못한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별로 위의 추정식에서 국가장학금 $_i$ 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첫 직장의 월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모든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해당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예측치를 계산하고, 그룹별로 결측치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월급으로 간주하였다. 분석에서는 세전 월급에 로그를 취하였다. 국가장학금 $_i$ 는 개인 i 가 대학에 재학할 동안 받은 국가장학금 총액 혹은 대학 재학 당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나타내며, 본 심층평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는 회귀계수는 β 이다. 만일 국가장학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β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X_{it} 는 통제변수 행렬이며, 만 나이, 여성, 기혼 여부, 가구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 졸업학교 소재지 더미, 졸업학교 유형 더미, 졸업학과 계열 더미 등을 포함한다. 분석에 이용하는 가구소득은 취업 후 가구소득이 아니라 대학교에 재학할 당시의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 수령금액이 가구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 재학 당시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의 학업환경이 달라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 연도가 아닌 대학 재학 당시의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가구소득의 측정 시점은 1기의 1차 조사 시점(2014년)이며, 이는 패널에서 처음 관측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취업 후 소득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어 대학 재학 당시의 가구소득을 잘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다. 한국장학패널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범위로 설문하고 있어 각 범위의 중간값을 가구소득으로 환산하였으며, 최솟값은 100만원, 최댓값은 1,000만원이다. 정확한 가구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구소득을 분석에 포함하는 이유가 학생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기 위함이므로, 범주의 형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ϵ_{it} 는 오차항이다.

현재 직장과 관련한 분석은 각 연도에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응답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 \text{국가장학금}_i + X_{it}\gamma + \tau + \epsilon_{it}$$

종속변수는 졸업생 i 의 t 연도 세전월급, 정규직 여부이다. 현재 직장의 세전월급 또한 첫 직장의 세전월급과 마찬가지로 예측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식에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 t 가 추가된 것은 동일한 졸업생이 여러 연도에 걸쳐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i 는 개인 i 가 대학에 재학할 동안 받은 국가장학금 총액 혹은 대학 재학 당시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나타낸다. X_{it} 는 통제변수 행렬이며, 첫 직장과 관련한 분석과 동일하지만 현재 직장 근무지, 현재 직장 업종, 현재 직장 근무형태 더미변수 등을 추가하였다. τ 는 연도더미, ϵ_{it} 는 오차항이다.

학생의 능력을 적절히 통제하고 성적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학생의 성적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에 포함한 표본 중 25%만이 성적과 관련한 문항에 응답하여 해당 변수를 포함한 경우 추가적인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1차년도 가구소득이 부모가 가진 능력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고, 이 변수를 포함하여 학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일부 통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학점을 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효과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기초통계

〈표 V-6〉에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기초통계를 요약하였다. 첫 직장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원, 현재 직장은 257만원이었으며, 평균 취업기간은 2년이다. 2년 사이 50만원의 월급 상승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율도 23%에서 7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응답자 중 약 90%가 국가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대학 재학 시절 평균적으로 770만원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52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처음 취업한 시점의 나이는 약 27세로, 남성의 군복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 학생의 대학 재학기간 혹은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비율은 약 50% 정도였고, 기혼자의 비율은 첫 직장 재직 당시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2년 후인 현재 직장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17%로 증가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약 18%였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76%, 대다수는 인문·사회계열(32%)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기초통계

		첫 직장	현재 직장
월급(만원)		207.0 (77.14)	257.1 (133.6)
정규직 비율(%)		22.9	71.3
국가장학금 수혜비율(%)		87.8	88.8
국가장학금 수혜금액(만원)		776.5 (747.6)	770.3 (726.9)
만 나이		26.73 (2.222)	28.06 (2.385)
여성 비율(%)		51.1	52.2
기혼 비율(%)		6.83	16.5
취업기간(년)			2.231 (1.447)
가구소득(만원)		358.4 (178.3)	359.3 (179.5)
졸업학교 소재지 비율(%)	서울	17.5	16.6
	인천/경기	14.7	15.4
	그외	67.8	68.0
졸업학교 유형 비율(%)	2년제 전문대학 비율(%)	10.9	10.9
	3년제 전문대학(%)	12.6	11.1
	4년제 대학교	75.6	77.0
	원격(방송, 사이버, 디지털)	61.9	68.2
	기타	21.8	36.0

〈표 V-6〉의 계속

		첫 직장	현재 직장
졸업학교 전공계열 비율(%)	인문·사회계열	32.2	32.6
	자연과학계열	16.4	17.1
	공학계열	28.0	28.6
	예·체능계열	13.0	12.2
	의학계열	10.4	9.54
관측치 수		8,243	29,455

주: 첫 직장과 관련한 분석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모든 학생의 취업 첫 해, 분석기간 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3차 자료에서 응답한 값에 한정하여 수행하였음.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다. 분석 결과

〈표 V-7〉은 국가장학금이 첫 직장과 관련한 변수에 미친 영향을, 〈표 V-8〉은 현재 직장과 관련한 변수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국가장학금은 현재 직장보다는 첫 직장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월급이 3% 높고, 첫 직장 월급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에 대한 탄력성은 0.007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1% 증가하면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이 0.007% 증가한다. 국가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 외의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첫 직장이 정규직일 확률이 높아지나 현재 직장이 정규직은 확률은 낮아진다. 이는 기초통계와는 다른 양상이나 회귀분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즉 성별이나 결혼 여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나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이 동일할 때 나이가 한 살 많을 때를 의미하므로, 기초통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경우 첫 직장과 현 직장 모두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았고, 현재 직장이 정규직일 확률도 더 낮았다.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은 남성에 비해 17% 낮았고, 현재 직장은 11% 정도 낮아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여성의 임금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 재학 중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 직장과 현재 직장의 월급이 더 높아 노동시장 진입 전에 형성된 경제적 계층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7〉 국가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첫 직장 분석)

	log(첫 직장 월급)		첫 직장 정규직 여부	
수혜 여부	0.0301** (0.0130)		0.00816 (0.0143)	
log(수혜금액)		0.00718*** (0.00189)		0.00203 (0.00208)
만 나이	-0.000570 (0.00238)	0.000426 (0.00240)	0.0317*** (0.00256)	0.0320*** (0.00259)
여성	-0.168*** (0.00983)	-0.167*** (0.00982)	0.0723*** (0.0114)	0.0725*** (0.0114)
기혼	0.0573*** (0.0180)	0.0580*** (0.0180)	0.00134 (0.0196)	0.00152 (0.0196)
정규직 여부	0.0340*** (0.0103)	0.0337*** (0.0103)		
log(가구소득)	0.0249*** (0.00719)	0.0282*** (0.00724)	0.00843 (0.00865)	0.00938 (0.00873)
상수항	5.130*** (0.0794)	5.073*** (0.0810)	-0.660*** (0.0899)	-0.677*** (0.0924)
관측치 수	8,243	8,243	8,243	8,243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표 V-8〉 국가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현재 직장 분석)

	log(현재 직장 월급)		현재 직장 정규직 여부	
수혜 여부	-0.00643 (0.0110)		0.00215 (0.00668)	
log(수혜금액)		0.00151 (0.00158)		3.54e-05 (0.000976)
만 나이	0.0128*** (0.00205)	0.0133*** (0.00206)	-0.00890*** (0.00124)	-0.00894*** (0.00125)
여성	-0.113*** (0.00861)	-0.112*** (0.00860)	-0.0399*** (0.00543)	-0.0400*** (0.00544)
기혼	0.0382*** (0.00937)	0.0383*** (0.00937)	-0.0202*** (0.00525)	-0.0201*** (0.00526)
정규직 여부	0.0597*** (0.0104)	0.0597*** (0.0104)		
취업기간	0.0515*** (0.00307)	0.0514*** (0.00307)	0.123*** (0.00230)	0.123*** (0.00230)
log(가구소득)	0.0386*** (0.00668)	0.0404*** (0.00674)	0.00192 (0.00388)	0.00177 (0.00393)
상수항	4.774*** (0.0745)	4.736*** (0.0757)	1.000*** (0.0438)	1.004*** (0.0452)
관측치 수	29,443	29,443	29,453	29,443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현재 직장 근무지, 현재 직장 업종, 현재 직장 근무형태,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6. 사회이동성 개선

가. 분석 방법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 아니었으면 받지 못했을 고등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부모세대보다 경제적 환경이 더 나아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첫 직장이 정규직인지를 살펴보는 분석과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 가구소득과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혹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변수를 교차(interaction)한 항을 추가한 다음의 추정식을 분석에 활용한다. 만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교차항은 0의 값을 가진다.

$$y_i = \alpha + \beta \text{국가장학금}_i + \delta \ln(\text{가구소득} \times \text{국가장학금})_i + X_i \gamma + \tau + \epsilon_i$$

δ 가 이번 분석의 주요 관심 대상 회귀계수가 된다. 만일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 δ 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δ 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혹은 동일한 금액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세대의 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실증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성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적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장학금의 효과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분석 결과

앞선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세전 월급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과연 국가장학금이 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 V-9>와 <표 V-10>에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과 국가장학금 관련 변수를 교차한 항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중에서 가구소득이 1% 감소할 때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이 0.08% 증가하고, 첫 직장이 정규직일 확률도 0.05%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동일한 금액의 국가장학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가구소득이 1% 감소하면 첫 직장과의 현재 직장의 세전 월급이 0.02%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중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평균보다 100만원 낮은 경우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이 4.6만원 증가하고, 첫 직장이 정규직일 확률은 1.3%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금액의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학생 중에서 평균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낮은 경우 첫 직장과의 현재 직장의 세전 월급이 1.2만원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V-6>에서 첫 직장이 정규직인 비율이 22.9%이고, 첫 직장의 월급이 207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이다. 가구소득에 로그를 취한 변수의 회귀계수와 비교하면 그 절댓값이 더 작지만, 국가장학금이 이를 일부 감소시켜 경제적 계층이 세대 간에 교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정확한 가구소득을 분석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범위로 응답한 값을 기반으로 가구소득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에 활용한 자료인 한국장학패널 자료가 전체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장학금의 사회이동성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연구의 교차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소간 보수적인 해석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V-9〉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첫 직장 분석)

	log(첫 직장 월급)		첫 직장 정규직 여부	
수혜 여부	0.514*** (0.125)		0.305** (0.138)	
log(수혜금액)		0.0413*** (0.00902)		0.0149 (0.0108)
수혜여부×log(가구소득)	-0.0816*** (0.0212)		-0.0501** (0.0234)	
log(수혜금액×가구소득)		-0.0191*** (0.00498)		-0.00721 (0.00592)
만 나이	-0.000494 (0.00238)	0.00184 (0.00243)	0.0318*** (0.00256)	0.0326*** (0.00265)
여성	-0.168*** (0.00984)	-0.166*** (0.00983)	0.0722*** (0.0114)	0.0729*** (0.0114)
기혼	0.0586*** (0.0180)	0.0586*** (0.0180)	0.00213 (0.0196)	0.00176 (0.0196)
정규직 여부	0.0332*** (0.0103)	0.0332*** (0.0102)		
log(가구소득)	0.0948*** (0.0197)	0.0471*** (0.00874)	0.0513** (0.0215)	0.0165 (0.0106)
상수항	4.713*** (0.138)	4.943*** (0.0880)	-0.916*** (0.146)	-0.726*** (0.102)
관측치 수	8,243	8,243	8,243	8,243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표 V-10〉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현재 직장 분석)

	log(현재 직장 월급)		현재 직장 정규직 여부	
수혜 여부	0.00684 (0.122)		0.113 (0.0739)	
log(수혜금액)		0.0284*** (0.000976)		-0.00134 (0.00470)
수혜여부×log(가구소득)	-0.00223 (0.0204)		-0.0186 (0.0122)	
log(수혜금액×가구소득)		-0.0150*** (0.00424)		0.000768 (0.00256)
만 나이	0.0128*** (0.00204)	0.0147*** (0.00209)	-0.00884*** (0.00124)	-0.00901*** (0.00129)
여성	-0.113*** (0.00860)	-0.111*** (0.00861)	-0.0398*** (0.00543)	-0.0401*** (0.00545)
기혼	0.0382*** (0.00937)	0.0387*** (0.00937)	-0.0201*** (0.00525)	-0.0202*** (0.00525)
정규직 여부	0.0597*** (0.0104)	0.0598*** (0.0104)		
취업기간	0.0515*** (0.00307)	0.0516*** (0.00307)	0.123*** (0.00230)	0.123*** (0.00230)
log(가구소득)	0.0406** (0.0192)	0.0553*** (0.00792)	0.0180 (0.0115)	0.00101 (0.00470)
상수항	4.762*** (0.128)	4.628*** (0.0810)	0.903*** (0.0800)	1.010*** (0.0499)
관측치 수	29,443	29,443	29,453	29,443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현재 직장 근무지, 현재 직장 업종, 현재 직장 근무형태,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7. 소결

한국장학재단 DB와 한국장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 사업군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사회이동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7>과 <표 V-8>에서 국가장학금은 현재 직장보다는 첫 직장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 첫 직장의 세전 월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 V-9>와 <표 V-10>에서 가구소득과 국가장학금 관련 변수를 교차한 항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국가장학금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현 직장 및 첫 직장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장학금이 일부 완화하여 세대 간 경제적 계층의 교착을 방지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인 만큼,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계층 이동성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가장학금이 충분한 만큼 저소득 가구에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꾸준히 감소시키고 학자금 지원구간 사이의 실부담액의 차이도 줄어드는 데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액 자체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저소득 가구의 실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부담액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그림 V-5]에서 1구간의 소득 대비 실부담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1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일수록 대출자의 비중이 높았고 ([그림 V-6], [그림 V-7] 참조), 한국장학재단 DB와 한국장학패널자료 모두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여(<표 V-1>, <표 V-2>, <표 V-4> 참조) 저소득 가구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지급금액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발견은 적어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교육의 비용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장학금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학금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사이의 비교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수혜 집단이 장학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수혜 집단에 비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이 높고, 대학의 선택에서 비수혜 집단보다 더 큰 재정 제약을 받고 있다면 장학금을 받는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 수혜 집단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분석 없이 수혜 집단을 늘리는 선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자금 지원구간의 구분과 장학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실제 소득의 분포를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중위 소득 대비 소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판단되나, 현재 각 학자금 지원구간의 장학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소득 대비 실부담 등록금 기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실부담 등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계층에 비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VI. 국가장학금 사업군 세부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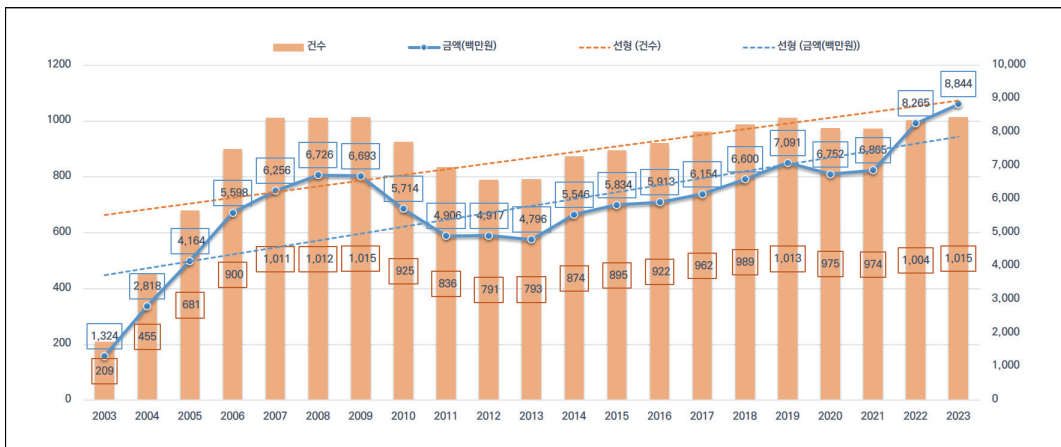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국가우수장학금과 취업연계장학금 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우수장학금

가.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3년 약 13억원 209건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감소되었는데, 이 시기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 시기였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과학기술 분야 정부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2년 2023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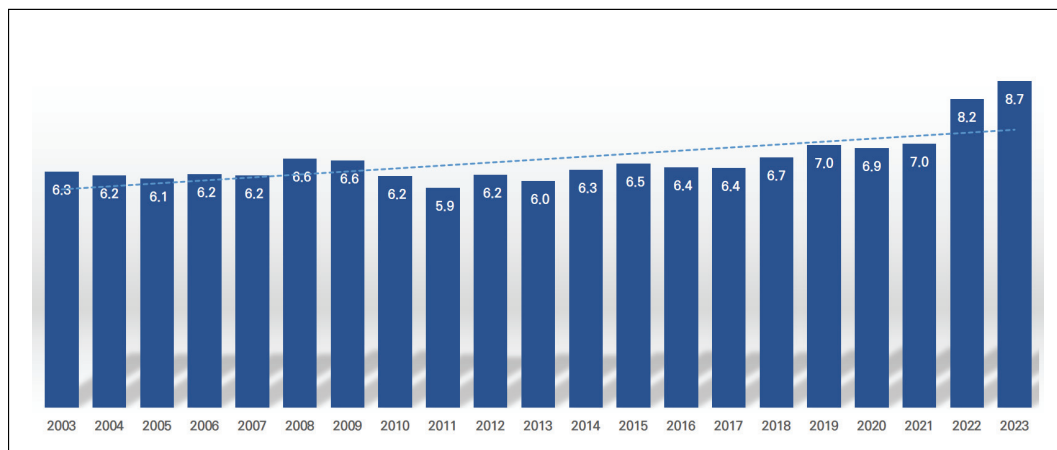
[그림 VI-1]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지원 규모는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비(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원), 해외장학생의 경우 실비 학비와 체제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달러 수준이다. 수혜자 1인당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약 700만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820만원과 87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VI-2] 대통령과학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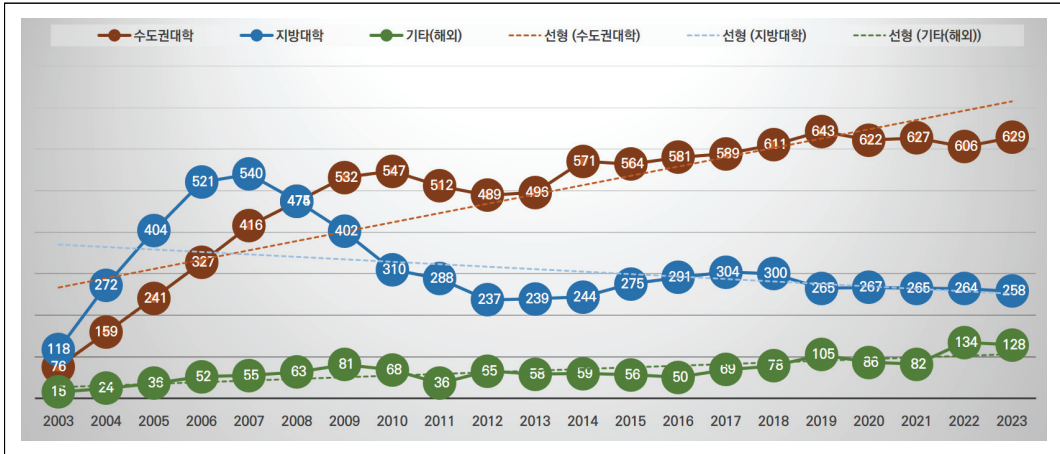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취지는 좋으나 특정 지역, 고소득층, 특정학교에 편중성이 존재한다.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며 타 학생에게 좌절감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지역추천제, 즉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지역별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받는 지역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를 살펴보면, 수도권대학 재학생의 비중이 지방대학 재학생의 2.5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3]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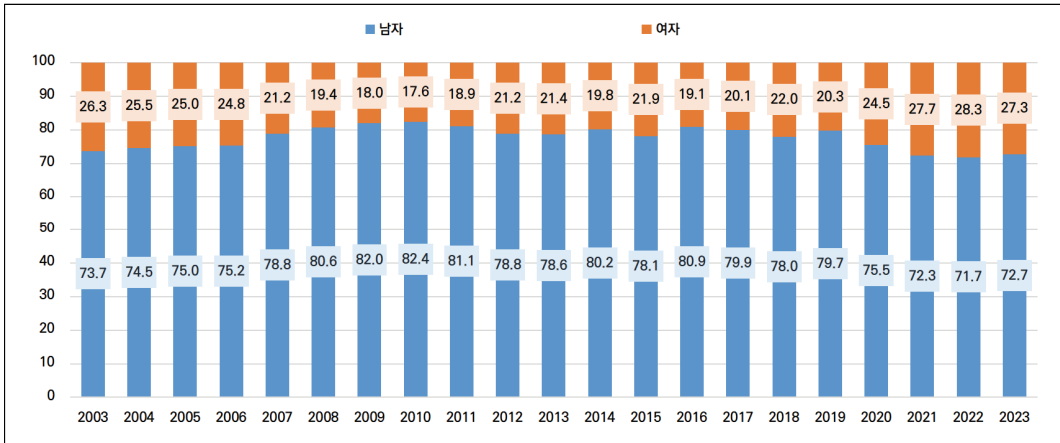
(단위: 명)



한편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비중이 여학생의 2.5배 정도로 많은데, 2016년 이후 수혜 여학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4]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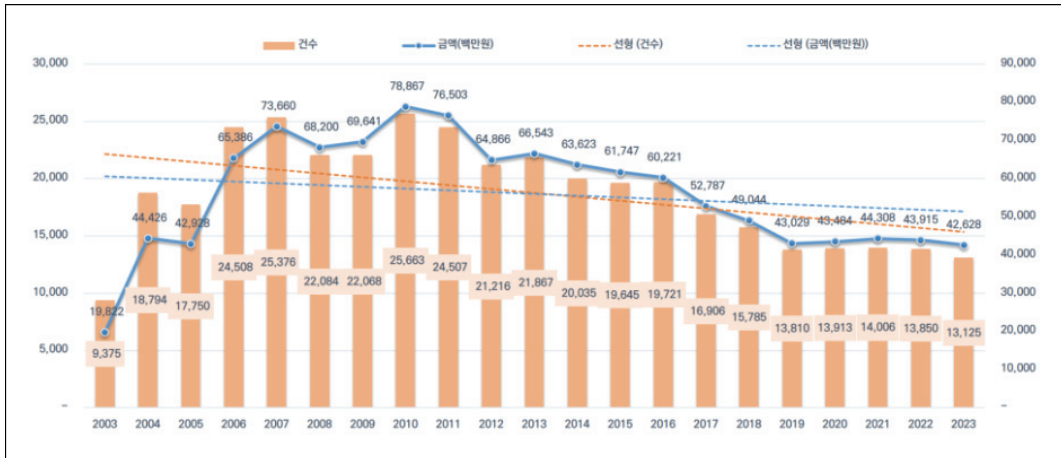


나.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으로 운영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은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3년 도입되어 2010년까지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금액과 건수 모두 감소해 왔다. 이러한 감소는 과기부가 학생 대상 장학금보다는 첨단분야 이공계 학과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인재양성정책으로 전환한 것 과도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2018~2021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인력양성(2003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I-5]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총액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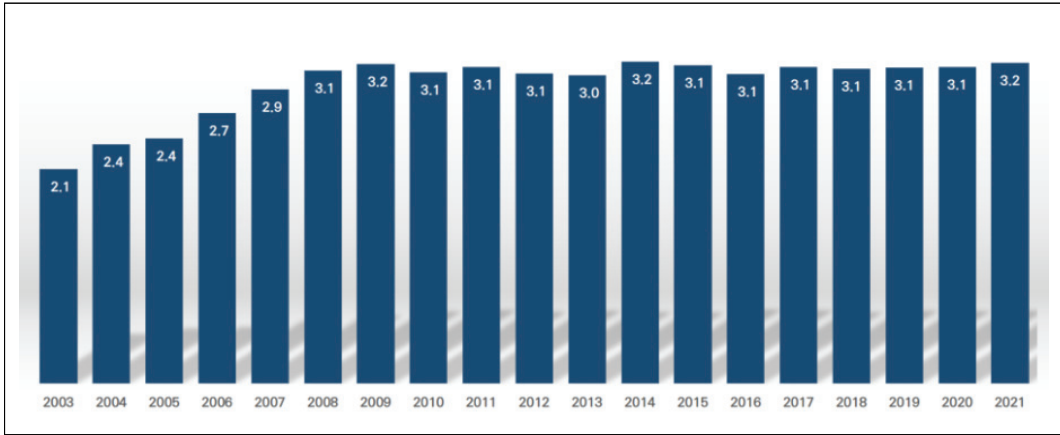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건수)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의 건당 지원금액은 300만원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VI-6]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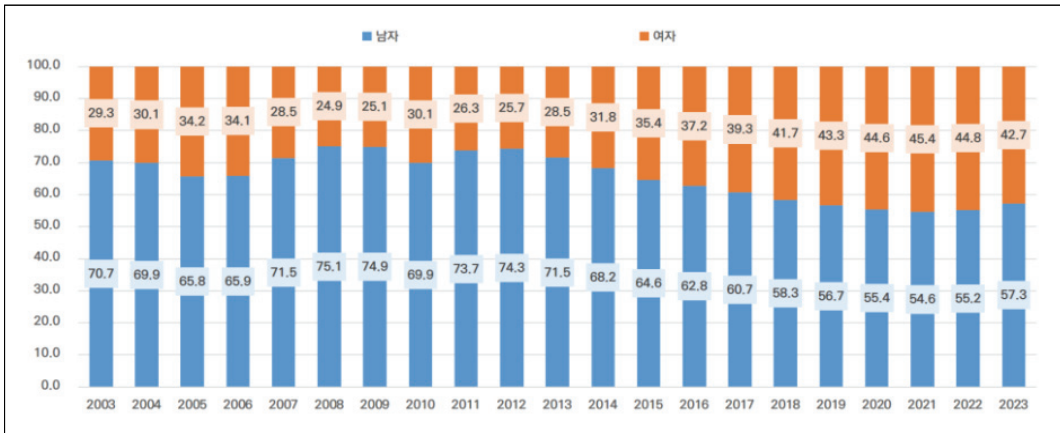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까지는 남자 수혜자의 비중이 70%를 초과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기준 남자와 여자 수혜자 비율은 각각 57.3%와 42.7%로 격차가 감소하였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의 간접 효과로서 우수한 여학생의 이공계 유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7]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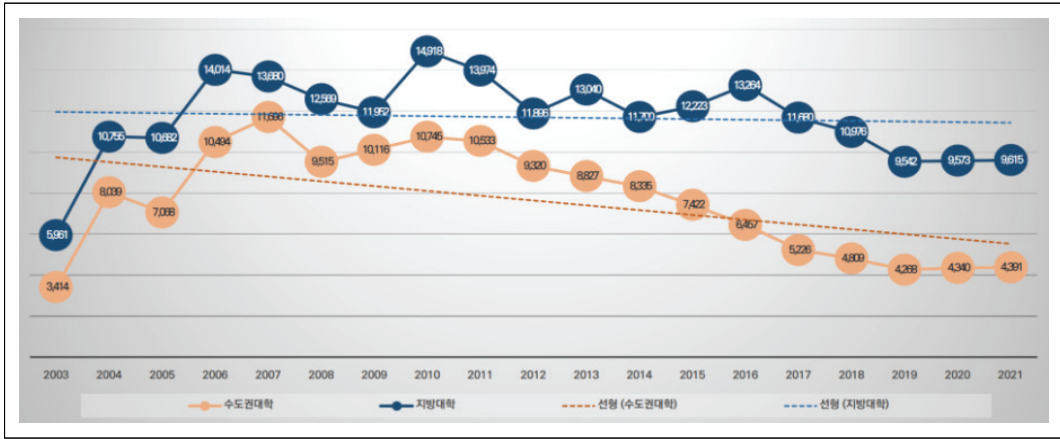
(단위: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자는 전체적으로 지방대학 소재 재학생이 많았으며, 그 격차는 점차 더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도입된 ‘지역대학 우수학생’ 장학금이 2010년부터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으로 통합된 것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I-8]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역대 수혜자 대상 진로 추적조사(2023년 2월,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 결과, 학부 장학생의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일반 이공계 졸업생 대비 약 3.5배 이상(일반 졸업생 11.3%, 대통령과학장학생 53.4%, 국가우수장학생 4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학부 장학생 99.5%는 이공계 산학연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공계 이탈로 장학금을 환수한 비율이 약 0.5%에 불과(13만명 중 690여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 이는 특히 의무종사제도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도입 첫 해인 2024년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접수인원 2,980명)하여(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확인되었다.

다. 인문100년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은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에 대응하여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부터는 I 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발 및 지원하고 있다.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 중 고득점자인 I 유형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하여 선발유형 간 지원범위(규모)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탐색 I·II유형(최대 4년 지원)’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확립 I·II유형(최대 2년 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VI-1〉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규 장학생	전공탐색	I 유형 ·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II 유형 ·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4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1학년 재학생(신입생)
	전공확립	I 유형 · 국내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3~4학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II 유형 · 국내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3~4학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3학년 재학생
계속 장학생	일반	· 계속지원기준 충족 학생 대상 당해 학기 장학금 지원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간평가(2+2)	· 신규 선발 시 1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2년간(3~4학년) 계속지원 자격 여부 결정	2009년 이후 선발자 (1학년 선발자 중 3학년 진급자)
	진도보고	· 신규 선발 시 3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1년간(4학년) 계속지원 자격 여부 결정	2020년 이후 선발자 (3학년 선발자 중 4학년 진급자)
	학업장려비	· 매 학기 진도보고서 및 교수평가서 제출 및 대학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 여부 결정(대학 대응투자(50%) 시에 한해 지원)	2015~2017년 선발자
	생활비	·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학기별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 추천 시 지원	2018~2019년 선발자
		·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등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2020년 이후 선발자 (I 유형)
일시지원	· 국내 대학 3~4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 선발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4학년 재학생	

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4년도 인문100년장학금 업무처리기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7_01&hmNavi=JH,05,04,00, 검색일자: 2025.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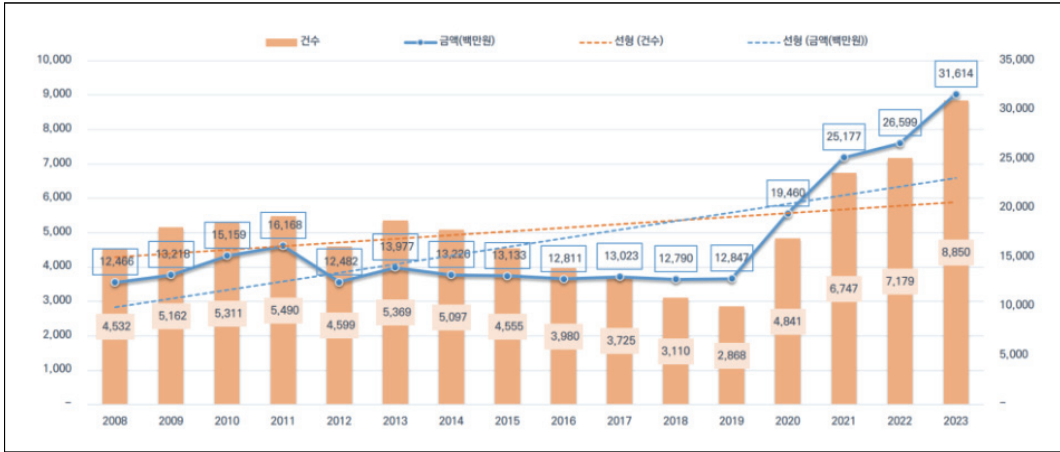
‘전공탐색 유형’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 가능성 등을, ‘전공확립 유형’은 학업성적(60%), 대회·공모전 수상(20%), 대학별 별도 기준(20%)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경제적 수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반영한다. 선발인원이 참여대학 수보다 많은 선발 유형에 대해서는 참여대학 중 학생 사전신청이 있는 대학에 선발인원을 기본 배정(1명)한다. I 유형의 경우 ‘등록금 + 생활비’를, II 유형의 경우 ‘등록금’을 지원한다. 2009년도까지는 성적을 기준으로 중간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적과 이수학점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2015년 이후에는 성적 기준 + 이수학점 기준 + 중간평가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도입하여 2011년까지는 지원금액과 건수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정감

사 지적²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면서 장학생 선발 규모가 500명에서 1,500명으로 3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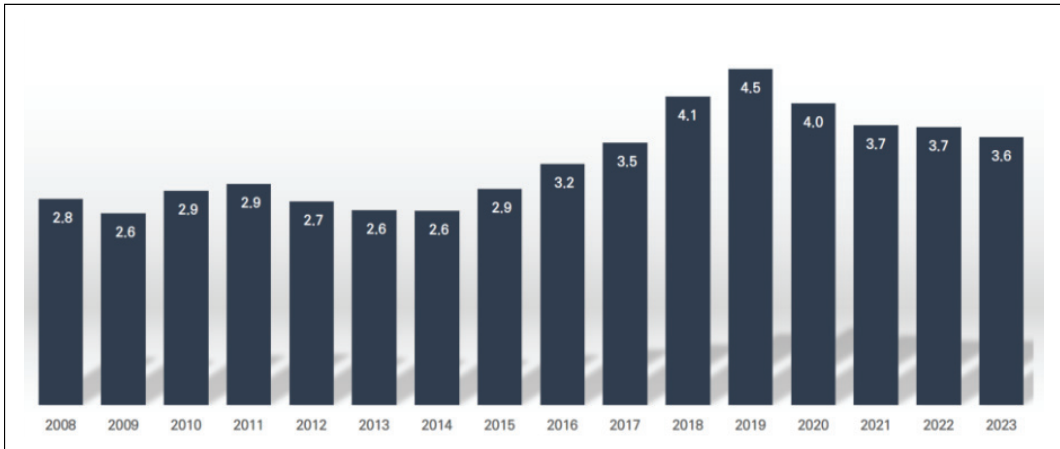
[그림 VI-9]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단위: 백만원, 건수)



[그림 VI-10] 인문100년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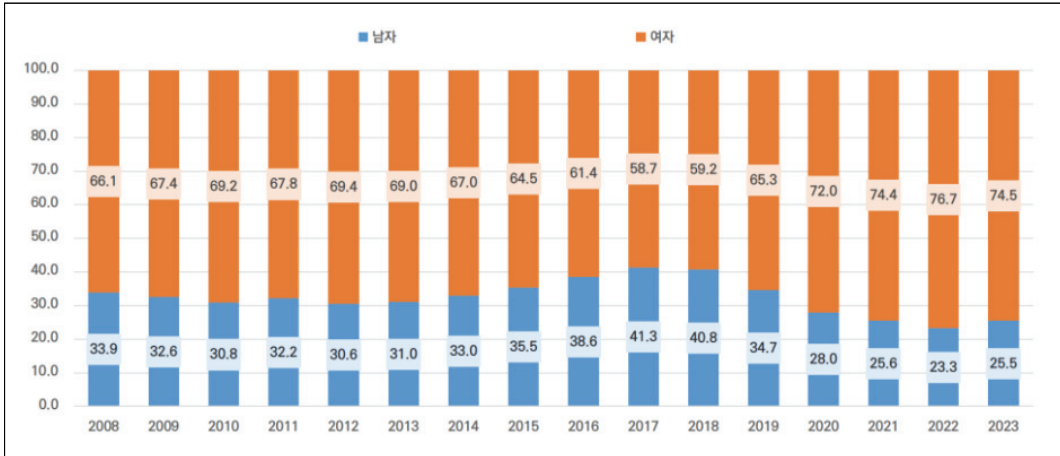


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이 많고 연도별로 그 격차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여학생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이공계열에 편중되지 않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역량의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지원을 강화할 것(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그림 VI-11] 인문100년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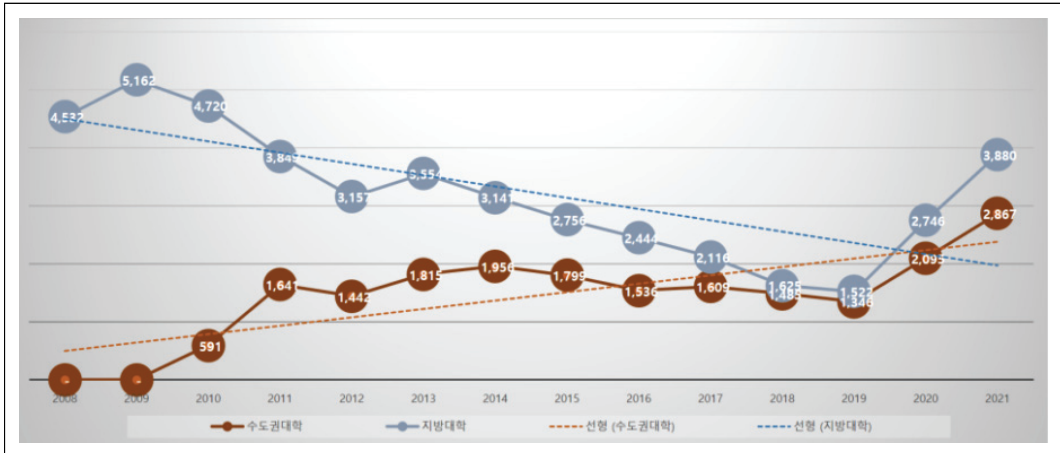
(단위: %)



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대학 학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 이후 다시 지방대학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2] 인문100년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인문100년 장학생(조사대상자 1,875명, 응답자 628명) 진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취·창업(52.0%) > 진학(23.7%) 순으로 많았다. 국가우수장학생 취업률(인문 49.8%)은 졸업자 취업률(인문 49.5%)과 유사한 수준이나, 진학률(인문 23.7%)은 졸업자 평균(인문 3.8%)의 약 20%p를 상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우수장학금 특성

상 장학생의 학업 지속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진학률이 전체 졸업자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장학금 수혜가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생활에서 장학금이 기여한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안정(54.1%) > 학업 성취도 및 집중도 강화(26.9%) > 정서적 안정(16.4%)’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라.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원 예산은 113억원이며, 신규장학생(440명 내외) 및 계속장학생(2023년 이전 선발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발 및 지원하고 있다.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 중 고득점자인 I 유형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하여 선발유형간 지원범위(규모)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하였다.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탐색 I·II 유형(최대 4년 지원)’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확립 I·II 유형(최대 2년 지원)’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생활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표 VI-2〉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규 장학생	전공탐색	I 유형	예체능계열 학과(부) 1학년 재학생(신입생)
		II 유형	
	전공확립	I 유형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II 유형	

〈표 VI-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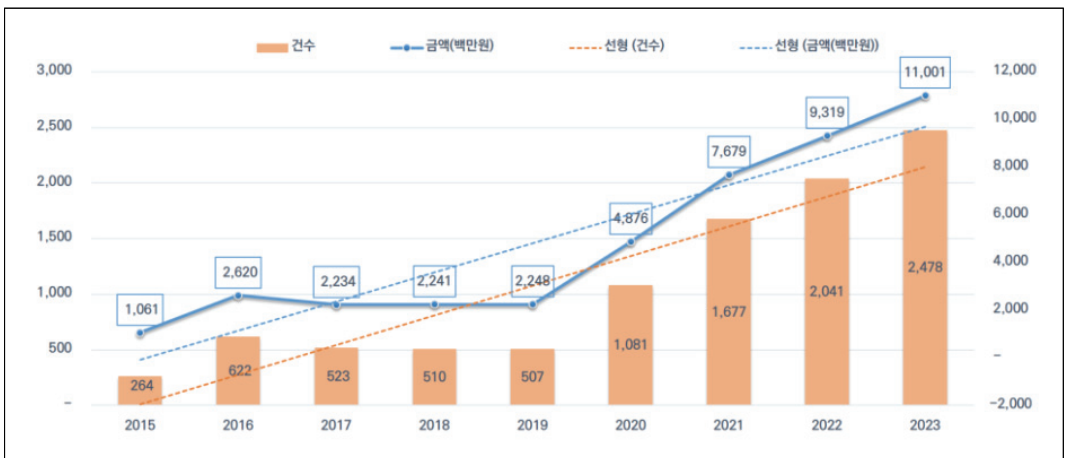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계속 장학생	일반	· 계속지원 기준 충족 학생 대상 당해 학기 장학금 지원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간평가(2+2)	· 신규선발 시 1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2년간(3~4학년) 계속지원 자격 여부 결정	2020년 이후 선발자 (1학년 선발자 중 3학년 진급자)
	진도보고	· 신규선발 시 3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1년간(4학년) 계속지원 자격 여부 결정	3학년 선발자 중 4학년 진급자
	생활비	·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등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2020년 이후 선발자 (I유형)
일시지원		· 국내 대학 3~4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 선발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지원	예체능계열 학과(부) 3~4학년 재학생

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4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업무처리기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5_01&hmNavi=JH,05,05,00, 검색일자: 2025. 1. 15.

2015년 도입하여 201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²¹⁾ 예산이 증액되면서 장학생 선발규모가 140명에서 44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VI-13]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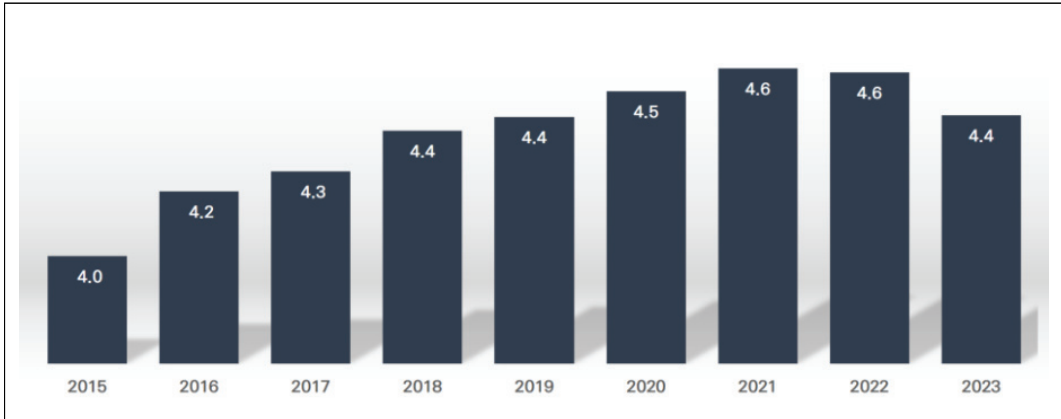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건수)



21) (국감 지적사항) 예체능 학생들이 타 계열에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우수장학금의 지원기간과 인원, 금액의 조정이 필요(손혜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그림 VI-14]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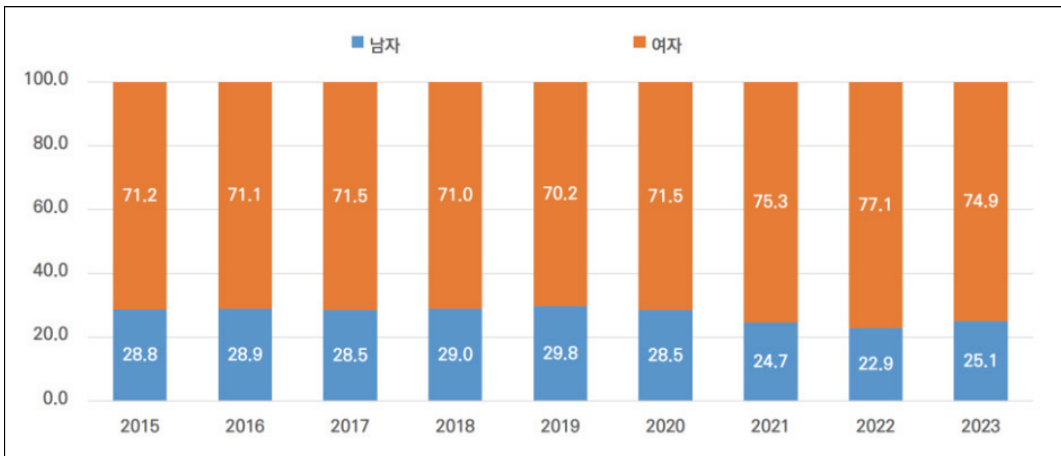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이 많고 연도별로 그 격차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여학생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5]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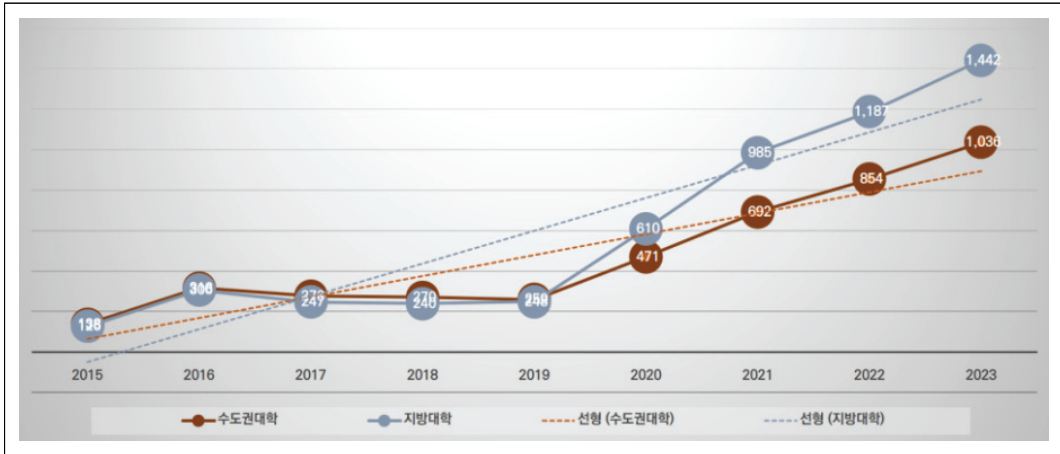
(단위: %)



지역별 배정비율을 수도권 대학 40%, 비수도권 대학 60%로 하고 있으며,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선발유형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총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별 배정인원은 대학정보공시상 전년도 예체능계열 재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VI-16]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예술체육비전장학생(조사대상자 565명, 응답자 155명) 진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취·창업(54.9%) > 진학(23.8%) 순으로 많았다. 국가우수장학생 취업률(예체능 42.6%)은 졸업자 취업률(예체능 52.6%)보다 낮은 수준이나, 진학률(예체능 23.8%)은 졸업자 평균(예체능 5.8%)보다 약 18%p를 상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우수장학금 특성상 장학생의 학업 지속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진학률이 전체 졸업자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장학금 수혜가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생활에서 장학금이 기여한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안정(45.2%) > 학업 성취도 및 집중도 강화(34.2%) > 정서적 안정(18.7%)'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은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기술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유사한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우수장학금(전문대학생)이 2011년 도입되었다가 2012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시행되면서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우수장학금이 일반대학 위주로 운영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대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전문대생 대상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

었다. 이후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라는 이유로 전문대생 국가우수장학금이 다시 도입되었다. 2024년 기준 총 지원예산은 88.5억원이며, 연간 1,200명 내외(I 유형 400명 내외, II유형 800명 내외)를 선발한다. 연단위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 VI-3〉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지원 유형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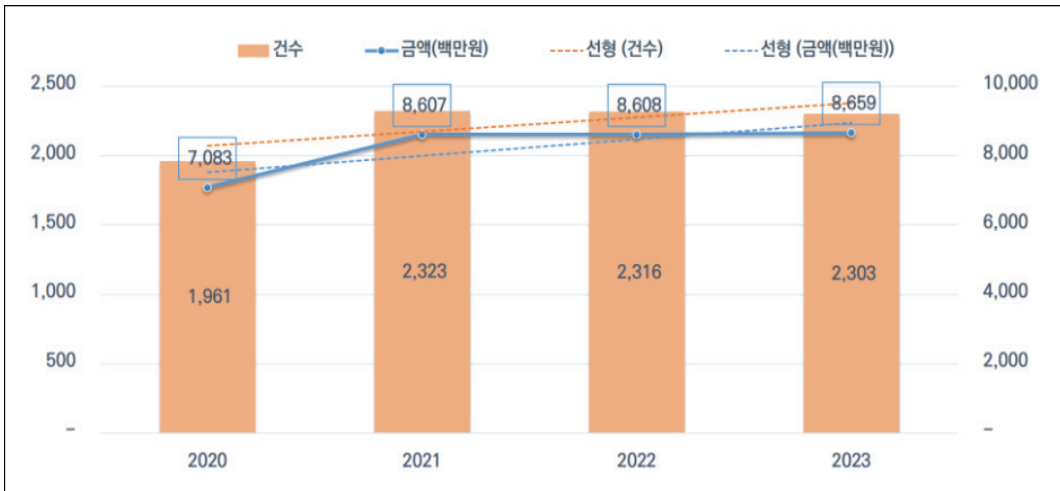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I 유형	·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당해 연도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원/학기
II유형	·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당해 연도 등록금 지원	등록금 전액
일시지원 ¹⁾	·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학기(1개 학기) 등록금 지원	등록금 전액

주: 1) 일시지원의 경우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4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처리기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hmNavi=JH,05,07,00, 검색일자: 2025. 1. 15.

2020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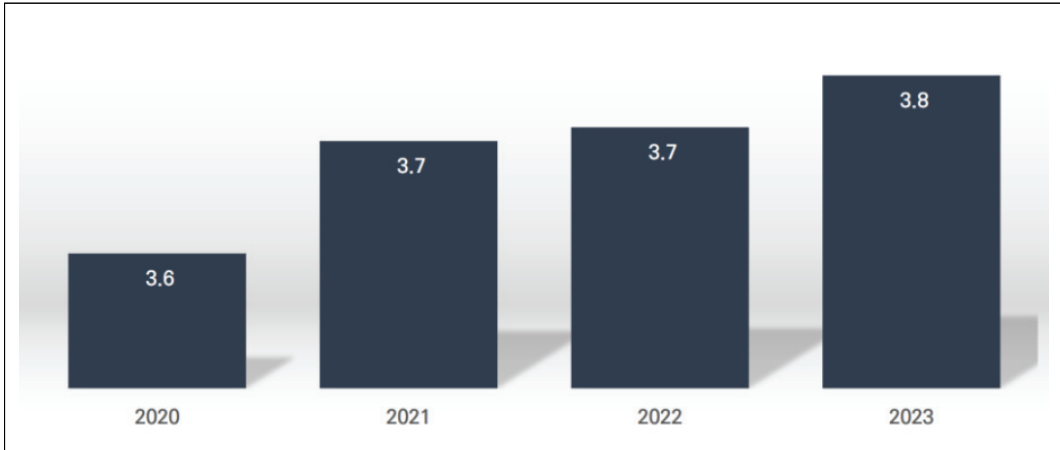
[그림 VI-17]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지원 총액과 건수

(단위: 백만원, 건수)



[그림 VI-18]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연도별 건당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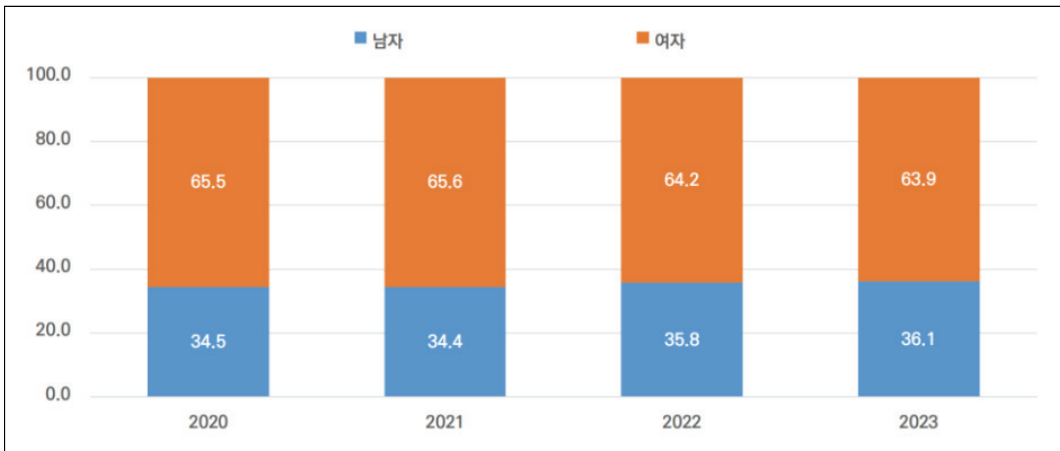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이 많지만, 연도별로 그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6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9]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수혜자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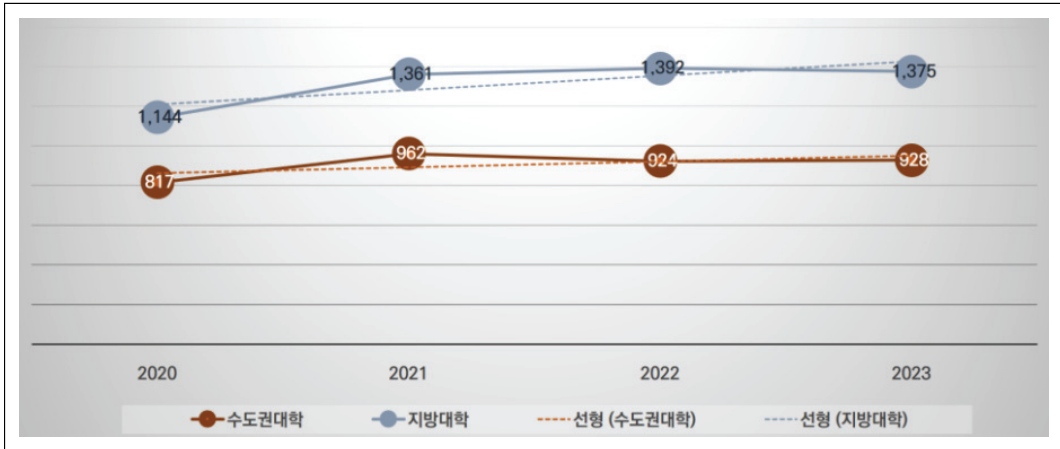


장학생의 배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1:2로 배정한 후 지역별 선발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4:6으로 적용하여 최종 인원을 대학별로 배정한다. 참여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I유형 1명, II유형 2명씩을 기본 배정한 이후(2024년 기준 I유

형 127명, II유형 254명), 나머지 인원은 정원 내 재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배정한다. 대학 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선발유형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총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학소재지별 분포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VI-20]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수혜자의 대학소재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전문기술인재장학생(조사대상자 1,052명, 응답자 236명) 진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취·창업(62.7%) > 미결정(19.1%) > 진학(10.2%) 순으로 많았다. 일반 대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업 응답률(61.9%)도 높지만, 석·박사 준비(8.5%), 석·박사 진학(1.7%), 학사편입 준비(8.9%)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또는 계획) 과 전공의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8.2%가 관련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전문대 생과 비교할 때 국가우수장학생 취업률(61.9%)은 졸업자 전체 취업률(59.8%)과 유사한 수 준이나, 진학률(18.6%)은 졸업자 전체 평균(6.8%) 대비 10%p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적우수장학금 특성상 장학생의 학업 지속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진학률이 전체 졸업자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장학금 수혜가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생활에서 장학금이 기여한 항 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안정(55.5%) > 학업 성취도 및 집중도 강화(30.1%) > 정서적 안정 (14.0%)'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드림장학금은 유학준비생(고등학생, 국내장학생)과 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을 선발, 지원한다. 먼저 유학준비생은 신규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지원내역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 매월 지원)이다. 2학년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 해 3월부터 3학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업장려비가 지원된다.

다음으로 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지원대상은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로서,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50위) 이내 대학에 대해서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차차년도 2월 말일까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기간 내 신규 입학 미확정 시장학생 자격이 소멸되며, 유예기간 중 별도 지원은 없다(예시: 2024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026년 2월 말일까지 입학 확정 시 유학생 전환 가능).

선발방법은 학생의 직접 신청을 토대로 재단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먼저 성적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교과성적 40% + 자기소개서 40% + 교사의견서 20%,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중 외국어 능력(10%))의 경우 영어교과 성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인·적성 검사 → (2차) 심층면접(면접심사 시 학생의 학문적 열의, 유학의지, 사회공헌의식, 인성 등을 평가)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6만달러(‘학비+체재비’ 범위 내) 지원, 항공료는 별도(지원기간 내, 1만달러 한도)이다. 체재비는 연간 최대 2만달러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된다. 학업장려비의 경우(원서지원비 등 고려 학년별 차등) 고교 2학년은 선발 후 익월월부터 그 차년도 2월 말까지 월 50만원, 고교 3학년은 선발 후 익월월부터 그 차년도 2월 말까지 월 70만원 지원된다.²²⁾ 이 금액은 대통령과학장학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가우수장학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22) 다만 학업보고서 내용이 누적 3회 이상 미비·미제출한 경우 학업장려비 지원 중단과 자격이 박탈된다.

〈표 VI-4〉 드림장학금 학업장려 인센티브 지급 예시

구분	내역	장학금 총지급액(연간 기준)
1	- 학비 25,000USD 중 교내장학금 10,000USD 수령 - 직전 학기 성적 우수 - 체재비 20,000 USD 지역	장학금 45,000USD 지원 (학비 15,000USD + 인센티브 5,000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USD + 체제비 20,000USD)
2	- 학비 30,000USD 중 교내 장학금 5,000USD 수령 - 직전 학기 성적 우수 - 체재비 15,000USD 지역	장학금 47,500USD 지원 (학비 25,000USD + 인센티브 2,500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USD + 체제비 15,000USD)
3	- 학비 45,000USD 중 교내 장학금 15,000USD 수령 - 직전 학기 성적 우수 - 체재비 15,000USD 지역	장학금 57,500USD 지원 (학비 30,000USD + 인센티브 7,500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USD + 체제비 15,000USD)
4	- 학비 50,000USD 중 교내 장학금 10,000USD 수령 - 직전 학기 성적 우수 - 체재비 20,000USD 지역	장학금 60,000USD 한도로 지원 제한 (학비 40,000USD + 인센티브 0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0USD + 체제비 20,000USD) * 최대 한도 60,000USD 적용되어 10,000USD 인센티브 지급 불가
5	- 학비 40,000USD 중 교내 장학금 40,000USD 수령 - 직전 학기 성적 우수 - 체재비 20,000USD 지역	장학금 45,000USD 지원 (학비 0USD + 인센티브 20,000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USD + 체제비 20,000USD)

자료: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2024, p. 13.

2012년부터 시행된 드림장학금은 첫 시행 단계인 2012년에는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기준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해외 유학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외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5년부터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선발인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고, 장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들을 개선하여 장학금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한유경·박상완, 2015: 9~10). 이후에는 우수 장학금이라는 성격에 맞게 동일한 기준을 모든 장학생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성적 우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형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왔다.

드림장학생 성공사례가 누적됨으로써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정신을 부여해 주고 있다. 장학생으로 유학비용을 지원받지만 낮은 유학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성장을 이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의지와 최선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낸 장학생들은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재단운영 사업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국가에 대한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지는 장학생들을 통해 장학사업의 선순환 구조, 즉 선후배 장학생들 간 멘

토링을 통한 유학 경험 전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성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성공사례

① 2기 000 - 해외 취·창업 성공

- (선발) 2013년, 부산관광고등학교 3학년
- (환경)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 (진학) 미국,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 전공: Baking and Pastry Management
- (졸업) 2019년 졸업
- (진로) 미국 호텔 취업 및 창업
 - (재직) 미국 볼티모어 포시즌스 호텔, 파티시에로 재직
 - (창업) 미국 볼티모어 Cafe de Leon(베이커리) 및 Love, Pomelo(레스토랑) 창업

② 8기 000 - 해외 취업 성공

- (선발) 2019년 남산고등학교 고3
- (환경)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진학)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SW), 2020년 입학
 - 전공: Media in Public Relations&Advertising
- (졸업) 2024년 졸업
- (진로) 現 호주 취업
 - 주시드니한국문화원, 공연 및 한국 관련 행사 담당 실무관

③ 1기 000 - 해외 취업

- (선발) 2012년, 장안제일고등학교 고3
- (환경) 차상위 계층
- (진학) 일본, 규슈대학교
 - 전공: Physics
- (졸업) 2020년 졸업
- (진로) 現 일본 취업
 - 일본 도쿄 라쿠텐 증권, System Engineering 담당

사.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1) 개요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중·고등단계와 대학단계를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장학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 중 잠재력과 역량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단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장학제도이다. 즉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서류 증빙))에 대한 교육단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7년 100대 국정과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의 세부과제인 국정과제(51-2) 중학 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학업 의지가 높고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체계적 장학제도 마련을 계기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운영되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시범사업에서는 중고생 1,500명을 선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인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968.44억원, 2021년 995.23억원, 2022년 1,060.79억원, 2023년 1,153.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부터 ‘원금보전성 기금’ 출연 예산분(2023년 기준 875억원)이 빠지면서 324.13억원(장학금 + 멘토링활동비 + 교육프로그램 - 운용수익)으로 편성되었다.²³⁾

〈표 VI-5〉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체계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업 장려비	장학금 월 15만원	장학금 월 25만원	장학금 월 35만원	장학금 월 45만원
교육 프로그램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 교육현장의 전문가와 1:1 멘토링)			사회 환원 활동 참여 - 후배 장학생의 멘토 역할 수행 - 사회봉사활동(30시간 이상)
	대학 캠퍼스 탐방 지원(대학생 선배 장학생과의 대학탐방 및 멘토링)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문화체험·대학탐방 등 활동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장학증서 수여식 + 캠프 프로그램 + 기본교육)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진로·진학·취업·창업 등 장학생의 성장상황에 맞추어 세분화 지원)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장학생의 고민,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자료: 교육부·기획재정부·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 2020. 1. 22를 2025년 초등학생 신규 내용 추가 후 보완 작성

2024년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024. 5. 1.)에서 그간의 장학사업이 통상 대학생의 학비 지원 또는 일회적 지원 위주여서 취약계층교육 결핍을 조기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교육 복지를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조기 개입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부터 꿈사다리장학사업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

23) 교육부·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한국장학재단은 2020년 1월 22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출연 협약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원금 보전성 기금 3,5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20년을 시작으로, 4년간(’20~’23) 875억원씩 출연하여 원금 보전성 기금 3,500억원 출연(1차분은 협약식 당일 출연)하여 원금 보전성 기금 3,500억원 원금의 이자 수익과 추가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교육부·기획재정부·한국장학재단, 2020. 1. 22. 보도자료).

원하게 되었다. 2025년 신규 선발인원은 2천명에서 3천명(초 5~6학년 1천명, 중 1~3학년 1천명, 고 1~3학년 1천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장학금은 초등학생은 월 15만원, 중학생은 월 25만원, 고등학생은 월 35만원, 대학생은 월 45만원이다. 그 외에 멘토링활동비의 경우 학생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의 성과지표는 장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된 '장학생 종합성장지수'이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표 VI-6>과 같다.

〈표 VI-6〉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성과목표(장학생 종합성장지수)

구분	내용
목표 설정 (베타 평균 방식)	$Y = \frac{Ya + 3Ym + Yb}{5}$ (Ya: 과거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 Ym: 평가 직전연도 실적치, Yb: 과거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
세부 구성	인지적 성장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취목표 지향성, 학업 자기효능감 등의 발달사항 측정
	정의적 성장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존중감, 긍정심리, 학교적응 등 장학생의 태도·심리 측정
	진로 성장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등 장학생 진로활동에 대한 사항 측정
측정 산식	• 장학생 종합성장지수 = (인지적 성장×20%) + (정의적 성장×40%) + (진로 성장×40%)
성과목표 달성 (2023년)	• '23년 장학생 종합성장지수 목표: 3.884점 → (실적) 3.902점(목표 달성률 100.5%)

2) 운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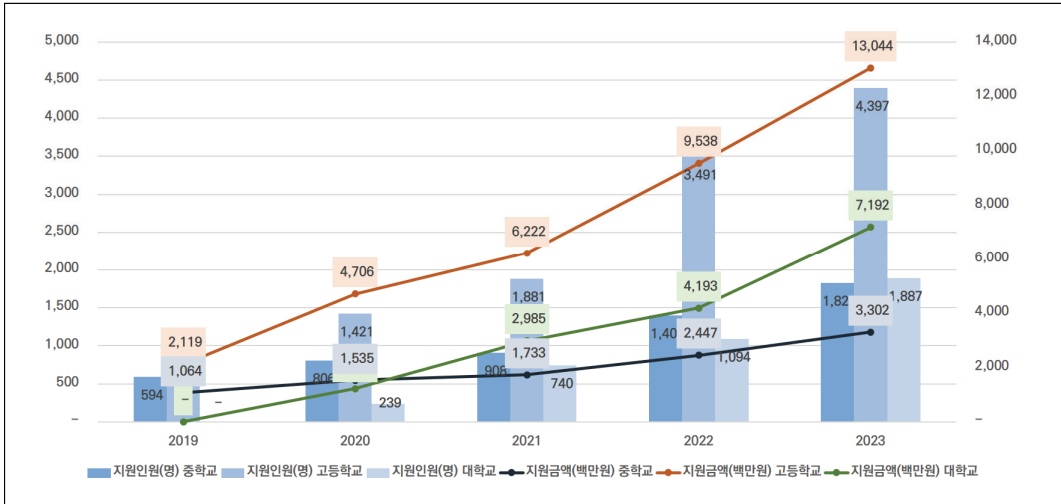
2019년 이후 학교급별 지원 총액과 수혜자 수 추이는 <표 VI-7>, [그림 VI-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신규+계속 장학생에 의해서 매년 장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급별 장학생 지원구조를 보면 고등학생을 두텁게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복권기금품사다리장학사업 학교급별 수혜 현황

구분		누적(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중 학 교	소계	백만원	10,081	1,064	1,535	1,733	2,447	3,302	
		명	5,534	594	806	908	1,400	1,826	
	1학년	백만원	553	-	-	-	-	553	
		명	371	-	-	-	-	371	
	2학년	백만원	2,845	433	408	459	822	723	
		명	1,839	243	279	309	528	480	
	3학년	백만원	6,683	631	1,127	1,274	1,625	2,026	
		명	3,324	351	527	599	872	975	
	고 등 학 교	소계	백만원	35,629	2,119	4,706	6,222	9,538	13,044
			명	12,079	889	1,421	1,881	3,491	4,397
1학년		백만원	10,662	537	1,586	2,155	2,755	3,629	
		명	3,678	225	453	646	1,031	1,323	
2학년		백만원	12,009	868	1,251	2,151	3,288	4,451	
		명	4,096	363	394	654	1,202	1,483	
3학년		백만원	12,958	714	1,869	1,916	3,495	4,964	
		명	4,305	301	574	581	1,258	1,591	
대 학 교		소계	백만원	15,587	-	1,217	2,985	4,193	7,192
			명	3,960	-	239	740	1,094	1,887
	1학년	백만원	9,697	-	1,217	2,147	2,054	4,279	
		명	2,523	-	239	539	558	1,187	
	2학년	백만원	3,888	-	-	838	1,474	1,576	
		명	959	-	-	201	371	387	
	3학년	백만원	1,622	-	-	-	665	957	
		명	394	-	-	-	165	229	
	4학년	백만원	380	-	-	-	-	380	
		명	84	-	-	-	-	84	

자료: 한국장학재단 장학통계자료

[그림 VI-21]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학교급별 지원총액과 수혜자 수 추이



자료: 한국장학재단 장학통계자료

<표 VI-8>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수혜 기간별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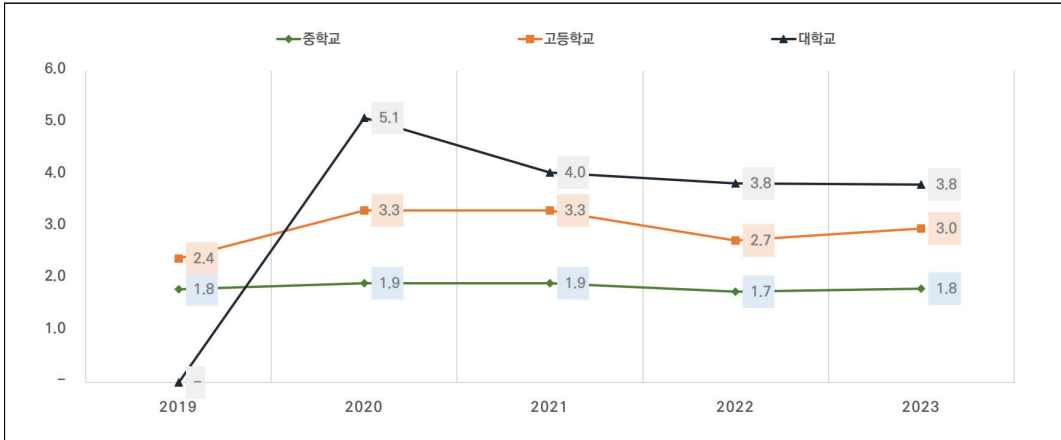
수혜기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2019~2023년)
2년 미만	백만원	3,183	7,458	5,666	8,756	14,223	39,286
	명	1,483	2,466	2,199	3,991	5,781	15,920
2년 이상 5년미만	백만원	-	-	5,274	7,422	9,315	22,011
	명	-	-	1,330	1,994	2,329	5,653

자료: 한국장학재단 장학통계자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지원액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3년 기준 중학생 18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3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2]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학교급별 수혜자 1인당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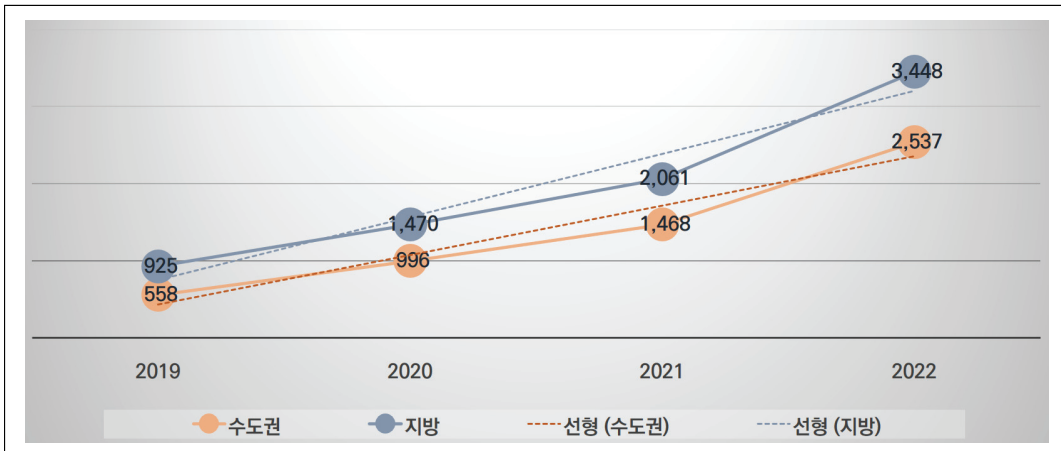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장학통계자료

장학금 수혜학생의 학교소재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수도권의 비중은 2019년 62:38, 2020년 60:40, 2021년 이후 58:42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진학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도권 소재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학금 배정 자체가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학생 분포는 적정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I-23]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수혜자의 학교소재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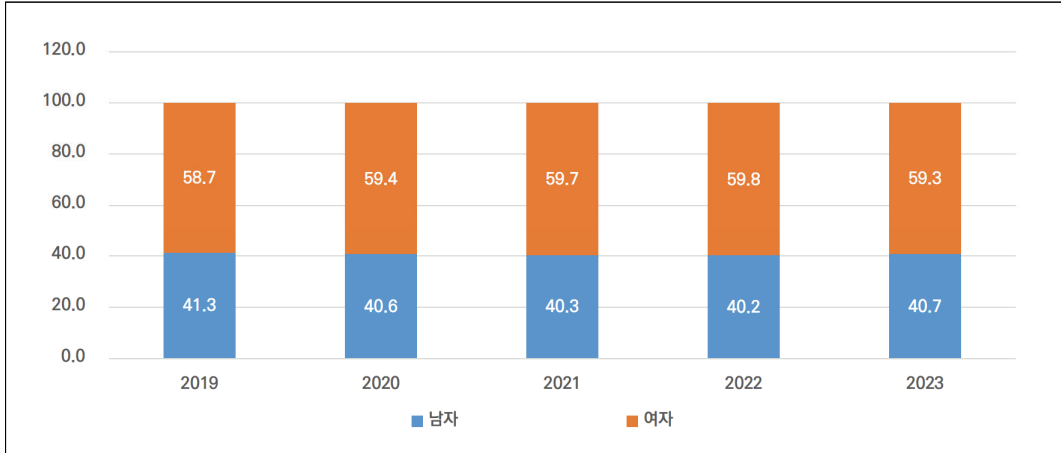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학재단 장학통계자료

장학금 수혜학생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60:4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VI-24]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수혜자의 성별 추이

(단위: %)



2023년 기준 사업은 ‘기본유형’과 ‘특별유형’ 두 가지로 선발 운영되었다. 기본유형은 장기 지원 유형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을 발굴, 대학 졸업 시까지 장기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지역별 선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경쟁률 1:2.4를 넘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I-9〉 2023년 꿈 유형 장학생 지역별 선발 결과(중·고등학생)

(단위: 명, %)

지역	배정	신청	경쟁률	지역	배정	신청	경쟁률	지역	배정	신청	경쟁률
서울	258	759	1:2.9	울산	45	102	1:2.3	전북	119	285	1:2.4
부산	114	332	1:2.9	세종	18	39	1:2.2	전남	134	251	1:1.9
대구	79	190	1:2.4	경기	406	1,058	1:2.6	경북	158	293	1:1.9
인천	99	265	1:2.7	강원	97	188	1:1.9	경남	161	394	1:2.4
광주	57	127	1:2.2	충북	72	157	1:2.2	제주	26	58	1:2.2
대전	53	136	1:2.6	충남	104	215	1:2.1	합계	2,000	4,849	1:2.4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

2023년 기준 '특별유형'으로 학업중단 위기 직면 한시(SOS) 지원 장학생 1,000명을 선발하였다. 재난·재해, 가정폭력·학대 등 긴급구난 위기에 직면한 중·고생을 한시적(10개월)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표 VI-10〉 2023년 꿈사다리장학사업 SOS 유형 장학생 선발 결과

분야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명	%	명	%	명	%
① 주소득자 사망, 구금 등	115	23.0	111	22.2	226	22.6
② 본인·가족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등	193	38.5	187	37.5	380	38.0
③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등	30	6.0	26	5.2	56	5.6
④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가정생활 곤란	25	5.0	22	4.4	47	4.7
⑤ 거주지 화재·재해 등으로 생활 곤란	22	4.4	16	3.2	38	3.8
⑥ 주·부소득자의 휴·폐업·화재로 영업곤란	30	6.0	31	6.2	61	6.1
⑦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86	17.2	106	21.2	192	19.2
합계	501	100.0	499	100.0	1,000	100.0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

장학금 지원 이외에 장학생의 성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학생의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지원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표 VI-11〉 장학생의 성장 동기부여 및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2023년 기준)

복공 성장 멘토링 중·고생 필수	복공 나눔 멘토링 전체 장학생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지지와 밀착 성장 지도를 위해 교사 등과의 1:1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2회 이상 활동 필수 - 1회 10만 원씩 활동비 지원(총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성장 경험 공유와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선·후배간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99명(140개 팀) 참여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 중·고생 대상	장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전체 장학생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정서적 성장 하위자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 대학 탐방 등 특별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36명(166개 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교사 또는 선배 멘토에게 나누기 어려운 고민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상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98회 상담 지원
진로역량 개발 멘토링 컨설팅 전체 장학생 자율	

- ▶ 온라인 교육이수 관리시스템(LMS)을 이용한 참여자 수강현황, 마일리지 관리 등 장학생 개인별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
- ▶ 장학생의 진로 선택권 부여를 통해 맞춤형 지원 강화
 - (운영 시기) '23. 6~11월
 - (참여 인원) 총 5,794명
 - (프로그램 만족도) 4.76점(5점 만점) 달성
 - (세부 프로그램) 학제·학년별 맞춤형 세부 구성

구분	중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및 고3
기본 방향	성공적 중학교 진로 설계	고교 입학 준비 진학 특강	대학 입시 준비 입시전형 대비	대학 입시 실전 면접·정시 전략	취·창업 대비 직무설정 등
공통 과정	신설 복공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장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교육 이수율 96.5%(전년비 1.3%p↑)				
선택 과정	확대 개념특강(진로역량 기본지식) + 실전특강(진로·진학 세분화·진로역량 기반강화) 총 70개의 학년별 세분화된 특강 프로그램 제공				
심화 과정	확대 1:1 전문가 컨설팅 및 심리상담 지원 ○ 컨설팅 개별 진단검사 자료를 이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총 2,023회) ○ ○ 심리상담 다양한 상담 채널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총 227회) ○				

자료: 기재부, 내부자료.

3) 종합정리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의 성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잠재력과 역량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단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종합적 국가장학제도로써,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구분되며 그 성과가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2025년부터 꿈사다리장학사업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학생의 종합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멘토링 지원활동을 지속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장학생 가운데 대학생이 된 이후 멘토가 되어 중·고등학교 장학생 멘티를 지원하는 부분은 순환적 인재양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결과나 영향 지향형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성과관리체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장학생 종합성장지수’를 성과지표로 하여 장학생의 인지적 성장(성취목표 지향성, 학업 자기효능감 등의 발달사항 측정), 정의적 성장(자아존중감, 긍정심리, 학교적응 등 장학생의 태도·심리 측정), 진로 성장(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등 장학생 진로활동에 대한 사항 측정) 등을 지원활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초·중등단계 조기 개입에 의한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비수혜학생과의 학업성적 차이 분석, 상급학교 진학 현황 차이 분석 등의 정량적 분석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취업연계장학금

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1) 개요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완화를 위해 2013년 시행된 장학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사다리 I 유형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지

원하는 유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자나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형과 창업희망자 혹은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희망사다리Ⅱ유형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유형으로, 최종학력이 고졸 혹은 전문학사 취득자인 지원자에게 성적 및 재직요건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3년 I 유형 장학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8년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Ⅱ유형이 신설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희망사다리 사업 확대 방안을 포함하였다. 2013년부터 꾸준히 예산이 증액되어 온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은 2022년 기준 연간 459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009억의 예산 가운데 2,902억원을 총 4만 538명에게 지원하며 97.1%의 집행률을 보였다.

〈표 VI-12〉 희망사다리 I 유형 예산 및 지원 실적

(단위: 억원)

	예산	지원금액
2013	95	93
2014	97	95
2015	195	190
2016	208	204
2017	282	280
2018	351	345
2019	353	344
2020	509	446
2021	462	460
2022	459	445

자료: 한국장학재단

2018년 신설된 희망사다리Ⅱ유형(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153억의 예산 가운데 1,677억을 총 4만 5,601명에게 지원하며 지원률 77.9%를 나타냈다.

〈표 VI-13〉 희망사다리Ⅱ유형 예산 및 지원 실적

(단위: 억원)

	예산	지원금액
2018	288	66
2019	502	317
2020	391	390
2021	456	424
2022	516	480

자료: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I 유형의 장학생 선발은 계속장학생 선발과 신규장학생 선발로 구분된다. 계속장학생은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C0)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신규장학생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선발하는데, 각 대학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표 VI-14〉의 공통기준에 근거하여 대학 별도 기준(배점 등)을 수립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표 VI-14〉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생 추천 기준(예시)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창업 준비계획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	20
	96점~93점	48				
	92점~90점	46				
	89점~87점	44	대학자체기준	30	대학자체기준	30
	86점~83점	42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희망사다리Ⅱ유형의 장학생 선발은 계속장학생 선발과 신규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I 유형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계속장학생은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C0) 이상인 자를 선발하는 것은

I 유형과 동일하다. 신규장학생은 연령과 재직기관, 출신 고교, 기업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제출된 증명서 및 고용보험 DB, 병역정보 DB,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학력, 재직기관 및 재직기간 등을 확인한다.

〈표 VI-1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 청년: 30점(34세 이하) ▲ 비청년: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40점)	▲ 중소·중견기업: 40점 ▲ 비영리기관: 20점 ▲ 대기업: 10점
③ 출신 고교(25점)	▲ 직업계고: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20점 ▲ 일반고 등: 15점 ▲ 기 학사(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재직기간(5점)	▲ 6년 이상: 5점 ▲ 3년 이상: 2점 ▲ 5년 이상: 4점 ▲ 2년 이상: 1점 ▲ 4년 이상: 3점 ▲ 2년 미만: 해당 사항 없음(요건 미충족)

2) 종합정리 및 향후 개선방안

현행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I 유형과 고등학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는 II 유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장학금의 본질적 목적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있으나,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동 제도는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지향점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창업 활성화라는 산업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정책 수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장학금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취업·창업 지원은 정책 대상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정책적 일관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교육부는 본연의 교육 지원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효

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소관 부처 이관은 정책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국가근로장학사업

1) 개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수혜학생 수가 2021년 13.1만명에서 2023년 1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근로장학금 사업은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한국장학재단의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관리라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장학생 선발 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내용은 전공 연계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고려하여 배정되며, 유해·위험환경 노출 업무나 단순 노무 등은 제한된다. 최근의 집행률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92.4%로 상승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업별로 성적기준(C0 이상)을 두고 있으나, 소득기준은 국가근로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표 VI-16〉 근로유형별 근로 내용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 근로	일반 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 장애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 보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 근로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 재단 운영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의 업무 경험 제공

〈표 VI-17〉 근로장학생 배정 업무

권장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 연계하여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한 업무 •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 근로활동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금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물리적 안전 위험, 유해물질 취급·노출 관련 업무 등) •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연속작업 10kg 초과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 등) • 주된 업무가 청소, 빨래 등인 경우(자리 정리정돈,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환경미화 등은 가능) •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정치활동 관련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판매 업무 •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국가근로장학생사업의 운영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7년부터 2023년의 경우 지원인원 작성 시 교내외 유형 중복참여자를 유형별로 각각 작성하였다. 지원금액은 2009년 790억원에서 2023년 3,04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지원 인원은 약 4만명에서 13만명으로 3배 증가하였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의 지원 금액은 유사하지만 지원인원은 절반 수준인데, 이는 교외근로의 시급과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I-18〉 국가근로장학생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 인원

(단위: 백만원, 명)

구분	합계		
	지원 금액	지원 인원	
2009년	78,780	40,693	
2010년	72,302	45,867	
2011년	69,308	38,025	
2012년	69,093	40,233	
2013년	117,287	76,325	
2014년	168,060	86,218	
2015년	180,024	94,797	
2016년	216,566	113,529	
2017년	교내근로	124,139	80,453
	교외근로	113,750	44,787
	합계	237,889	125,240

〈표 VI-18〉의 계속

(단위: 백만원, 명)

구분		합계	
		지원 금액	지원 인원
2018년	교내근로	121,622	80,487
	교외근로	121,406	45,936
	합계	243,028	126,423
2019년	교내근로	121,613	75,660
	교외근로	121,646	44,194
	합계	243,259	119,854
2020년	교내근로	114,747	69,868
	교외근로	129,194	43,497
	합계	243,941	113,365
2021년	교내근로	130,835	74,153
	교외근로	145,311	47,077
	합계	276,146	121,230
2022년	교내근로	136,910	77,780
	교외근로	144,777	48,936
	합계	281,687	126,716
2023년	교내근로	145,886	79,138
	교외근로	158,816	52,979
	합계	304,703	132,117

2) 실증분석 결과

〈표 VI-19〉~〈표 VI-20〉은 제V장에서 수행한 노동시장 성과, 사회이동성, 대출과 관련한 분석에 국가근로장학금과 관련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9〉 국가근로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첫 직장 분석)

	첫 직장 월급	첫 직장 정규직 여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0.522*** (0.126)	0.317** (0.140)
교차항1	-0.0827*** (0.0213)	-0.0520** (0.0238)
근로장학금 수혜 여부	-0.0322 (0.103)	-0.0583 (0.119)
교차항2	0.00314 (0.0183)	0.00835 (0.0210)
log(가구소득)	0.0941*** (0.0197)	0.0505** (0.0215)
만 나이	-0.000845 (0.00240)	0.0315*** (0.00259)
여성	-0.168*** (0.00983)	0.0721*** (0.0114)
기혼	0.0587*** (0.0180)	0.00223 (0.0196)
정규직 여부	0.0330*** (0.0103)	
상수항	4.725*** (0.139)	-0.904*** (0.147)
관측치 수	8,243	8,243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

3. 교차항1은 (국가장학금 수혜여부)×log(가구소득) 변수를 의미하며, 교차항 2는 (근로장학금 수혜여부)×log(가구소득) 변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표 VI-20〉 국가근로장학금이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에 미친 영향(현재 직장 분석)

	현재 직장 월급	현재 직장 정규직 여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0.0102 (0.124)	0.112 (0.0745)
교차항1	0.00127 (0.0207)	-0.0183 (0.0123)
근로장학금 수혜 여부	0.104 (0.0955)	0.00805 (0.0592)
교차항2	-0.0214 (0.0168)	-0.00208 (0.0104)
log(가구소득)	0.0407** (0.0192)	0.0180 (0.0115)
만 나이	0.0123*** (0.00206)	-0.00896*** (0.00125)
여성	-0.113*** (0.00860)	-0.0399*** (0.00544)
기혼	0.0378*** (0.00936)	-0.0201*** (0.00526)
정규직 여부	0.0595*** (0.0104)	
취업기간	0.0516*** (0.00307)	0.123*** (0.00230)
상수항	4.773*** (0.128)	0.906*** (0.0801)
관측치 수	29,443	29,443

주: 1. *** p<0.01, ** p<0.05, * p<0.1

2. 졸업학교 소재지, 졸업학교 유형, 졸업학교 전공계열, 현재 직장 근무지, 현재 직장 업종, 현재 직장 근무형태,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3. 교차항1은 (국가장학금 수혜여부)×log(가구소득) 변수를 의미하며, 교차항 2는 (근로장학금 수혜여부)×log(가구소득) 변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학패널 3~8차

3) 종합정리 및 향후 개선방안

국가근로장학금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이 수혜자의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이중적 정책목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근로조건부 장학금 지급은 학업시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조건 없는 직접지원 방식인 I 유형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성과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제V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장학금 지원은 사회이동성 제고와 노동시장 성과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정책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그 대안으로 I 유형으로의 통합 또는 II 유형과의 통합을 통한 대학 자율성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각 대학의 특성과 학생들의 니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행정비용 절감과 정책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그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요구된다.

VII. 국가장학금 사업군 지속가능성 검토

이번 장에서는 국가장학금 사업군의 재정을 추계한다. 먼저 대학 입학자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의 재정을 계산한다. 이어서 현행 제도상에서 운영 중인 소득인정액 대신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의 재정을 추정한다.

1. 국가장학금 I 유형 재정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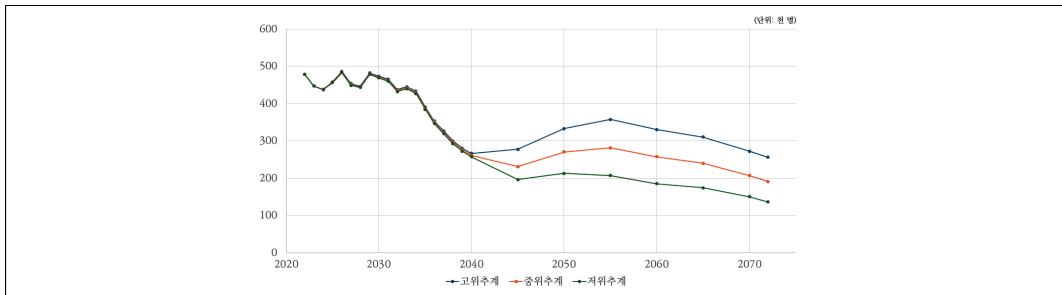
국가장학금 재정 추계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입학자 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가. 대학 입학자 수 추계

국가장학금의 지출 규모는 학령인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학령인구의 변화는 국가장학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림 VII-1]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만 18세 인구의 고위, 중위, 저위 인구변동 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장래 수준을 고위, 중위, 저위²⁴⁾로 설정하여 추계한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해당 값은 <표 VII-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VII-1] 만 18세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4)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장래수준을 고위, 중위, 저위로 설정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2022년 47.8만명이었던 18세 인구는 2072년에는 19.1만명으로, 50년간 약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5년부터 2040년까지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2040년 이후부터는 고위·중위·저위 시나리오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35년을 기점으로 18세 인구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지며, 이는 현재 대학 모집 정원(약 35만명)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18세 인구의 감소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표 VII-1〉 만 18세 장래인구추계

(단위: 천명)

연도	고위추계	중위추계	저위추계
2022	478	478	478
2023	447	447	447
2024	438	438	437
2025	458	457	456
2026	486	485	483
2027	453	451	449
2028	446	444	443
2029	482	480	478
2030	473	471	469
2031	465	462	460
2032	437	435	432
2033	445	442	440
2034	433	430	427
2035	390	387	384
2036	353	350	346
2037	326	322	319
2038	299	296	292
2039	280	276	272
2040	266	261	257
2045	277	231	196
2050	333	270	213
2055	357	281	207
2060	330	257	185
2065	310	240	174
2070	272	207	150
2072	256	191	13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만 18세 인구추계를 토대로 하여 대학 진학 인구를 추계하고자 하였다. [그림 VII-2]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학 입학인구 추이와 2024년 이후의 전망을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로 표시된 대학 입학인구는 두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제 대학 입학인구 정보가 존재하므로,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정원 내 대학입학자 수를 기록하였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의 2024년 이후의 값은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추계한 대학 입학자 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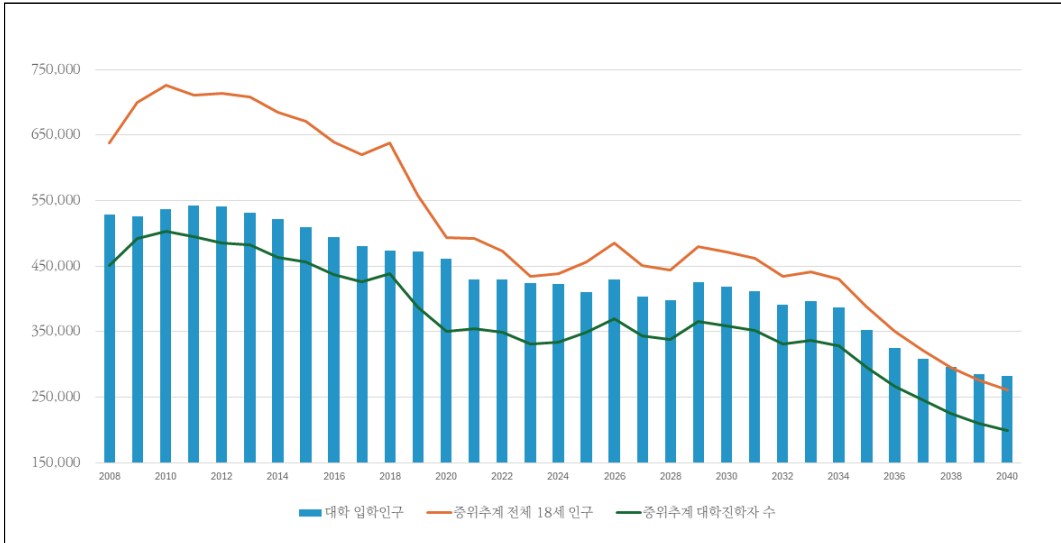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였다. 전체 만 18세 인구는 2023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했으며, 2024년 이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 값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만 18세 인구가 모두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 진학자 수를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여 추계하고자 하였다. 2023년에 76.2%의 취학률을 보였고,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평균적으로 매년 0.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2023년에 76.2%를 기준으로 매년 평균 0.05%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를 가정했다. 따라서 초록색 선으로 표시한 대학입학자 수의 추계는 중위추계의 만 18세 인구에 예상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곱해 계산하였다.

$$\text{만 18세 인구} \times \text{고등교육기관 취학률(가정값)} = \text{만 18세 대학 입학자 수}$$

그래프를 보면 2008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30년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계 수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40년경에는 현재 대비 대학 진학자 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대학 교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II-3] 대학 입학인구 변화 및 전망

(단위: 명)



자료: 1. 대학입학인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정원 내 입학자 수); 대학교육연구소, 「한국 대학교육의 현안과 정상화 종합 방안」
 2. 전체 18세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대학 진학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대학입학인구와 전체 18세 인구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VII-2]에 해당하는 값은 <표 VII-2>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도 대학 입학자 수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9년에 일시적으로 약한 반등을 보인 후, 2030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I-2〉 대학 입학인구 변화 및 추계

(단위: 명)

연도	교육 통계 서비스 및 대학교육연구소 기준	장래인구 중위추계 기준
2008	528,195	450,417
2009	526,387	491,766
2010	537,102	502,839
2011	542,104	495,437
2012	541,354	484,791
2013	531,112	482,316
2014	521,794	463,399
2015	508,897	455,951
2016	493,856	437,648
2017	480,186	426,384
2018	473,953	438,705
2019	471,916	387,741
2020	461,132	350,771
2021	429,151	354,432
2022	429,091	348,795
2023	423,841	331,489
2024	423,427	333,756
2025	423,427	333,923
2026	429,752	369,940
2027	403,447	344,006
2028	398,616	338,666
2029	425,073	366,126
2030	418,690	359,261
2031	411,576	352,396
2032	390,493	331,802
2033	397,157	337,141
2034	387,110	327,988
2035	353,115	295,189
2036	324,829	266,967
2037	308,475	245,609
2038	296,545	225,778
2039	284,913	210,522
2040	283,017	199,081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정원 내 입학자 수)
 2. 대학교육연구소,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 정책을 중심으로」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국가장학금 추계를 위한 가정과 기초자료 계산

먼저 2024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급액수를 다음 <표 VII-3>에 정리하였다. 2023년 자료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혜인원이 일반적인 연도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추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4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추계를 진행하였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표에는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장학금,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역인재의 지원인원 및 지원 총액이 제공되어 있으나, 본 절에서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장학금에 집중하여 추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가장학금 I 유형에 대한 추계를 진행하고, 이후 다자녀 장학금에 대한 추계를 진행한다. 이후 현재의 장학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의 재정추계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하후상박형인 새로운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 재정 추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본 절을 마무리한다.

〈표 Ⅷ-3〉 2024년 장학금 유형별 지원 인원 및 지원 총액

(단위: 명, 원)

구분	I 유형(소득연계형)		다자녀		II 유형(대학 자체노력, 재난)		지역인재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기초	38,375	180,139,531,816	9,869	47,893,682,944	98	147,094,200	803	4,601,287,130
차상위	47,971	232,974,231,384	14,731	74,629,246,249	128	181,546,250	1,010	5,709,309,390
1구간	88,394	347,888,998,904	28,990	135,427,855,848	29,126	21,152,972,286	1,875	10,387,489,080
2구간	72,101	285,933,126,930	21,172	97,388,077,801	25,981	18,844,134,446	1,563	8,614,897,660
3구간	79,084	313,052,136,293	21,968	100,284,504,450	28,643	19,769,023,035	1,575	8,617,788,080
4구간	76,632	230,552,856,606	21,365	87,824,780,320	39,361	30,520,032,889	1,564	8,463,137,831
5구간	39,082	115,680,029,533	10,757	43,216,333,323	20,451	14,209,508,557	689	3,612,973,614
6구간	112,667	345,505,616,249	31,073	128,301,499,744	60,182	39,290,059,006	1,291	6,627,572,040
7구간	69,610	179,004,704,964	19,279	76,334,047,202	38,458	22,056,708,459	625	3,117,663,540
8구간	144,562	381,296,117,473	39,888	160,930,164,751	78,822	41,209,955,447	1,000	4,975,736,174
9구간	-	-	-	-	61,199	49,425,506,036	1,130	5,426,337,181
10구간	-	-	-	-	608	424,786,177	-	-
구간미상정	-	-	-	-	1	1,739,000	-	-
합계	768,478	2,612,027,350,152	219,092	952,230,192,632	321,250	207,381,034,575	11,995	64,727,854,539

주: 1. 각 장학금 유형별 지원인원의 합계는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인원의 단순합계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복인원이 제거된 순인원 합계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이 73만 4,307명, 다자녀장학금이 21만 197명,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37만 8,444명 지역인재는 1만 2,488명이다(연간 순 인원 기준을 적용하면, 1학기 및 2학기 지원구간이 다른 인원은 지원구간별 연간 인원에서 각각 2건으로 카운팅되지만, 전체 합계에는 1건으로 카운팅된다).

2. 단, 신민임생 지원 장학금은 제외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공

본 절에서는 국가장학금 재정 추계를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자 한다.

- ① 대학 재학생 수 대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 ② 대학 재학생 수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와 지난 3년간의 대학 신입생 수를 재학생 수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래인구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대학 입학인구 추계를 활용하여 해당 연도의 대학 재학생 수를 추산하였다. 해당 연도의 대학 입학인구를 1학년으로 간주하고, 직전 연도의 대학 입학인구를 2학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연도와 그 이전의 3개 연도의 대학 입학인구를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대학 재학생 수를 추계하였다. 즉 편제인원을 토대로 추계를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이 방식을 토대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의 수치를 이용해 2024년의 전체 대학 재학생 수를 구한 결과 136만 8,472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서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교육 규모에 관한 지표를 확인하면 대학의 학생 수를 조사할 때에는 재적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조사된 재적학생 수는 재학생과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을 합산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재학생 수와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의 합)는 266만 4,917명이고, 이 중 휴학생 63만 1,886명,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만 7,937명을 제외한 201만 5,094명이 재학생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재학생 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가정을 이용하여 구한 재학생 수는 휴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예상 입학인원의 합산 값을 주의해야 한다.

〈표 VII-4〉 대학 입학인구 추계를 활용한 대학 재학생 수 합산(2024년)

(단위: 명)

연도	장래인구 중위추계 기준 재학생 수
2021	354,432
2022	348,795
2023	331,489
2024	333,756
합계	1,368,47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다음으로, 대학 재학생 수 대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비율은 [수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수식 1]의 분자에 위치하는 2024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수는 〈표 VII-3〉의 첫 열인 지원인원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⁵⁾ 분모에 들어가는 2024년 대학 재학생 수는 장래인구 중위추계 기준으로 합산한 대학 재학생 수를 이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 재학생 수 대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①의 적용에 필요한 2024년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수식 1]과 같이 계산하였다.

[수식 1] 2024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비율

$$\begin{aligned}
 \text{2024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비율} &= \frac{\text{2024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수}}{\text{2024년 재학생 수}} \times 100 \\
 &= \frac{768,478}{1,368,472} \times 100 = 56.15\%
 \end{aligned}$$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해당 연도 대학 재학생 중 56.15%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급 받았음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는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추계를 위해서 다음의 가정을 추가한다.

- ③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대학 재학생 대비 인구분포는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혜택을 받은 연간 인원은 약 77만명이다. 〈표 VII-5〉에서 2024년 기준 전체 수혜자 대비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비율을 살펴본 결과, 기초

25) 지원 인원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인원으로 수혜인원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된다.

생활수급자가 각 약 4.99%로 가장 적었으며 8구간에 속한 인원이 약 18.8%로 가장 많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으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구간과 8구간의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43%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 국가장학금 I 유형 구간별 인원 및 1인당 평균 지원금액

(단위: 명, %, 원)

	인원	전체 수혜자 대비 비율	전체 재학생 대비 비율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기초	38,375	4.99	2.80	4,694,190
차상위	47,971	6.24	3.51	4,856,564
1구간	88,394	11.50	6.46	3,935,663
2구간	72,101	9.38	5.27	3,965,730
3구간	79,084	10.29	5.78	3,958,476
4구간	76,632	9.97	5.60	3,008,572
5구간	39,082	5.09	2.86	2,959,931
6구간	112,667	14.66	8.23	3,066,609
7구간	69,610	9.06	5.09	2,571,537
8구간	144,562	18.81	10.56	2,637,596
9구간	-	-	-	-
10구간	-	-	-	-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추계를 위한 추가적인 가정으로 9구간 신청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가구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I 유형 수급을 신청한 사람 중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추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표 VII-6〉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신청한 사람들 중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에는 실제 9구간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추계를 위해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 1~8구간에서는 신청자의 약 83%

가 수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본 재정추계에서는 소득 9구간 신청자 중 83%가 수급 자격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학점이 너무 낮거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모든 신청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재정추계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2024년의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인원을 이용하기 하기 때문에 <표 VII-6>의 2024년 9구간 기 신청 인원을 사용한다. 해당 표의 9구간 기 신청 인원은 장학재단에서 제공한 4개년 동안의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자료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실제 내년부터 수급하게 될 9구간 예상 인원을 과소추정한 수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료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인 인원을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까지는 8구간까지만 수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인 학생들 중 일부만 2024년에 신청을 시도했을 것이고, 일부는 신청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현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9구간 수혜자 수와 2025년 9구간 신청이 실제 시행되는 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게 될 수혜자 수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표 VII-6>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연도별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의 과거 4개년 동안의 신청인원을 제시한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은 22만 3,265명인데, 이 인원이 2024년의 전체 재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16.3%으로 계산되었다.²⁶⁾ 2024년 전체 재학생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8구간 학생들이 전체 재학생 대비²⁷⁾ 차지하는 비중이 10.57%임을 고려했을 때, 9구간에 속하는 학생에게 추가적 지원은 상당히 큰 폭의 지원 인원 증가를 야기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추계에 반영할 경우 2030년과 2035년을 기준으로 추계한 대학 재학생 수에서 16.3%를 곱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인원을 추정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모든 인원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인원 가운데 83%만이 수령할 것이라 가정하고 추계한다.

26) 이 수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반 편제인원으로 재학생을 계산했을 시 비율이다. KEDI의 2024년 재학생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11.07%이다.

27) 이 수치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편제인원 기준으로 재학생을 계산했을 때의 비율이며, KEDI의 2024년 재학생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7.17%이다.

〈표 VII-6〉 국가장학금 I 유형 9구간 기 신청 인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구간	207,064	225,639	238,002	223,265

자료: 한국장학재단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전체 대학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지원구간별 인원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대학 입학생 증위추계를 바탕으로 재학생 수를 계산하여 2030년과 2035년 국가장학금 I 유형 혜택을 받는 연간 인원을 추계한 결과는 〈표 VII-7〉과 같다. 2024년 기준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수인 약 77만명과 비교했을 때 만약 1~8구간만 수급하는 제도가 존속되었다면 2030년에는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수가 약 1만 8천명이 증가하여 79만명에 육박했다가 2035년에는 약 72만명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2025년부터 신규로 9구간 학생이 추가적으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정책이 2035년까지 유지된다면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표에서 보이듯이 2030년에는 약 98만명, 2035년에는 약 90만명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수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I-7〉 국가장학금 I 유형 2030년과 2035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 추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인원 비율 :2024년	2030년	2035년
기초	2.80	39,485	36,234
차상위	3.51	49,359	45,295
1구간	6.46	90,951	83,462
2구간	5.27	74,187	68,078
3구간	5.78	81,372	74,672
4구간	5.60	78,849	72,356
5구간	2.86	40,213	36,901
6구간	8.24	115,926	106,381
7구간	5.09	71,624	65,726
8구간	10.57	148,744	136,496
9구간(추정)	13.5	190,088	174,436
10구간	-	-	-
합계	56.16	980,796	900,038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VII-7〉에서 추정된 2030년과 2035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수혜 예상인원과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금액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급총액을 추정한다. 지급총액 추계를 이상의 두 가지 적용하여 각각의 경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은 2024년의 1인당 지원금액이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안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목 지원금액의 변화가 없으며, 비정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만 금액이 조정된다. 따라서 첫 번째 방안(명목 지원금액 유지안)에서는 2024년의 명목 1인당 지원금액이 고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는 2024년의 1인당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4%씩 지원금액이 인상된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 가정에 4%의 인상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상승률이 5.7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두 수치의 평균을 내면 약 4%이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4%의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경우 정책 변화가 없을 시에는 명목 지원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종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액이 일정 수준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이 방안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급 총액을 계산하는 [수식 2]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2030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급총액을 계산할 경우, 먼저 2024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을 확인한다.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비율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평균 지원단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므로, 연간 예상 상승률로 4%의 상승률을 채택하여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급총액을 계산하였다.

[수식 2]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급총액

$$2024\text{년 기준 } 1\text{인당 평균 지원 금액} \times (1.04)^{\text{해당연도} - 2024} \\ \times \text{구간별 지원 인원} = \text{해당연도 예상 총 지급액}$$

예를 들어 2030년은 2024년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에 연 4% 상승률의 6제곱을 적용하여 2030년의 1인당 예상 지원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에 구간별 지원인원을 곱하여 2030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명목 지원금액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작성한 재정추계는 <표 VII-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계에 따르면 1인당 명목지원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 2030년에 약 2조 8,777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2035년에는 2조 6,407억원을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원금액 연간 4% 상승을 가정한 안에 따라 추계한 <표 VII-9>를 확인하면 2030년에 약 3조 6,412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2035년에는 4조 653억원을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처럼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지원대상 9구간 학생으로의 확대됨에 따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추가되는 수혜인원이 많아 전체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8>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가장학금 I 유형 총 지급액의 5.8%가 9구간 학생에게 지급되며, 2035년에는 이 비율이 동일하게 5.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VII-8〉 국가장학금 I 유형 총 지급액 추계(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단위: 원, %, 억원)

구분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상승률	2024년 총 지급액	2030년 예상 총 지급액	2035년 예상 총 지급액
기초	4,497,871	4,694,190	4.36	1,802	1,854	1,701
차상위	4,637,903	4,856,564	4.71	2,331	2,397	2,200
1구간	3,662,314	3,935,663	7.46	3,480	3,580	3,285
2구간	3,691,068	3,965,730	7.44	2,860	2,942	2,700
3구간	3,682,674	3,958,476	7.49	3,132	3,221	2,956
4구간	2,793,345	3,008,572	7.70	2,307	2,372	2,177
5구간	2,742,859	2,959,931	7.91	1,157	1,190	1,092
6구간	2,839,049	3,066,609	8.02	3,456	3,555	3,262
7구간	2,550,941	2,571,537	0.81	1,791	1,842	1,690
8구간	2,611,669	2,637,596	0.99	3,815	3,923	3,600
9구간(추정)	-	1,000,000	-	1,898	1,688	1,549
10구간	-	-	-	-	-	-
평균	3,370,969	3,334,045	5.75%	-	-	-
합계	-	-	-	28,018	28,777	26,407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Ⅷ-9〉 국가장학금 I 유형 총 지급액 추계(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단위: 원, %, 억원)

구분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상승률	2024년 총 지급액	2030년 예상 총 지급액	2035년 예상 총 지급액
기초	4,497,871	4,696,984	4.43%	1,803	2,345	2,618
차상위	4,637,903	4,860,248	4.79%	2,332	3,033	3,386
1구간	3,662,314	3,937,600	7.52%	3,482	4,529	5,057
2구간	3,691,068	3,967,472	7.49%	2,862	3,723	4,156
3구간	3,682,674	3,960,146	7.53%	3,133	4,076	4,550
4구간	2,793,345	3,010,102	7.76%	2,308	3,002	3,351
5구간	2,742,859	2,961,160	7.96%	1,158	1,506	1,681
6구간	2,839,049	3,068,321	8.08%	3,458	4,498	5,022
7구간	2,550,941	2,573,119	0.87%	1,792	2,331	2,602
8구간	2,611,669	2,639,347	1.06%	3,818	4,964	5,542
9구간(추정)	-	1,000,000	-	1,898	2,136	2,385
10구간	-	-	-	-	-	-
평균	2,809,141	3,334,045	5.75%	-	-	-
합계	-	-	-	28,044	36,412	40,653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다자녀장학금 또한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인원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학생 수를 추계한 수는 <표 VII-10>과 같다. 2024년을 기준으로 다자녀장학금은 전체 수혜자 수 대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구간과 8구간에서 약 20.28%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VII-10〉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1인당 평균 지원금액

(단위: 명, %, 원)

구분	인원	전체 수혜자 대비 비율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인원 비율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기초	9,869	4.50	0.71	4,852,942
차상위	14,731	6.72	1.06	5,066,136
1구간	28,990	13.23	2.09	4,671,537
2구간	21,172	9.66	1.53	4,599,853
3구간	21,968	10.03	1.59	4,565,027
4구간	21,365	9.75	1.54	4,110,685
5구간	10,757	4.91	0.78	4,017,508
6구간	31,073	14.18	2.24	4,129,035
7구간	19,279	8.80	1.39	3,959,440
8구간	39,888	18.21	2.88	4,034,551
9구간	-	-	-	-
10구간	-	-	-	-
평균	21,909	9.09	1.58	4,530,180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다자녀장학금 또한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2025년부터 9구간 신청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먼저 2024년 다자녀장학금 신청자 수를 확인하였다 (<표 VIII-11> 참조). 1~8구간 수혜자의 경우 2024년 실제 수혜자 자료를 이용하였다. 9구간 수혜자의 경우 2024년에는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예상 수혜인원을 계산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였다. 먼저 장학재단에서 제공한 9구간에 해당되는 신청자 수를 토대로 신청자 대비 83%의 인원이 실제로 장학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수혜자 수와 전체 수혜자 대비 비율을 계산하였다. 2024년에의 장학재단

DB에서 다자녀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신청자가 4만 4,653명으로 집계되었다.

2025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인원이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83%에 해당하는 3만 7,061명이 실제로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를 수행하여 <표 VII-12>에 정리하였다.

<표 VII-11> 다자녀장학금 9구간 기 신청인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구간	41,413	45,128	47,600	44,653

자료: 한국장학재단

이렇게 계산한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비율을 이용하여, 앞서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수행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1인당 지원 금액에 대한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 방안에 대하여 각각 추계를 진행하였다.

<표 VII-12> 다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 추계

(단위: 명)

구분	2024년	2030년	3035년
기초	9,869	10,030	9,204
차상위	14,731	14,971	13,738
1구간	28,990	29,462	27,036
2구간	21,172	21,517	19,745
3구간	21,968	22,326	20,488
4구간	21,365	21,713	19,925
5구간	10,757	10,932	10,032
6구간	31,073	31,579	28,979
7구간	19,279	19,593	17,980
8구간	39,888	40,538	37,200
9구간(추정)	37,061	38,018	34,887
10구간	-	-	-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인당 지급하는 다자녀장학금 단가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 명목 지원 금액 유지안의 추계 결과는 <표 VII-13>에 정리하였다. 2030년에 약 1조 410억원이, 2035년에는 9,553억원이 다자녀장학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연간 1인당 지급단가의 상승을 가정한 두 번째 방안의 추계 결과는 <표 VII-14>에 정리하였다.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1조 3,172억원이, 2035년에는 1조 4,706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유형을 합한 총 지급액을 지급금액에 대한 가정에 따른 방안 별로 정리한 것이 <표 VII-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I-15>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방안별 추계를 보여주는데,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의 경우 2024년 3조 8,317억원에서 2030년 3조 9,18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35년 3조 5,96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의 경우 2024년 3조 8,137억원에서 2030년 4조 9,584억원, 2035년 5조 5,539억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35년 기준 두 방안 간 약 1조 9,399억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I-13〉 다자녀장학금 총 지원금액 추계(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단위: 원, %, 억원)

구분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상승률	2024년 총 지급액	2030년 예상 총 지급액	2035년 예상 총 지급액
기초	4,774,599	4,852,942	1.72%	479	493	452
차상위	4,930,571	5,066,136	2.82%	746	768	705
1구간	4,451,711	4,671,537	5.00%	1,354	1,393	1,279
2구간	4,371,838	4,599,853	5.30%	974	1,002	920
3구간	4,342,945	4,565,027	5.16%	1,003	1,032	947
4구간	3,933,671	4,110,685	4.55%	878	904	829
5구간	3,830,718	4,017,508	4.95%	432	445	408
6구간	3,954,873	4,129,035	4.46%	1,283	1,320	1,211
7구간	3,948,538	3,959,440	0.32%	763	785	721
8구간	3,982,283	4,034,551	1.38%	1,609	1,656	1,520
9구간	-	1,610,000	-	597	612	562
10구간	-	-	-	-	-	-
평균	3,543,477	4,146,974	3.50%	-	-	-
합계	-	-	-	10,119	10,410	9,553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Ⅷ-14〉 다자녀장학금 총 지원금액 추계(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단위: 원, %, 억원)

구분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상승률	2024년 총 지원액	2030년 예상 총 지원액	2035년 예상 총 지원액
기초	4,774,599	4,852,942	1.72%	479	624	696
차상위	4,930,571	5,066,136	2.82%	746	972	1,085
1구간	4,451,711	4,671,537	5.00%	1,354	1,763	1,969
2구간	4,371,838	4,599,853	5.30%	974	1,268	1,416
3구간	4,342,945	4,565,027	5.16%	1,003	1,306	1,458
4구간	3,933,671	4,110,685	4.55%	878	1,143	1,277
5구간	3,830,718	4,017,508	4.95%	432	563	628
6구간	3,954,873	4,129,035	4.46%	1,283	1,670	1,865
7구간	3,948,538	3,959,440	0.32%	763	994	1,110
8구간	3,982,283	4,034,551	1.38%	1,609	2,095	2,339
9구간	-	1,610,000	-	597	774	865
10구간	-	-	-	-	-	-
평균	3,543,477	4,146,974	3.50%	-	-	-
합계	-	-	-	10,119	13,172	14,706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Ⅷ-15〉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장학금 방안별 총 지급액

(단위: 억원)

구분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총 지급액 추계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총 지급액 추계		
	2024년	2030년	2035년	2024년	2030년	2035년
기초	2,280	2,346	2,153	2,280	2,969	3,315
차상위	3,076	3,165	2,904	3,076	4,005	4,471
1구간	4,833	4,973	4,564	4,833	6,292	7,025
2구간	3,833	3,944	3,619	3,833	4,991	5,572
3구간	4,133	4,253	3,903	4,133	5,381	6,008
4구간	3,184	3,276	3,006	3,184	4,145	4,628
5구간	1,589	1,635	1,500	1,589	2,069	2,310
6구간	4,738	4,875	4,474	4,738	6,169	6,887
7구간	2,553	2,627	2,411	2,553	3,324	3,712
8구간	5,422	5,579	5,120	5,422	7,059	7,882
9구간	2,495	2,513	2,306	2,495	3,180	3,550
10구간	-	-	-	-	-	-
합계	38,137	39,187	35,960	38,137	49,584	55,359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법 변화 시 재정추계(소득평가액 기준)

현재 국가장학금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점 요건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때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은 월 환산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다. 월 환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값이다. 월 소득평가액은 소득공제액을 빼고 계산하며 가구의 근로소득에는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등이 사업소득에는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이,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월)

= ① 소득 평가액(월)+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월 소득 환산율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2)×1인당 공제액(4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 대상 아님)

그런데 최근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전에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던 학생들의 가구소득이나 경제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경우가 발생하였다.²⁸⁾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부채가 적어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탈락하거나, 반대로 해외 재산이나 차명 재산이 있는 가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재산을 반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하여²⁹⁾ 국가장학금 산정방식에서 재산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소득으로만 평가해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해 왔다.

28) 『매일경제』, 「부모월급 그대로인데 이것 올랐다고... 7만명 못 받았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26066?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1. 27.

29) 『연합뉴스』, 「소득 잘못됐어요...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재산정 한해 1만 7천명」,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6181400004?input=copy>, 검색일자: 2025. 1. 27.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던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을 월 환산 소득인정액이 아닌 월 소득평가액에 다자녀공제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재산에 대한 고려 제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재정 소요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월 소득평가액과 다자녀공제만을 적용하여 수혜자를 선정한 경우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예상 수혜 추정 인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표 VII-16>에 제시하였다. 1~8구간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학자금 지원구간에 속한 수혜자의 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상 수혜인원을 추정할 때도 현행 제도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했을 때와 동일한 수혜자 수를 사용하였다.

<표 VIII-16>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예상 수혜인원

(단위: 명)

구분	소득과 다자녀공제만 적용 시 예상 수혜 추정인원
기초	48,244
차상위	62,702
1구간	199,452
2구간	146,632
3구간	132,283
4구간	121,466
5구간	56,747
6구간	154,818
7구간	75,122
8구간	102,607
9구간	223,265
10구간	-
총합계	1,323,338

자료: 한국장학재단

이처럼 소득평가액 기준만으로 국가장학금 수급 자격을 평가할 경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인원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수치를 토대로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전체 재학생 대비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 비율을 계산하고, 2030년과 2035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를 추계하여 <표 VII-17>에 정리하였다.

<표 VII-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경된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를 추계하였을 때에는 전체 재학생 136만 8,472명 가운데 약 96%가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현행 제도하의 약 56% 수혜율을 훌쩍 넘는 수치다. 다만 이때 모수가 되는 전체 재학생 인원 136만 8,472명이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인원은 연도별 예상 입학인원의 합산 값이며, 휴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대학 교육이 사실상 보편 교육 수준으로 확대되는 제도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Ⅶ-17〉 2030년과 2035년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수혜자 수 추계(소득평가액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는 비율: 2024년	2030년	2035년
기초	3.53	49,640	45,552
차상위	4.95	64,516	59,204
1구간	14.57	205,222	188,324
2구간	10.72	150,874	138,451
3구간	9.67	136,110	124,902
4구간	8.88	124,980	114,689
5구간	4.15	58,389	53,581
6구간	11.31	159,297	146,180
7구간	5.49	77,295	70,931
8구간	7.50	105,575	96,882
9구간(추정)	16.31	229,724	210,808
10구간	-	-	-
합계	96.70	1,361,619	1,249,504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재산 정보를 제외한 월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재정소요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1인당 평균 지원금액에 대한 가정은 기존의 소득인정액 기준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명목금액 동결(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가정과 명목금액 4% 상승안 가정에 대해 추계를 진행하였다.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의 경우 2030년에는 총 4조 7,202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며 2035년에는 합계 4조 4,316억원의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예상된다. 매년 4% 상승안의 경우 2030년에는 총 5조 9,726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며, 2035년에는 합계 6조 6,682억원의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예상된다.

〈표 Ⅵ-18〉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때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장학금 총 지급액 추계(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단위: 원, %, 억원)

구분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상승률	2024년 총 지급액	2030년 예상 총 지급액	2035년 예상 총 지급액
기초	4,563,929	4,726,665	3.57	2,280	2,346	2,153
차상위	4,712,176	4,905,800	4.11	3,076	3,165	2,904
1구간	3,863,159	4,117,400	6.58	8,212	8,450	7,754
2구간	3,848,312	4,109,670	6.79	6,026	6,200	5,690
3구간	3,826,448	4,090,336	6.90	5,411	5,567	5,109
4구간	3,045,323	3,248,851	6.68	3,946	4,060	3,726
5구간	2,980,841	3,188,193	6.96	1,809	1,862	1,708
6구간	3,081,209	3,296,279	6.98	5,103	5,251	4,819
7구간	2,857,420	2,872,557	0.53	2,158	2,220	2,038
8구간	2,908,867	2,939,693	1.06	3,016	3,104	2,848
9구간(추정)	-	2,610,000	-	4,837	4,977	4,567
10구간	-	-	-	-	-	-
평균	3,568,768	3,645,949	2.16	-	-	-
합계	-	-	-	45,875	47,202	43,316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표 VII-19〉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때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장학금 총 지급액 추계(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단위: 원, %, 억원)

구분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상승률	2024년 총 지급액	2030년 예상 총 지급액	2035년 예상 총 지급액
기초	4,563,929	4,726,665	3.57	2,280	2,969	3,315
차상위	4,712,176	4,905,800	4.11	3,076	4,005	4,471
1구간	3,863,159	4,117,400	6.58	8,212	10,692	11,937
2구간	3,848,312	4,109,670	6.79	6,026	7,846	8,759
3구간	3,826,448	4,090,336	6.90	5,411	7,044	7,865
4구간	3,045,323	3,248,851	6.68	3,946	5,138	5,736
5구간	2,980,841	3,188,193	6.96	1,809	2,355	2,630
6구간	3,081,209	3,296,279	6.98	5,103	6,644	7,418
7구간	2,857,420	2,872,557	0.53	2,158	2,809	3,137
8구간	2,908,867	2,939,693	1.06	3,016	3,927	4,384
9구간(추정)	-	2,610,000	-	4,837	6,297	7,030
10구간	-	-	-	-	-	-
평균	3,568,768	3,645,949	2.16	-	-	-
합계	-	-	-	45,875	59,726	66,682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표 VII-20〉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간의 차액(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30년	2035년
소득평가액 기준	46,866	47,202	43,316
소득인정액 기준	38,137	39,187	35,960
차액	8,729	8,016	7,356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VII-21〉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간의 차액(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30년	2035년
소득평가액 기준	45,875	59,726	66,682
소득인정액 기준	38,137	49,584	55,359
차액	7,738	10,142	11,323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소득인정액 기준과 소득평가액 기준 간의 국가장학금 지급총액과 두 가지 기준 간의 차액의 2024년부터 2035년까지의 추정치를 <표 VII-20>에 정리하였다.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을 가정한 <표 VII-21>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인 소득인정액 제도하의 재정지출은 표의 2행에서 볼 수 있듯이 2024년 약 3조 7,555억원에서 2030년 약 4조 7,578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35년에는 약 5조 3,210억원으로 증가한다. <표 VII-21>의 1행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평가액 제도하의 재정지출은 2024년 약 4조 2,768억원에서 2030년 약 6조 4,538억원, 2035년 약 7조 2,05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지출 확대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두 제도하의 지출금액의 차액은 2024년 약 5,213억원에서 2030년 약 1조 6,960억원, 2035년에는 약 1조 8,935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소득평가액으로 변경할 경우, 명목지급액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에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대비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178%와 135%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명목지급액이 4% 증가하는 두 번째 방안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비교할 때 소득평가액 기준 사용 시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225%와 263%의 재정 소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 부담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할 때, 재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소득평가액 기준으로의 전환은 재정적으로 매우 급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재정추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요 재정을 상당히 과소추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추계에서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장학금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II 유형 또는 지역인재장학금 등 기타 사업까지 포함되는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재정추계는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으로 변경 시 수혜받을 인원을 2024년 1학기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추계에서 사용된 1년간 순수혜인원은 1학기 수혜인원과 2학기 수혜인원을 더한 후 중복수혜인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소득평가액 추계에서는 1학기 인원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혜인원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면 재정 소요액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소추정 요인을 언급하고자 한다.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변경 시 예상되는 수혜인원의 데이터는 한국장학재단에 한 번이라도 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부모님의 부동산 보유 등의 재산 보유로 국가장학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DB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장학금 지급액 방식이 소득평가액으로 변환된다면, 예를 들어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부

모님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이 대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추계에는 이러한 인원은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상 수혜인원이 상당히 과소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학생들까지 추가하게 되면 소득평가액으로 변경 시 재학생의 85%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하후상박형으로 제도 설계 변화 시 재정추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장학금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지급하는 경우, 재정추계 결과 현행 제도인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대비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2025년부터는 많은 인원에게 대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며, 이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업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재정 효율화와 소득이동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양호한 가구의 지원률을 낮추고,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재정을 집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림 V-5]에 나타난 구간별 소득 대비 실부담율을 보면, 오히려 소득 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더 높은 등록금 실부담율을 지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구간의 학생들은 등록금 실부담율이 낮은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가구에 재원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후상박형 재정지원의 경우 재원을 배분하는 비율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텐데, 본 평가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눈 후 각각의 구간에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세 구간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까지, 그리고 4구간부터 6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7구간부터 9구간을 각각 한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첫 구간에는 최대 지원금액 대비 평균 지원금액을 75%로 높이고, 중간 구간에는 최대 지원금액 대비 평균 지원금액을

70%로, 그리고 가장 상위구간에는 55%로 임의로 설정한 예시를 토대로 추계를 진행하였다. 추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표 VIII-22>와 같이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최대 지원금액에서 평균 지원금액을 나눈 비율을 이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최대 지원금액 대비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의 (5)열에는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정리되어 있고, 표의 (6)열에는 해당 구간별 평균 지원액이 해당 학자금 지원구간의 최대 지급액 대비 비율이 계산되어 있다. 표의 (7)열에는 앞서 언급한 세 구간 별 평균 지급액 비율이 계산되어 있다. 이 수치를 보면 가장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에서는 평균적으로 최대 지급액 대비 69.36%의 액수가 지급되며, 중간 학자금 지원구간에는 71.71%가, 그리고 가장 높은 학자금 지원구간에서는 82.94%가 지급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가장학금의 사회적 이동성을 증대하는 본 취지에 맞게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구간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높은 구간에는 지원액수를 줄이는 하후상박형 제도 하의 재정추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8)열에 정한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지원금액 대비 실질지급액의 평균 비율을 가장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부터 각각 75%, 70%, 55%로 가정하여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그에 대한 재정추계 값을 제시한다. 재정추계 결과는 <표 VIII-23>에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하의 두 가지 재정추계안인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과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과 하후상박형 안의 재정추계 비교는 <표 VIII-24>에 정리하였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현재 제도 대비 하후상박형 제도하에서 총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지원금액은 현행안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가구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6구간에 해당하는 중위층에 속한 가구는 지원금액 비율이 약간 낮아지며, 학자금 지원구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7~9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지원금액과 총 재정지출 규모는 모두 감소한다. 종합하면 재정 부담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고, 현행 제도가 그 중간이며, 하후상박 제도 중 75%, 70%, 55%를 가정한 경우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부담과 계층 이동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은 향후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 하후상박 분석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학교의 등록금이 평균적으로 15년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최대지원액 대비 평균 지원금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까지는 80%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대학교

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기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지원액 대비 평균 지원금액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임의로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대비 실지금액의 평균 비율을 75%, 70%, 55%로 가정하였으나, 이 비율이 변동된다면 재정지출의 상대적 규모 역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장학금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고려와 재정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도하에서 재정 추계를 수행하였다. 추계 결과 재정지출 규모는 소득인정액 기준 제도가 가장 크고, 현행 제도가 그 다음이며, 하후상박형(75%-70%-55%) 제도가 가장 작았다. 특히 하후상박형 제도는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제도의 목표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하후상박형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소득인정액 제도와 소득평가액 제도 간의 큰 재정지출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소득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재정지출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하후상박형 제도처럼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 비율에 큰 차등을 두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진영 외(202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학금 산정에 사용할 소득의 유형과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표 Ⅵ-22〉 하후상박형 제도로 재설계를 위한 국가장학금 I 유형 내용 확인

(단위: 원, %)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2024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대비 지원금액	평균	하후 상박형	하후상박형 1인당 평균 지원금액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전액	4,694,190	-			4,694,190
	차상위계층	전액	전액	4,856,564	-			4,856,564
	1구간(다자녀포함)	2,850,000	5,700,000	3,935,663	69.05	69.36	75	4,275,000
	2구간(다자녀포함)	2,850,000	5,700,000	3,965,730	69.57			4,275,000
	3구간(다자녀포함)	2,850,000	5,700,000	3,958,476	69.45			4,275,000
	4구간	2,100,000	4,200,000	3,008,572	71.63			2,940,000
	5구간	2,100,000	4,200,000	2,959,931	70.47	71.71	70	2,940,000
	6구간	2,100,000	4,200,000	3,066,609	73.01			2,940,000
	7구간	1,750,000	3,500,000	2,571,537	73.47			1,925,000
	8구간	1,750,000	3,500,000	2,637,596	75.36	82.94	55	1,925,000
	9구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			550,000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표 VII-23〉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 하후상박형 방안 총 지급액 추계

(단위: 억원)

구분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 총 지급액 추계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 총 지급액 추계		
	2024년	2030년	2035년	2024년	2030년	2035년
기초	2,280	2,346	2,153	2,280	2,969	3,315
차상위	3,076	3,165	2,904	3,076	4,005	4,471
1구간	5,018	5,163	4,738	5,018	6,533	7,294
2구간	3,987	4,103	3,765	3,987	5,191	5,796
3구간	4,320	4,445	4,079	4,320	5,624	6,279
4구간	2,971	3,057	2,805	2,971	3,868	4,318
5구간	1,510	1,554	1,426	1,510	1,966	2,196
6구간	4,356	4,482	4,113	4,356	5,672	6,332
7구간	1,817	1,870	1,716	1,817	2,366	2,641
8구간	3,770	3,879	3,560	3,770	4,908	5,480
9구간	1,294	1,328	1,218	1,294	1,680	1,876
10구간	-	-	-	-	-	-
합계	34,401	35,392	32,478	34,401	44,783	49,999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VII-24〉 명목 지원금액 유지안과 하후상박형 방안에서의 차액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30년	2035년
하후상박형 합계	34,401	35,392	32,478
현행 제도 합계	38,137	39,187	35,960
차액	3,736	3,794	3,482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VII-25〉 평균 지원금액 4% 상승안과 하후상박형 방안에서의 차액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30년	2035년
하후상박형 합계	34,401	44,783	49,999
현행 제도 합계	38,137	49,584	55,359
차액	3,736	4,801	5,360

자료: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VIII. 정책제언

1. 국가장학금

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방식

국가장학금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고, 사회이동성을 개선한다는 <표 V-7>~<표 V-10>의 결과는 국가장학금이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클수록 첫 직장 및 현재 직장의 월급이 더 높고, 사회 이동성도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처럼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 V-4>의 결과와 [그림 V-5]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구간 학생들의 등록금 실부담율이 가장 높은 점, 그리고 <표 V-1>, <표 V-2>와 <표 V-4>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액이 증가하고 장학금 수혜금액이 많을수록 대출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아직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장학금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성과와 사회이동성 제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장학금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앞선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장학금 수혜에 따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9구간 확대와 같은 단순한 지급 대상의 확장보다는 중·고소득 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일부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장학금 제도로의 개편이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장학금 제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재정추계 결과 하후상박형 제도하에서 전체 재정지출은 감소하나, 저소득층 지원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지원은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예시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크게 3개로 나누어(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 그리고 4~6구간, 마지막으로 7~9구간을 각각 한 구간으로 분류), 각각 최대 지원금 대비 평균 지원액 비율을 75%, 70%, 55%로 임의로 설정한 하후상박형 제도를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추계를 진행한 제도 중 재정지출 규모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가장 크고, 현행 제도는 중간, 하후상박형(75%-70%-55%)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의 명목지급액이 4%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방식은 현행 제도보다 1조 6,96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본 연구에서 가정한 75%-70%-55% 하후상박형 방식은 현행 제도보다 4,6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15년 동안 등록금을 거의 동결했던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을 인상하였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평균 지원액 비율도 상승할 수 있어 하후상박형에서도 향후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하후상박형 제도 역시 앞서 김진영 외(2020)에서 나타난 어떤 소득을 장학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당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심층평가에서 자료의 한계로 국가장학금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사이의 비교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현재의 비수혜집단이 재정 제약으로 인한 대학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중 일부를 수혜자로 전환하는 방식의 재정운용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보다 수혜집단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한편으로,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소득인정액 조정

이를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의 조정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할 때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월평균 소득이 낮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더 높은 다른 가구보다 높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DB를

활용하여 폭넓은 평가를 진행한 김진영 외(2020)에서 실제 소득³⁰⁾은 1구간이지만 소득인정액으로는 8구간에 속하는 비율이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반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자녀의 대학 졸업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가구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환산하는 산식을 조정하거나 구간별 경계값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산에 관한 고려를 차치하더라도 과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간이 실제 가구의 소득분포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김진영 외(2020)는 국가장학금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중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포가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였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평가한 학자금 지원구간과 실제 장학금은 신청하는 학생이 속하는 집단의 소득분포와 괴리가 발생하며, 더 높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김진영 외(2020)는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자료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6구간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기준으로 2구간을 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시하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8구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실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는 6구간, 대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3구간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소득이 높은 시기에 있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구간의 경계값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학금액의 결정은 잠재적인 장학금 지원자인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평가액이나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앞선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등록금 실부담 등록금액이 다른 구간보다 높고, 대출도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이는 1구간에 대한 장학 금액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뚜렷한 근거 없이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등록금액이 소득의 5% 이상인 가구'와 같이 소득분포와 연계된 근거를 바탕으로 수혜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0) 김진영 외(2020)는 국가장학금 DB에 나타난 자산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제외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하였고, 이를 실제 소득과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Ⅶ장의 국가장학금 사업군 지속가능성 검토에 따르면 자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2025년부터 장학금 수혜 지원구간이 9구간까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한다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앞서 <표 Ⅶ-6>을 토대로 서술한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편제 인원 대비 16.3%를 차지하고 있어, 장학금 수혜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타 구간에 비해 9구간 학생의 장학금 상한액은 현재 100만원으로 제한적이지만, 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구간까지 지원이 확대될 경우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은 8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만약 추후 장학금 상한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다면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표 Ⅶ-7>에서 전체 대학생 대비 수혜자 비율을 바탕으로 2030년과 2035년의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 수를 추정한 결과, 9구간 수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Ⅶ-22>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별 1인당 국가장학금 I 유형 최대지원금액 대비 평균지원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에서 2024년 기준 실제 가장 낮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69.36%, 중간 학자금 지원구간에서는 71.71%, 그리고 가장 높은 학자금 지원구간에서는 82.94%가 지급되었다. 이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라는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괴리된 결과로, 9구간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그 경계값을 조정해서 9구간의 수혜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 Ⅶ-7>에서 추정된 9구간 수혜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정도의 경계값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장학금

현행 근로장학금 제도는 중앙집중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각 대학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며, 학생의 특성과 진로방향에 입각하여 다양한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근로장학금을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이 자체적으로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과 근무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 및 학생의 진로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이 강한 대학은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형 근로장학 활동을, 인문사회계열 중심의 대학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면이 학생의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이 산업체와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다양한 근로기회를 창출하여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장학 제도가 단순히 근로 경험을 넘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탐색과 실무역량 강화의 기회로 작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동시에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장학생과 근로기관의 만족도, 학생과 근로기관과의 취업연계성, 전공 관련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학 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우수장학금

가.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

첫째,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이 우수학생을 지원한다는 성격을 보다 부각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장학금으로서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성격이 모두 있다. 다만 우수학생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도록 제도를 홍보한다면 장학생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장학금 명칭을 현행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에서 가칭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장학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장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급별 장학금 지원금액 등의 확대를 위해 꿈사다리장학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장학생 지원 대비 선발자 경쟁률이 3:1에 달하는 지원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발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025년 예산 기준, 장학금 보조율은 출연금 56.9%, 원금보전성 기금 운용수익 43.1%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금보전성 기금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75억원씩 출연하여 조성된 3,50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추가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향후 누적 장학생 규모 추이, 사업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

적으로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의 적정 재원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므로, 조기 개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초·중등교육 단계로 확대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속세 등 일반회계 중 일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속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통한 교육격차 심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고려해볼 만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확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학업 의지와 성취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취업 혹은 창업을 장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학업을 장려하는 목적을 지닌 사업군 내 여타 장학사업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이지만 산업정책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은 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재정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경우 정책적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정책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국가우수장학금

본 연구에서는 수혜 규모와 지원금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평가하였지만, 국가장학금의 정책 효과성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성과지표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고등교육 투자가 인적자본의 형성과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동태적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학업성취도와 취업률, 임금수준, 직업안정성 등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종단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이 이뤄진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교육투자에 대한 행태의 변화, 소비 및 저축 패턴 양상, 그리고 이러한 행동양식이 세대 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미시적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성과지표는 학자금 지원구간별뿐만 아니라 대학의 유형별, 전공계열별로 세분화하여 조사설계함으로써 항목별로 정책효과의 이질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순효과를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은 다차원적 수준의 성과지표 구축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높은 신뢰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한정된 국가의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I-1〉 국가장학금 사업군의 평가내용 및 정책제언

사업명	평가결과	정책제언
국가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 개선 • 장학금이 등록금 실무담 감소로 이어지지만,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실무담이 높은 현상이 나타남 • 장학재단의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자금 지원 구간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출액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수요가 더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의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비형 장학금제도로 개편할 필요 • 소득인정액 환산 산식을 조정하거나 소득구간 경계값 조정 방안 고려 필요
근로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금은 노동시장 성과는 사회이동성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는 형태의 장학사업 운영 •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학 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등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꿈사다리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사업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경쟁률도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추후 성과가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사다리장학사업이 우수학생을 지원한다는 성격 부각, 중장기적으로 적정 재원 규모 검토 필요
희망사다리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경우 교육적 취지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산업정책적 성격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부로 이관 검토
국가우수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및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급으로 여학생의 이공계 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공계 학부에서 국가우수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고, 산학연에 진출한 비중도 높아 의무중사제도가 계획한 대로 작동하고 있음 • 인문계 및 예술체육유전장학금 또한 학업 지속률의 증가와 실수요자인 학생도 경제적 안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이 취·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우수장학금의 성과평가 지표 구체화 • 중장기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마련 필요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1.
- 구인회·김정은,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3호, 2015, pp. 27~49.
-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2023.
- 김진영·송헌재, 『국가장학금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2020.
- 남수경, 「대학생 장학금정책의 효과 분석(II): 국가장학금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20, pp. 57~84.
- _____, 『국가장학금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2025.
- 남수경·민세진·이희숙·홍우형, 『대학 자율혁신과 청년 교육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실행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2023.
- 양정승·채창균·이찬영, 『학자금 대출과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이정미,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4.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진로 현황 조사 결과보고』, 2022. 7. 12.
- 한유경·김진영·남수경·박주병·이희숙·김훈호,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부지원 장학금 체제 개편 정책연구』, 한국장학재단, 2021.
- 한유경·박상완, 「드림장학사업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이슈페이퍼」, 한국장학재단, 2015.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rump’s executive orders shift higher education landscape,” Retrieved from <https://www.acenet.edu/News-Room/Pages/Trump-EOs-Shift-Higher-Education-Landscape.aspx>, 2025. 1. 27.
- Atherton, G. Lewis, D. J., & Bolton, P., “Higher Education in the UK: Systems, Policy Approaches, and Challenge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4.
- Australian Government, “2024 Commonwealth Supported Places and HECS-HELP Information,” www.studyassist.gov.au, 2024.
- Australian Government, “2024 FEE-HELP Information,” www.studyassist.gov.au, 2024.
- Bontrager, B., “Enrollment management: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structures,” *College and University*, 2024, 79(3), pp. 11~16.

- Bound, J., Braga, B., Khanna, G., & Turner, S., "Public universities: The supply side of building a skilled workforce,"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5(5), 2019, pp. 43~66.
- Burd, S. J., "Yes, the enrollment management industry is harming higher ed. Inside Higher Ed," Retrieved from <https://www.insidehighered.com/opinion/views/2024/07/29/enrollment-management-industry-harms-higher-ed-opinion>, 2024.
- College Board, "Pell Grants and Purchasing Power Over Time," Retrieved from <https://public.tableau.com/app/profile/jonboeckenstedt/viz/PellPowerOverTime/TheStoryofPell>, 2014.
- Colorado, J., Laderman, S., & McCoy-Simmons, C., "State tuition, fees, and financial assistance policies 2022," State Higher Education Officers Association, <https://sheeo.org/project/tuition-and-fee-survey/>, 2023.
- D'amato, P., "Tuition freezes cool prices for some while affecting financial aid," The Hechinger Report, Retrieved from <https://hechingerreport.org/tuition-freezes-cool-prices-for-some-while-affecting-financial-aid/>, 2021. 9. 3.
- Department for Education,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e for the 2024 to 2025 Academic year: Equality Impact Assessment," 2024.
- Dortch, C., "Federal Pell Grant Program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im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R45418>, 2024.
- Goodman, J., & Volz, A. H., "Attendance spillovers between public and for-profit colleges: Evidence from statewide variation in appropriations for higher education," *Education Finance and Policy*, 15(3), 2023, pp. 428~456.
- Harnisch, T., Burns, R., Heckert, K., Kunkle, K., & Weeden, D., "State priorities for higher education in 2024," State Higher Education Executive Officers Association. 2024.
- Kelchen, R., "An analysis of student fees: The roles of states and institution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9(4), 2016, pp. 597~619, <https://doi.org/10.1353/rhe.2016.0027>.
- Knox, L., "A long way down the demographic cliff," Inside Higher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admissions/traditional-age/2024/12/11/college-age-demographics-begin-steady-projected-decline>, 2024. 12. 11.
- Lane, P., Falkenstern, C., & Bransberger, P., "Knocking at the college door,"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2024.

- Levine, P., "What is at stake for higher education und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Econofact, Retrieved from <https://econofact.org/what-is-at-stake-for-higher-education-under-a-second-trump-administration>, 2025. 1. 13.
- Ma, J., & Pender, M, "Trends in College Pricing and Student Aid 2024," College Board, 2023.
- NASFAA, "Issue brief: Doubling the maximum Pell Grant,"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Financial Aid Administrators, 2022.
-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nces.ed.gov/programs/digest/2024menu_tables.asp, 2024.
- Norton, A, "Mapping Australian higher education 2023," 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2023.
-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Transfer and Progress," Retrieved from <https://nscresearchcenter.org/transfer-and-progress/>, 2024. 2. 28.
- _____, "Measures of Effectiveness in Helpi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to Complete Bachelor's Degrees," Retrieved from [https://nscresearchcenter.org/tracking-transfer/#:~:text=Fewer%20than%20a%20third%20of,Data%20Update%20\(xlsx\)](https://nscresearchcenter.org/tracking-transfer/#:~:text=Fewer%20than%20a%20third%20of,Data%20Update%20(xlsx)), 2024. 4. 18.
- _____, "Yearly Progress and Completion," Retrieved from <https://nscresearchcenter.org/yearly-progress-and-completion/>, 2024. 12. 4.
-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 Office of Students(OfS), "Funding for Academic Year 2024-25: OfS Decisions," 2024.
- Perna, L. W., & Leigh, E. W, "Understanding the promise: A typology of state and local college promise programs," *Educational Researcher*, 47(3), 2018, pp. 155~180, <https://doi.org/10.3102/0013189X17742653>.
- U.S. Census Bureau, "Census Bureau Releases New Educational Attainment Data. U.S. Census Bureau," Retrieved from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23/educational-attainment-data.html>, 2023. 2. 16.
- UCU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HE shrinking," <https://qmucy.org/qmul-transformation/uk-he-shrinking/>, 2024. 12. 28.
- UK, "Higher Education Fees and Student Support for 2024/25: Details," 2024. 12. 28.
- UK, "Loan, Grant, and Tuition Fee Rates for Academic Year 2024/25, Memorandum: Support Available under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e Regulations for 2024/25," <https://www.practitioners.sl.c.o.uk/media/2037/20231215-financial-memorandum-for-202425-22524.pdf>, 2024. 12. 28.

Universities Australia, *2022 Higher Education Facts and Figures*, Universities Australia, 2022.

Zhao, B., *Disinvesting in the futur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state appropriations for public higher educ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New England Public Policy Center, 2018.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